

# 평화와 통일

Peace and unification



# 평화와 통일

창간호(제1집 1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평화와 통일

창간호(제1집 1호)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립통일교육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편집위원장	차문석
외부편집위원 (가나다순)	강구섭(전남대학교) 박소진(신한대학교) 송기찬(리츠메이칸대학교) 윤성욱(충북대학교) 이동기(강원대학교) 정병기(영남대학교) Cheehyung Harrison Kim(김지형)(하와이대학교)
편집위원 (가나다순)	권속도 김지영 김진환 민경태 박계리 이인정 정은찬 정진헌
편집간사	김윤정 지현성

---

발행인      백준기  
편집인      차문석  
발행처      국립통일교육원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주소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전화      02-901-7114, 02-901-7167  
Fax      02-901-7088  
Email      unicenter@unikorea.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목 차

---

발간사 ·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	4
창간호를 내며 · 편집위원회	6

---

## 특집기획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한 제언 · 문정인	15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감대화 -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 정병호	35

---

## 일반논문

1960년대 초반 서독정부의 대동독 교역정책 · 황규성	63
평화통일의식 측정도구 개발 - 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의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 박균열	103

---

## 해외기고

자본의 무의식으로서의 민족통일 · 박현옥	131
인간의 탈(脫)-분단 · 이타가키 류타(板垣 龍太)	149

---

## 리뷰

배반하는 역사 속에 피어난 사람의 역사 · 송기찬	163
통일 전망대 · 강수정	173

---

## 발간사

따스한 봄이 지나 여름의 초입으로 접어드는 5월의 끝자락에 국립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저널 「평화와 통일」의 창간호를 발행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는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보완·발전시켜나가기 위해 2020년 12월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국립통일교육원은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성 연구'라는 과제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는 통일교육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등 정책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평화와 통일,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성찰과 담론, 새로운 상상력과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저널 「평화와 통일」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정부와 학계·현장과의 교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생각의 그릇'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별·연령·지역·이념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

---

을 통해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평화와 통일」의 창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립통일교육원의 편집진과,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소속 교수진을 포함한 내외부 편집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평화와 통일」이 더욱더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31일

국립통일교육원장 백준기

---

## 창간호를 내며

2022년 5월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달입니다. 먼저 이번 5월에 국립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가 저널 『평화와 통일』의 창간호를 발행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2020년 말에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를 발족하였고, 연구센터는 2021년 12월 창간준비호를 거쳐서 이번 5월에 『평화와 통일』의 창간호를 정식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립통일교육원과 연구센터는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사회 통합, 대북 및 통일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관하여, 이념과 입장의 차이를 넘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들을 모으고 이어지게 만들고 퍼져 나가게 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5월은 국립통일교육원이 창립된 지 만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이제 반 세기의 역사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이 반 세기는 분단의 역사에 속하지만 동시에 그 분단을 극복하려는 지난한 노력의 역사에 속하기도 합니다. 50주년이 되는 올해 저널 『평화와 통일』이 창간되었다는 것은 통일교육의 장에 새로운 계기들을 생산하게 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들과 노력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열정과 생각

---

속에서 구상되어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책과 노력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롭고 긍정적인 국면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널 『평화와 통일』은 국민과 정부가, 남과 북이, 그리고 정책과 현실이 이어지게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5월의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이번 5월에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감염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와 방역 모두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염병 극복을 포함해 남과 북의 다양한 접촉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바이러스는 남북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팬데믹)을 보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경계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경계인 국경들을 돌파하여 인간과 사회 속을 파고듭니다. 한반도의 남북을 인위적으로 나눈 그 분단선도 돌파합니다. 남북 분단선과 경계들을 여지 없이 돌파하는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보다 지적인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로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 남북의 경계를 넘어 연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널 『평화와 통일』은 향후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지면으로 연결하는, ‘열려있는 공간’이기를 자임합니다.

---

이번 『평화와 통일』 창간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022년 5월이 지나는 다양한 의미들을 새기면서 소중한 목소리들을 소개하고 연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창간호는 [특집기획], [일반논문], [해외기고], 그리고 [리뷰]의 네 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집기획]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 창립 50년 주년을 기념하면서 ‘통일교육 50년’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향후 숙고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문정인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한 제언’을 해주었습니다. 통일교육의 미래 지향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정병호 교수는 6명의 남북한 주민들의 삶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감대화’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공감대화는 이산(離散)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치유의 과정임을 이야기 합니다.

저널 『평화와 통일』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면 [일반논문] 코너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논문]은 다양한 학자들의 학술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하였습니다. 황규성 교수는 ‘1960년대 초반 서독정부의 대동독 교역정책’에 대하여 훌륭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동독이 베를린 통행 제한조치를 취하자 1960년 가을 서독이 대동독 교역중단을 선언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도 단기적인 관점

---

을 벗어나 남북 상생을 지향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박균열 교수는 ‘평화 통일외식 측정도구 개발’이라는 논문을 통해 평화통일외식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학술적 접근이 가능한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의 원리와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해외기고]는 한반도 문제와 현실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다양한 성찰과 지혜들을 국내에 소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두 명의 학자의 글을 실었습니다. 캐나다 요크대 박현옥 교수는 ‘자본의 무의식으로서의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로 소중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박현옥 교수는 두 명의 ‘무국적’ 탈북자를 민족통일의 알레고리로 제시하면서 분단 한반도사(史)의 폐허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의 역사를 냉전과 남북의 영토적 이념적 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환경에서의 국민을 해방시키는 정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한반도의 통일국가라기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사대 이타가키 류타 교수는 ‘인간의 탈(脫)-분단’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었습니다. 평화는 이미 달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프로세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反-反’(anti-anti)이라는 독특한 사고를 소개하고 있으며 분단의 구체적인 여러 현실과 마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이란 ‘反-분단’이며 그 프로세스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게 되면 다름 아닌 ‘脫-분단’임을 이야기 합니다. 류타 교수는 ‘일본 안의 삼팔선’이라는 성찰 프레임을 통해 결국 ‘인간의 탈-분단’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하였고 국내에 갇히지 않는,

---

초국가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뷰]는 최근에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공하는 책, 필름, 예술(과) 공간, 그리고 다양한 인간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그로부터 새로운 의미들을 독자들과 ‘함께’ 생산하기 위해 기획한 공간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기획전시’ 공간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본의 리츠메이칸대 송기찬 교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매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영어판 2017년, 한국어판 2018년 출판)에 대해 리뷰를 해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태어난 주인공 ‘선자’라는 여인의 4대에 걸친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파친코』는 2022년 올해에 이미 시리즈 드라마로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자이기도 한 송기찬 교수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민진 작가의 첫 문장으로 리뷰를 시작합니다. 재일동포 외에 일본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도 이야기 속에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송기찬 교수는 ‘스스로가 엄청난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면서도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에서 역사의 피해자이면서 스스로 인간의 역사를 그려가는 재일동포’를 능동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역사가 그들을 망쳐냈지만 그렇게 그들은 괜찮았음’을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학예연구관은 또 하나의 ‘공간’에 대한 리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통일전망대에서 기획 전시되고 있는 <DMZ,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DMZ 접경지역 사람들(통일촌과 해마루촌)의 일상과 삶을 주제로 한 이부록, 리더수, 임흥순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국립통일교육원 박계

---

리 교수는 이 전시를 통해 ‘분단의 문제를 삶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단은 장기간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왔고 우리 삶 자체가 분단에 의해 왜곡되고 형해화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DMZ, 사람들>은 한반도 공간에서 삶과 분단이 어떻게 기묘하게 얽혀있는지 보여주는 ‘전시 공간’입니다.

『평화와 통일』 창간호가 발행됨으로써 이제 이 저널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사회의 통합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의 오고감과 이어감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다방면의 생각들이 이 저널 속에서 공존하며 서로 연계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들이 이 저널 속에서 함께 고민되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평화와 통일』은 항상 열려있는 공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장 차 문 석



# 특집기획

---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한 제언 • 문정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감대화 -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 정병호





---

##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한 제언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여 차례 정도 다양한 형태의 통일 관련 강연을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리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통일 교육에 대해 선입견 또는 편견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보수적인 청중들은 통일 강연이나 교육을 일종의 안보 교육으로 인식하고 그런 시각의 강연을 바랐고, 반면에 진보 성향의 청중들은 통일 교육을 북한 바로 알기나 평화교육의 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 시민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진보, 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통일 교육을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통일 교육의 정쟁화 또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 교육이 통일의 가치 지향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통일은 우리가 모두 염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통일을 둘러싼 안과 밖의 기회와 제약, 더 나아가 도전에 대해서는 이념이나 정파적 시각을 떠나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통일

의 큰 그림과 구체적 방식에 대한 선호성은 청중들의 개인적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통일 교육은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중들에게 객관적인 팩트를 제공하고 비판적 성찰의 역량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통일 관련 강연에서 청중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질문 9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함으로써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공헌하고자 한다. 통일 교육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 I. 통일은 무엇인가?

국내외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하는 주제는 통일의 개념이다. “통일이 무엇입니까?” “단일 민족국가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 아닙니까?” 물론 통일은 남북이 현재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의 개념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갖는 단일민족 국가가 되는 통일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누구의 하나’냐는 점이다.

남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의 기본으로 삼는 통일을 선호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통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흡수통일은 남한 헌법에 따른 단일민족 국가로의 통일을 의미한다. 북의 입장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북은 북의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전국적 단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남조선 적화통일’에 의한 단일민족국가 구축을 궁극적 통일형태로 표방해 왔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단일민족국가’로의 통일을 지향하나 한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못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북 통일은 '단일민족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에서는 1960년 이래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federation)을 제시한 바 있다. 연방제는 1 민족, 1 국가, 2 체제, 2 지방정부 형태로 통일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독일 등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전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국가 형태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역대 정부는 북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거부해 왔다. 그 이유는 사상과 제도가 다른 남과 북이 통일 연방국가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 선정 방식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남과 북이 군을 통합하는 것도 실현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북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confederation)를 들고 나왔다. 이는 1 민족, 1 국가, 2 체제, 2 지방정부라는 연방제와 유사하나 중앙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방제와 차별화된다. 특히 남북 각자가 군사외교권을 유지하고 연방정부의 지도자도 남북이 순환제로 선정할 수도 있다. 아직 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 같은 국가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는 26개 주(Kanton)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7명의 각료들이 일년 임기로 윤번제로 선출된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기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 또한 이러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이후 남북 연합을 통일방안으로 지속해서 제시해 왔다. 남북연합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과도적 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를 갖는 통일 형식을 의미한다. 이

는 오늘날 유럽연합과 모습이 비슷하다. 즉, 남과 북이 자신의 주권과 자율성을 완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각료회의 및 국회 회의를 제도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한다. 원칙적으로 외교와 국방은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이 해당 분야에서 협력도 할 수 있다.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이며, 2단계는 과도기적인 ‘남북 연합단계’이다. 이 단계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제도적 통일이라 볼 수는 없으나,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제도화됨으로써 남과 북이 더는 싸울 일이 없고 평화가 정착이 되는 ‘사실상의 통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 단계이다. 2단계를 통해 남과 북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이 완화되어 화해가 정착되면, 남북 주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의 궁극적 형태를 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단일민족국가로의 통일을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단일민족 국가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는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 남북연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통일 양식이 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의 국가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북이 공동 연구를 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새로 개편되는 통일 교육에서는 통일의 형태에는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라는 단일민족국가 통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 그리고 남북 국가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 통일의 방식은?

통일의 개념 못지않게 청중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통일의 방식 또는 경로다. 통일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독일 방식의 흡수통일, 베트남 방식의 무력 통일, 1990년 5월에 있었던 예멘 방식의 합의형 통일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중국 동북 3성 경제에 통합이 되는 한편,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 북이 중국의 경제적 실탱 아래 있다가 남북이 합의통일을 하는 실탱형 통일 방식도 있다. 이렇게 보면 네 가지 통일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은 이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흡수통일이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나리오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한다. 첫째, 북의 체제가 붕괴하거나 심각한 내부 변혁에 봉착하고, 둘째,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통합을 원해야 한다. 셋째, 중국 등 주변국이 북의 내부 붕괴와 남에 대한 투항을 용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측 정부와 주민들이 이러한 흡수통일의 비용을 감당하고 북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심리적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 남과 북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시각에서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북의 내부 붕괴나 북 엘리트의 주권 포기 가정은 다분히 비현실적이며 중국의 용인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더구나 그런 유형의 통일을 감내할 수는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준비 자세에도 의문이 생긴다.

두 번째 방식은 무력형 통일이다. 베트남형 통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한반도에 대입하면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하여 승리하는 측의 체제와 제도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흡수통일과 비슷하지만, 무력전쟁을 통해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방식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흡수통일이나 북이 고수해

은 적화통일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력 통일은 전쟁을 전제로 하고 그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일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6.25의 참상을 겪은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통일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합의형 통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남북합의에 따른 평화적 통일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도모하여 평화공존 상태를 만들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드는 남북 국가연합이 이러한 합의통일의 하나가 될 수 있다. 6.15. 선언 2조에 적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남북 연합 방안이 북이 제안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남북 지도자가 합의한 바 있으므로 합의형 통일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여 동북아에 한미일 남방 3각 동맹과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결 구도라는 신냉전 체제가 들어서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더 심화하고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구도 아래서 북한 경제는 중국의 동북 3성 경제권에 통합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신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통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통일 경로를 고려할 때 흡수통일과 같은 우리 주도의 통일 접근 방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접근은 북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대한 북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에 기초한 합의형 통일 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고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이러한 다

양한 통일 방식의 시나리오를 비교론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논의,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식을 도출해내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Ⅲ. 통일은 왜 필요한가?

통일의 형태와 방식 못지않게 제기되는 질문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것이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는 “남과 북은 이미 다른 나라인데 큰 비용을 들이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온다. 더 나아가 “분단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꼭 통일하겠다고 난리를 퍼느냐”는 냉소적인 발언도 나온다. 통일을 당연하게 여겨온 필자에게 이런 질문과 발언은 다분히 당혹스럽다.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우리의 국익 구조를 보면 자명해진다. 우리의 국익 또는 핵심적 가치는 생존, 번영, 국격(국가 정체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가 바로 통일이라고 본다.

첫째, 통일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은 그 형태가 연합이든, 연방이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든, 단일민족 국가이든, 남북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합체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일단 통일이 이루어지면 전쟁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가 오면 우리의 생존은 자연스럽게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으나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 우리가 해양권 경제에만 의존한다면 미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어렵다. 중국의 동북 3성, 북한, 시베리아 쪽과 연계하여 변영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우리 경제와 젊은 세대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설령 제도적 통일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만 이루어도 변영의 공간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남과 북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의 당위가 된다. 외세에 의해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축한다면 민족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국격(國格) 또한 상승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대립이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더 나아가 세계의 중추 국가로 자리잡을 수 없다.

강대국 결정론과 분단 상태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은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발상을 조금만이라도 전환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통일이 생존, 번영, 국격이라는 국익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는데 통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역사의 선물이 될 것이다.

#### IV. 통일비용은?

통일 당위론과 더불어 청중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 바로 통일비용 문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데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나이 든 세대와 대조를 이룬다. 복지 비용도 부담이 큰데 통일비용까지 젊은 세대가 짊어진다면 장래가 암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통일비용 산출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통일비용은 통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통일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무력형 통일이다. 이 경우, 우선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비용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전후 경제를 부흥하는 동시에 남북 주민 사이의 소득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야 하는 비용 등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전쟁 비용, 전쟁 복구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전반적 경제 부흥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한 소득격차에 따른 소득향상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일 것이다.

흡수형 통일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는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문제가 뒤따른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복원하는데 전적으로 우리 측 예산과 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흡수통일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은 남한의 일부로 OECD 회원국이 된다. 한국이 OECD 국가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은 대외개발원조 (ODA) 공여국으로 수혜국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독일도 통일 후 동독에 대한 경제 부흥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해외의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국 스스로 인프라 등에 대한 기본 투자를 한 이후에 가능하리라 본다. 이 때문에 흡수통일에 따르는 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일비용 산출 연구를 보면 대부분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 대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맞춰져 있다. 50% 수준까지만 끌어올린다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이는 '2등 시민' 논쟁을 촉발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 주민 소득의 70%-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흡수형 통일 시 생산요소 가격의 동질화 현상(factor price equalization)도 문제시된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북한 주민의 인건비가 남한 주민 인건비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남의 기업인들은 흡수형 통일이 이루어

지면 북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요소 가격의 동질화 현상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결과다. 남한의 노조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남측 기업이 북측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노조를 만들고 그들의 인건비를 남측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 할 것이다. 흡수통일 된 한반도의 단일 노동 시장에서 남북 간 인건비의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흡수형 통일 역시 그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의형 통일이려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일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합의형 통일은 과도기적으로 북한이 주권국가로 남아 있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합의형 통일을 추구하는 시작 단계는 바로 앞서 언급한 남북연합이다. 연합 단계에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해나가고 비핵화를 비롯하여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면 북한 경제가 되살아나고 북한 주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북한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주체는 북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북한은 OECD 국가로부터 개발 원조는 물론 세계무역기구로부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북이 경제 부흥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원, 참여만 하면 된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북한 내 양질의 노동력으로 국제 투자 또한 쉽게,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일본은 청구권 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할 것이며 중국의 지원도 뒤따를 것이다. 미국 또한 핵 포기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고 다양한 지원을 공여할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복구와 발전을 추동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력형 통일이나 흡수형 통일방안으로 통일비용을 산출한다

면 그 부담은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합의형 통일방안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주도적 경제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면 우리의 통일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실익을 가져온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두려워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 V. 문재인 정부의 “선 평화, 후 통일”구상,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평화만 강조하며 통일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통일 담론은 주춤해지고 평화 지상주의가 크게 대두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선 통일 후 평화’의 시각이다. 이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먼저 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다. 분단 시대의 극복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온 백낙청 교수가 이 시각을 주장한다.<sup>1</sup>

둘째, ‘선 평화 후 통일’의 시각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의 발발을 막는 일이며 이를 위해 평화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수교 관계를 맺어 서울과 평양에 외교 공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로 정상화되면 전쟁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평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 간 이질성은 해소되고 제도적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1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서울: 창비, 2021), 334-337쪽.

수 있다고 본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 평화만들기’라는 모임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평화와 통일의 동시 추구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평화가 있어야 통일도 있는 것이기에 방점은 평화에 두고 통일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통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동시에 추동해나가자는 절충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평화 우선주의를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며, 평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평화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전쟁을 통해 통일이와서도 안 되고 평화 없는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대치 상태인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상징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남북,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병행 추진 원칙 위에 평화경제 구상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 사실상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불행하게도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평화와 사실상의 통일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종되고 말았다.

이는 백낙청 교수가 이야기하는 선 분단극복 및 통일 후 평화라는 개념이나 홍석현 회장 측이 주장하는 선 평화 후 통일과는 다소 다른 시각이다. 과도기적인 주안점은 평화에 두면서 통일도 동시에 추동해나가자는 것이다. 통일보다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술적으로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평화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화의 여건을 만들면서 통일을 추동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통일 교육 과정에서 이와 같은 평화와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다루

어야 할 것이다.

## VI. 남북 이질성이 큰데 통일이 가당키나 하는가?

남북 이질성 문제도 통일 관련 강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남과 북 사이에 이질성이 너무 큰데 통일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사실 77년 단절의 시간, 분단의 역사, 그리고 치열한 이질화의 과정을 볼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간 이질성이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남북 간 이질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이념적 격차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고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념적 대척점이 클 수밖에 없다. 체제 이질성도 커다란 장애다. 북한은 우리에게서 생소한 수령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수령제 시스템에서는 수령이 곧 당이요, 당이 곧 국가요, 국가가 곧 인민이요, 인민은 군이라는 일종의 오위일체 논리가 작동한다. 사회 유기체론에 기초한 아주 독특한 정치체제다. 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적 공화정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체제의 조화는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다.

경제적 이질성도 문제시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적 차이를 떠나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는 너무 크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이다. 이렇듯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데에서 오는 이질성도 심각하다. 사회문화적 이질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비록 남과 북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언어적 이질성의 폭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의 폐쇄적 사회 문화는 남의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문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과거 우리 역사에 대한 해석에도 남과 북은 큰 틈새를 보인다.

그러나 이질성이 운명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부단히 노력해 나간다면 이질성은 극복할 수 있다, 이념과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은 교류협력을 통해 다져 나갈 수 있다. 필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남북 교류가 잦아지고 서로 신뢰의 자세를 가지면 북한 주민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대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언어가 같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렇듯 교류·협력의 과정을 확대해 나가면 이질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질성 극복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의 생존방식을 인정해주면서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 만약 북을 악마화하고 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 사실상 교류·협력이나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교육은 남북한 간 이질성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극복의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VII. 강대국이 반대하는데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까?

한국의 학자들은 세력균형 결정론 또는 강대국 결정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한반도 분단이 강대국의 분열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동의와 축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통일에 반대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통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례를 거론한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대 강국이 합의해줬기 때문이며 한반도 통일도 강대국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

은 다르다. 우선 독일의 경우,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네 국가가 승전국으로써 베를린을 그때까지도 분할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에는 이들 강대국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베를린을 분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통일된 독일이 유럽에 새로운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된 독일, 강해진 독일이 자신들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들 국가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크게 다르다. 우선 남과 북에는 점령군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탄생한 한미 동맹에 근거한 것이지 점령군이 아니다. 강대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어느 강대국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반대하진 않는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 주도의 평화통일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주변 4강 모두 전쟁을 전제로 한 무력통일도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을 바라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대한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자신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 믿고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이나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듯 강대국마다 계산이 다르긴 하나 남과 북이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남과 북의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평화통일을 원하면 강대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강대국 변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대국이 하나의 제약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 변수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통일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통일 교육에서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Ⅷ. 중립화 통일이 가장 이상적 대안 아닌가?

드물게나마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온다. 주로 진보 성향의 청중이 제기하는 문제다. 사실 중립화 통일방안은 이상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남북이 자율적으로 통일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중립국 지위다. 중립국 지위는 스위스처럼 국제 조약으로 담보할 수 있다. 1815년 3월 20일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하는 비엔나 의회에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의 합의로 스위스를 영세중립국으로 남게 했다. 오스트리아처럼 헌법을 통해 중립국을 선언하는 사례도 있다. 2차 대전 후 피점령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미국과 소련 간 냉전 대결 구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1955년 중립화 헌법을 채택했다. 한편, 핀란드, 스웨덴 등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중립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통일이라는 쟁점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반도 중립화 통일과 관련하여 세 개의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 선 중립화 후 통일의 방법이다. 즉 남북이 먼저 중립화를 하고 중립화가 된 상태에서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 선 통일 후 중립화 방법이다. 이는 남북이 통일 먼저 이루고 난 후 통일 한반도의 중립화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립화와 통일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남과 북 간에 중립화와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측에서 중립화 방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현재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 아울러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이 없어 언제든지 중립화를 선언할 수 있으나 남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남에서 한미 동맹의 해체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중립화 노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중립화 통일방안이 북한 김일성 시기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면서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공론화조차 힘들 수 있다. 이렇듯 중립화 통일방안은 이상과 현실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 IX. 북한 핵무기,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한 것 아닌가?

한국의 보수 진영과 워싱턴 주류 강경파 인사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얼마 전 발간된 랜드/아산연구원 보고서나 Jung Park의 “Becoming Kim Jong Un”이란 책자가 대표적이다.<sup>2</sup> 이들 주장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고 ‘남조선을 적화 통일’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minimal nuclear deterrence) 확보에 있다. 언젠가 평양에서 만난 북한 고위급 인사와 토론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했다. “미국은 핵무기가 3-4000개 있고 북은 10-20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핵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핵무기는 몇 개만 있더라도 보복 타격 능력만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수로는 비대칭적이더라도 북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과 몇십 개의

---

2 브루스 W. 베넷 외 공저,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Rand 공동연구 (2021년 4월 13일); Jung H. Pak, *Becoming Kim Jong Un: A Former CIA Officer's Insight Into North Korea's Enigmatic Young Dictator* (New York: Ballantine Books, 2020).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월등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북측의 문헌을 살펴보면,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보다 압도적 월등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많은 첨단무기를 수입했지만, 북한은 외화 부족 때문에 외국 무기를 수입하지 못했다. 북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남한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의 체제 안보 및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은 선군정치를 추진해 왔다. 선군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군의 제도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군사력 증강과 군 인사들에 대한 직위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핵무기는 군을 포섭하고 군의 충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보유가 북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적 지위 향상은 자연스레 북한 지도자의 정통성을 고양해 준다. 이는 핵무기가 정권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네 번째로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용이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 무관심할 때 북한은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의 주목을 끌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개발 등도 모두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규약 서문을 개정하면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대체했

다.<sup>3</sup> 물론 적화통일이란 북 주도의 통일 전략이 당 규약 서문을 개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이념적 관성은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북한 핵 무장의 주요 동기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사실 그러한 정보 판단은 북한과의 협상 무용론으로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이념과 가치에 경도된 접근보다는 실사구시에 기초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X. 통일 교육의 미래 지향성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통일 교육의 미래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통일 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자질 있는 통일 교육 인력의 양성도 필수적이다. 그래야 통일 교육과 연구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통일 교육 수강생들에게 특정 시각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강생들에게 선택의 지평을 넓혀주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통일 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일 논의처럼 국론이 분열된 사안은 찾아보기

---

3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출처: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 개정 당 규약, 2021.1.9.)

힘들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청중의 성향을 미리 예견하여 그들의 선호성에 편승하는 통일 교육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포괄적이고도 객관적 통일 지식을 공여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 주는 창의적 통일 교육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서울: 창비, 2021.

브루스 W. 베넷·최강·고명현·브루스 E. 벡톨·박지영·브루스 클링너·차두현,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Rand 공동연구, 2021.

Jung H. Pak, *Becoming Kim Jong Un: A Former CIA Officer's Insight Into North Korea's Enigmatic Young Dictator*, New York: Ballantine Books, 2020.

---

#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감대화 -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 I. 서론

문화는 빨리 변한다. 특히 한민족이 ‘한국(대한민국)’과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두개의 국가를 세우고 살아온 지난 70여년은 전쟁과 이산, 냉전과 산업화란 역사적 격랑을 헤쳐 온 시기였다. 두개의 국가는 각각 다른 방식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성격의 ‘국민’을 만들어냈다.

분단이 만든 문화적 이질성은 정치적으로 통일되면 쉽게 지워지리라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회복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동질성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무 달라진 남쪽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북쪽의 그들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sup>1</sup>

---

1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이야기』 (서울: 창비, 2020).

이제는 몇세대에 걸쳐서 갈라진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가 됐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편의 길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 길을 이끄는 지도자와 정치구호에만 주목했다. 남한사회가 하나가 아니듯, 북한사회도 결코 하나가 아니다. 수령과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양시민과 지방주민, 당원과 비당원, 남성과 여성, 전쟁세대와 기근세대, 무수한 직종의 전문가와 노동일꾼 등 서로 다른 가치관과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통일 이전부터 통일 이후까지 남북으로 갈라진 길을 잇고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정치적 사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통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을 만날 때는 서로 살아온 삶의 경험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세상과 그가 살아온 삶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공감 감수성이 필요하다. 공감적 이해는 자신이 '가지 않은 길', '갈 수도 있었던 길'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그런 공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의 한계도 알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가지 않은 길'에서 겪은 삶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화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바란다.

## II. 평화통일교육과 공감대화의 필요성

냉전시대를 거치며 오랫동안 통일교육은 상대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교육하면서 그곳 주민들에 대한 편견도 아울러 강화해 왔다. 군사적 대립이 계속되며 주민들까지 '위험한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분단 상황에서 2000년대 초부터 남한에 들어

오기 시작한 탈북민은 다른 국가체제의 ‘국민’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미리 연습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도우며 남북문화통합의 길을 모색하던 교육연구자들은 ‘먼저 온 미래’라고까지 하며 이 기회를 귀중하게 여겼다.<sup>2</sup>

그러나 안보의식 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던 반공주의 통일교육의 관성은 탈냉전시대에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북한기근 상황에서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주로 통일교육 현장에서 북한 체제 문제와 기근 참상의 증인으로 활용되었다. 통일교육 또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류행사는 대개 탈북민들을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 십상이었다.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도, 탈북민들은 일방적으로 ‘편견이 담긴’ 질문을 받고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통일교육 강사로 학교현장에 초대되었던 한 탈북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한 학교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에 주최측으로부터 계속 “안보! 안보교육!”을 하라는 노골적 압력을 받고 마음이 상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나쁘게 이야기하라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나.”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탈북민과 남한 주민이 처음 만나는 계기는 공식행사나 집단교류 활동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몇 가지 전형적인 교류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 교류시간은 대개 남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사회적 편견과 달리 탈북민 대부분은 남한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다. 북한 교육의 특성상 주기적 ‘생활총화’로 단련되어 공적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많다. 또한 탁아소부터 모든 교육기관과 직장에서 예술 활동에 주력한 결과, 평양뿐만 아

2 정병호 외 엮음,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 삶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나라 지방 벽지 출신들도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 행사는 대부분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으로 입장이 갈려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편견을 강화한다.

소수자 집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고정관념은 개인 차이를 무시한다. 개개인의 특성을 인식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트인’ 인간관계가 가능하다. 분단상황에서 탈북민 집단으로 규정되면 수많은 차별이 시작된다. 한때 국립국어교육원에서는 탈북민들의 ‘언어교정’을 해주는 정착지원 프로그램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상도말, 전라도말과 마찬가지로 지방방언에 불과한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 같은 차이를 ‘교정’을 해 주어야 할 ‘이상한’, ‘의심스러운’ 말로 여기는 것 자체가 남한 사회의 냉전이데올로기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막힘’이 되는 것은 탈북민들의 언어문제라기보다는 남한 주민들의 북한지역에 대한 편견과 안보 강박증 때문이다.

전란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한민족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학자 한만길은 기존의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인권, 반전과 군축, 갈등해결 등 평화교육의 의제를 통일교육의 원칙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sup> 분단체제의 구조적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실천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4</sup>

통일교육은 본질적으로 분단국가의 정치 논리를 넘어선 민족 통합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주의적 이념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한민족의 공존과 상생의 꿈을 앞서서 실현하는 평화교육이 되어야 한다. 탈북민을 비롯한 한민족 이주민들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도 남한의 주류집

3 한만길,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35~157쪽.

4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31쪽.

단인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서 타자화 되어 ‘2등 시민’처럼 사회문화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5</sup> 한민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식은 이민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문화공존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 체감도는 한국내의 다문화 이주민 집단 중에서 가장 강하다.<sup>6</sup> 식민지배와 오랜 냉전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게 된 한민족 집단과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미완의 탈식민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자칫 글로벌 이주의 시대에 이미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이주민 집단을 차별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르기 쉽다. 박형빈은 “다문화사회, 세계화, 통일시대에 추구할 정체성은 평화, 공존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을 배태한 민족정체성”이라고 했다.<sup>7</sup> 복합적인 한민족 집단의 민족과 국민 정체성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단순한 ‘민족=국민’의 도식을 넘어서 다중정체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초국가적 한민족 정체성’과 ‘초민족적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탈북민을 비롯한 수많은 한민족 이주민과 난민, 망명자, 이주노동자가 남한 사회에서 겪는 차별구조 해체의 첫걸음이자, 다른 사람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이념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길이다.<sup>8</sup>

5 법적시민권이 보장하지 못하는 ‘문화적시민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Aihwa Ong,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6 정병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2), 1~345쪽.

7 박형빈, 「통일교육의 사회통합 역할 모색을 위한 민족정체성과 세계시민성 담론: Durkheim의 도덕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와 교육연구』 제60권 (2018), 133~155쪽.

8 정병호, 「한민족 다문화와 한민족 세계시민」, 정병호 외, 『한반도 세계시민과 평화·통일교육』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10~22쪽.

분단과 이산으로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가치관과 규범, 생활양식을 체득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평등하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만남’은 특히 형식과 규모가 중요하다. 한꺼번에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과 집단의 만남은 실질적 인식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편견을 허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소수인원만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객이 되는 행사보다는 모든 참여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소규모 만남의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인식변화의 계기가 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공감대화 프로그램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과정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공감대화는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한다. 공감적 이해는 편견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된다.<sup>9</sup> 다름을 존중하는 공감대화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 Ⅲ.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과 독일의 ‘동서포럼’

다른 집단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간 훈련 프로그램은 교육학, 심리학, 인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sup>10</sup> 그중 ‘문화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 방법을 활용하여 독일 동서포럼과 함께 기획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란 공감대화

9 정병호, 「공감대화, 친절한 세상을 만드는 길」 『한겨레』(온라인), 2022년 5월 26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382.html>>

10 정진경·양계민,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4권 1호 (2005), 185-215쪽.

모임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의 이론과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본인의 다른 논문,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sup>11</sup>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발표한 삶이야기와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2012년 가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평등한 대화 방법을 개발해 보고자 모색하고 있던 내게 독일 ‘동서포럼(Ost-West Forum)’의 설립자 악셀-슈미트 괴델리츠(Axel-Schumit Godelitz)와 함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기회가 생겼다. 동서포럼은 독일 통일 후 사람들이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게 되자 오히려 서로에 대한 편견이 깊어지는 역설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대화 프로그램이다. 체제 경쟁에서 이긴 서독 사람들이 차별의식을 갖는 반면, 동독 사람들은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사회적 분열은 심해진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동서독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생애사(biography)’를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sup>12</sup>

‘동서포럼’은 오늘날 유럽통합을 계기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대화는 문화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다른 문화 구성원이 이주해 들어오면 기존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주민과 소수자 집단 간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다른

11 정병호,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 『통일인문학』 제89권 (2022), 349~396쪽 참조.

12 악셀-슈미트 괴델리츠, 「독일 통일 후 내적통합 -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2012-04,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2012), 1~8쪽.

문화에 대한 지식보다 다른 집단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화간 대화의 주된 목적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남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질문만큼 자신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정보를 통해서 '다름'에 대해 알 수는 있지만, 정서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비로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역동적인 '공동체'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동서포럼은 남녀노소, 학력, 직업, 지위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살아 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그 참가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기업가, 노동자, 농부뿐만 아니라 비밀경찰 출신과 고문 피해자도 있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3천명 이상의 동서독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공동체성을 확인했다.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야기' 대화 방식을 확대해서 가해와 피해의 역사적 상처가 있는 독일과 폴란드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 프로그램으로 응용하기도 했고, 한국의 다문화 이주민 문제와 비슷한 독일 정주민과 터키 이주민들의 편견극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했다.

#### IV.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와 공감대화 프로그램

2012년 9월, 동서포럼의 괴텔리츠 대표와 함께 탈북민과 남한사람들이 참여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모임을 1박 2일 일정으로 기획했다. 공감대화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출신, 성별, 세대 구성의 균형을 맞춰서 위촉되는 참가자가 없도록 평등한 자리를 만드는 섬세한 배려가 중요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모임에서는 남성 연장자를 우선하는 사회적 통

---

<sup>13</sup> 장한업, 「뒤보와(R.D. Dubois)의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현대적 조명」, 139쪽; 마르틴 압달라-프리트세 이 저,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넵과는 다르게 이야기 순서를 정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30세가 된 남한 여성과 50대 탈북여성 순으로 하고, 두 번째 세션은 50대 남한남성과 40대 탈북여성, 세 번째는 40대 탈북남성과 40대 남한여성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 남한사회에서 탈북민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자주 놓여서 늘 여러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은 늘 미숙한 사람 취급을 받아 뒷자리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고정관념을 뒤집기 위해 삶이야기의 발표자 순서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젊은 남한 여성이 시작하도록 했다.

모두가 한 시간씩 자신의 삶이야기를 다른 참가자들과 나눴다. 발표, 질문, 대화가 끝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조용히 반추해 보는 2-3분 정도의 되새김 시간을 가졌다. 여러 사람 앞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준 발표자에 대한 정중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느낌을 성찰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 사례 1: 남한 여성(30대)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한 남한 여성은 지금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립할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학생운동을 못하게 해서 하고 싶었던 품물도 못하고 학교-시험-학원 사이를 오가면서 지냈던 성장기 경험부터 이야기했다. 취직 시험공부에 해외 어학연수까지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망하는 기업에 취업했으나 입사 후 맡은 일이 허무하고 권위적인 기업문화에 질려서 매일 참고 고민하다 끝내 퇴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보니 결혼도 멀게 느껴졌는데, 그나마 궤도를 이탈한 자신의 결정을 부모님이 존중해 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현재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며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들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다른 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선 부모 자식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대학생 때 왜 하고 싶은 활동을 못했는지? 남한 남성이 문자, 아버지의 만류를 거스를 정도의 반항심과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과거에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자식이 지금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돌이켜 보니 25살 넘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더 집착하게 되었다며 일종의 보상심리에서 (부모에게)책임질 수 있는지 따지게 되더라고 했다.

남한사람들은 좋은 대학과 큰 회사에 가면 성공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대학입시와 취직시험에 모두 성공한 사람이 허무하게 퇴직했다고 하자 갑자기 자신도 불안해진다고 했다.

탈북여성은 소득이 많은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그만 둔 이유를 묻는 질문을 거듭했다. 40대 탈북 남성은 “대기업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가려고 했는지? 공백기에 후회가 안 되던가?” 물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의 제품처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남한 여성이 대답했다.

“큰 조직에 들어가면 주변 동기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를 바꿔야 하는 게 힘들었다. 월급 받아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지만, 돈을 떠나서 너 아니면 안 돼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요즘은 과외해서 용돈 벌어 하루하루 헤쳐 가며 살지만 NGO에서 자원봉사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일 하고 있어서 좋다”고 하며 웃었다. 탈북 남성은 남한사람이 돈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자신도 남한 정부의 소개로 대기업에 들어갔었는데 일도 몸에 안 맞고, 비전도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했다. 요즘은 하고 싶고 몸에 맞는 NGO일을 하고 있지만 간혹

후회되더라고 하며 남한 여성과 함께 웃었다.

나이든 남한 사람들은 자식포래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볼 기회는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 알기는 했지만 젊은 세대의 생생한 자기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지금까지 막연하게 행복에 겨워 투정하는 것으로만 여겼던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감대화는 너무 익숙해서 간과하기 쉬운 자기 자신의 편견도 돌아보게 한다.

## 사례 2: 탈북여성(50대)

다음 순서는 함경남도 출신의 50대 탈북여성이었다. 어린 시절 톨스토이 소설과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좋아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970년대 유일사상체계가 강화되면서 외국책들을 ‘회수도서’라고 불사르고 김일성 석고상을 세워서 ‘이제 나라가 변하는구나’ 생각하고 무서웠다. 학교에서 모범생이라 약제사가 꿈이었지만, 여학생 증원 명령을 받은 금속공업대학으로 가게 되어 하기 싫은 공부를 했다.

20대 사춘기에 짝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연애편지도 썼지만, 노동당 입당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활동해서 마침내 입당을 했다. 지금도 입당한 날짜가 되면 마음이 막 설렌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남한에 와서 처음 해 본다고 울먹였다. 처음으로 증언이나 간증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에 온 것 같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대학을 나온 기술자였는데, 남한에서는 십년째 노동일만 했다. 처음 하나원에서부터 파출부나 간병인같이 앞날이 없는 ‘천한 일’만 하라고 해서 실망했다. 지금은 ‘인생에서 꿈 있는 일’을 해보려고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곡절 많은 인생을 돌이켜 보니 새삼 눈물도 나고, 마음이 풀린다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마쳤다.

대화시간이 되었다. 남한으로 함께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 자녀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한국행을 거부했을 때 나이가 15살, 21살이었는데, 태어나서부터 듣는 것이 사상교육이고 나라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곤, 바로 이어서, 부모가 (중국과 한국에서) 돈을 보내줘서 생활의 어려움을 못 느껴서 그렇지 (돈) 안보내주고 힘들었으면 달랠을 거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남한여성과 비슷한 나이가 되었겠는데, 이곳 젊은이들도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느껴서 조금 위안 받았다고 웃었다.

남한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북한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다른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특히 북한에서도 외국소설을 읽고 선생님에게 연애편지를 쓰던 꿈 많은 소녀시대의 성장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공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동안 독재에 시달리는 고난의 이미지로만 그려왔던 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노동당 입당에 대한 자부심을 이해해 주고, 남한에서 겪은 차별 같은 비판적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안타까워하는 남한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점점 더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괴텔리츠가 질문을 했다. 동독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도 당원으로 입당한 날이면 설레는 것은 왜일까? 물었다. 바로 ‘기쁘고 명예로운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대학시절부터 인생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요한 성취를 한 날이라 지금도 의미 있게 생각된다”고 했다. 동베를린에서 살아본 괴텔리츠는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해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특히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 했다.

북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이룬 성취는 한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체제 안에서 다져온 삶의 의미 자체를 부정당하는 남한 사

회에서는 그런 기억을 떠올려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누르고 있었다고 한다. 풍요로운 남한에서 의미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자, 모두 숙연해졌다.

잠시 침묵하며 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첫 번째 세션을 마쳤다.

### 사례 3: 남한남성(50대)

다음날 아침에 열린 두 번째 세션은 50대 회사원인 남한남성이 시작했다. 늘 편안한 웃음을 짓던 그가 사상범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두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잡혀가서 15년을 복역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눈물을 참기 힘들어 했다. 아버지는 투철한 이론가나 투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유한 사람이라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손님들이 들끓었다. '저축하지 말고, 이웃과 나눠먹으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잡혀가자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억척스레 키웠다. 형님이 3명 있었지만,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혼자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다.

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년 잡혀가면 끝'이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공식직책을 피해서 감옥에는 안 갔다. 그래도 '아버지처럼 올바르게 살려고' 야학교사를 하며 '더불어 지내고, 가진 것을 나누며' 충만함을 경험했다. 대학졸업 후에는 집안에 부담이 안 되려고 일반직장에 취직했는데, 그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위원장도 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적게 벌어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려고 그런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장이 있는 작은 회사로 옮겼다. 회사를 옮기느라 잠시 실직했을 때 아내를 출근시키고 전업

주부로 집안일을 돌봤다. 실제로 해보니 보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의식주 3가지를 열심히 챙기다 보니 아이들과 자연히 소통이 되고 기본적인 신뢰가 생겼다. 아직 자기 집도 없고 전세로 살지만,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큰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요즘은 좋아하는 친구들과 노래모임을 한다며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랫말을 들려주며 이야기를 마쳤다.

탈북민들은 남한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 회사원 같아 보이던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자 모두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우선 사상범으로 오랜 감옥생활을 했다는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무엇이 힘들었나? 학부모 역할은 누가 했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생각은 어떤지? 성장기에 아버지는 집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 역할을 큰형이 하려 했던지 잔소리와 억압이 심했다. 큰형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반발심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유신시대에 남한에서 ‘간첩의 자식’으로 살기는 참 어려웠다. 사실 아버지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모임처럼 자기 이야기하는 자리는 피하며 살았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를 가장 못보고 자란 자기가 제일 성격이 닮았다고 한다. 나중에 내가 노동운동에 참여하니까 형들은 야단쳐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악착같이 살림을 도맡아 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인격과 노선을 존경했다. 실제로 아버지는 사상과 실천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감옥에서 나오면 늘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 같다”며 대답을 마쳤다.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공주의자라 정치적으로는 편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탈북민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묘한 복합감정을 담은 질문들이 나왔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은 북한을 지지하는 맑스주의자들이라는 말도 자

주 들었는데 맑스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운동 할 때 금서를 몰래 읽기도 했지만, 체제보다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며 녹색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탈북민들은 이념적 지향과 별개로 대의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다. 다른 한편 남한 군사독재 정권의 감시와 처벌로 억압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어려운 삶을 금방 공감했다.

여러 해 동안 그를 알고 지내던 나조차도 일을 떠나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어 본적이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기능적이고 피상적인 만남만 거듭해 왔는지 아쉬웠다. 비로소 한 개인으로서 그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공감대화 방식으로 삶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심지어 오랜 친구 간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점에서 공감대화는 이념, 세대, 성별, 계급 경계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론으로도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 사례 4: 탈북여성(40대)

앞서 이야기한 남한 남성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평범하다면서 40대 탈북 여성이 삶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다정다감한 공간”이라 평소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마음 편하게 말하게 된다고 했다. 남과 북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처음인데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라 매번 놀라며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스스로 평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극적인 삶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는 탄광밖에 없는 함경도 산골에서 태어나 ‘신분을 벗기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2등을 했다. 평양의 대학에 가고 싶었다. 군에서 5~6명 추천하는 명단에 들려고 김일성 회고록에 나오는 명문장을 줄줄 외었다. 혁명가출

신의 좋은 스승을 만나서 평양의 기술대학에 입학했다. 1986년에 처음 가본 평양은 화려했다. 당시 ‘동독만큼 잘 살았다’는 평양에서 살며 다시는 지방에 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대기근이 닥치자 1995년 고향으로 돌려보내졌다. 굶주리면서도 일시적인 시련으로 생각하고 견디면서 탈북하는 배신자들을 미워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10년 동안 고생만 하고 보니 너무 가망성이 없어서 탈북을 결심했다.

한국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와서 5년이 되었지만, ‘결혼도 못하고 차도 못 샀다’며 웃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달에 1~2명 남자를 만나 봤지만, 북한 여자를 찾는 그 사람들 수준이 실망스러웠다. 남한에서 삶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두렵고 실망이 크다.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따라가기 힘들고 끼어 들 수 없는 존재로서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했다. 드라마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도 될 수 없는데 차라리 부모 옆에서 효도하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남한에서는 코메디를 봐도 웃음이 안 나오고, 사람들도 재미없다. 그래도 남북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놀랍다. 역시 독재 때문인 것 같다. 민주주의는 개선 가능하데 북한에선 문제해결이 안되고 계속 쌓인다. 이왕 한국에 왔으니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요즘은 북한대학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한 가정의 여인만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무언가 뚜렷한 일을 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남북한 사회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생생하게 비교하며 소개해 준 삶이 이야기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평양에서 잘 살던 시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어떤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기술자 간부를 양성하는 경공업대학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했는데 남녀가 반반이었다. 평양교육도서관인쇄공장으로 배치 받았는데, 당기관 간부수준

의 ‘축복받은 생활’을 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기근으로 공장가동도 힘들게 되자 고향으로 내려 보냈는데 결혼밖에 길이 없어 보였다.

한국으로 온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오자, 처음 환상에 마음이 들떠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치면서 목사가 운영하는 비밀숙소에 있었는데, “설교도 귀에 설고,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싫고 힘들었다.

어렵게 도착한 남한은 자유롭지만 사람들이 차갑다고 느꼈다. 북한에서는 어려웠지만 울면서 살았던 기억이 없다. 가끔 마음껏 화끈하게 놀기도 했던 것 같다. 과거와 단절된 지금 친구도 너무 없고 즐겁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남한 참가자들은 북한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에서 당연히 더 행복하리라 여겨서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가 살아 온 과정을 이해하고 보니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며 위로해 주었다.

#### 사례 5: 탈북남성(40대)

마지막 세션은 40대 탈북남성이 시작했다. 평양에서 당간부 아들로 태어나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드림을 치다가 정구도 하고, 서예와 탁구도 배웠다. 어릴 때부터 뭔가 만족을 못하고 자꾸 바꾸는 생활을 했다. 빨리 당원이 되려고 군대에 가서 ‘뺨을 써서’ 최전방 민경부대(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 행정경찰대)로 배치 받았다. 선전선동부장으로 7년간 근무하다가 정치지도원을 ‘까는’ 사고를 치고 지뢰밭을 뛰어 넘어 남쪽으로 왔다.

남한에 와서 탈북민 특례입학제도 덕분에 대학도 가봤지만 돈버는 것이 차라리 나올 것 같아 북한음식 식당을 차렸는데 갖은 수모를 다 당했다. 한번은 “북한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드냐? 사람 잡아 먹냐?”고 하며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무시하는 소리를 해서 참지 못하고 ‘조선사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들이받아 구속되었다가 벌금을 내고 나왔다. 북한 같으면 때린 자기보다 잘못된 사람에게 '너 맞을 짓을 했네'하며 끝날 일이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구속되는 사고를 쳤는데 이제는 흥역 같은 그런 시기가 끝나서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삶이야기를 끝낸 그는 "이 자리가 분위기도 좋고, 서로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줘서 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다"며 후련해 했다.

드라마같이 파란만장한 탈북남성의 삶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상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남한남성이 물었다. 평양에서 부모님이 고위직이었다는데 본인 탈북 이후에 가족들 소식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련 없다고 바로 대답했다. 그리곤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쇼크가 탈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듯 이야기했다. 민경부대의 선전선동부장이 개인감정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어머니 사망소식조차 안 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치지도원을 '까고 수류탄으로 자살하려다가'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강도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모로 작업을 해서 2002년 중국 대련에서 만났는데, 남한으로 가자고 하니, "넘어가면, 비밀 뵈아먹고, 잡아먹는다"며 북으로 돌아갔다.

당간부의 자식이 빨리 당원이 되려고 백을 써서 군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한 고위층 자식들의 병역기피와 비교된다고 하자, 남한의 같은 또래들이 철밥통이라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어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공무원 때문인데, 퇴직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공무원 자리에 매달리는 걸 보고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남한에 와서 대학생할은 어땠는지 묻자, 북한관련 전공을 했는데, "교수들이 짜깁기해 놓은 논문만 보다가, 졸업해도 비전이 없어서 그만 두었다"고 대답했다. 지금은 그나마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탈북민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한에서 이룬 가정에 대

해 묻자, 지금 특기 레슨을 네 개나 받고 있는 일곱 살 딸이 있다며 웃었다.

#### 사례 6: 남한여성(40대)

마지막으로 40대 남한여성이 이야기를 했다. 이미 다섯명의 어마어마한 삶이야기가 쌓여있는데 자신은 소소한 일상생활 경험밖에 없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어린 시절 섬마을 외할아버지집 감나무 그네에 혼자 앉아서 일하러 도시로 간 엄마 아빠가 언덕길을 넘어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서 나를 데려가 줘야 하고 기다리던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플까봐 차마 말도 못하고 견디는 법을 익혔다. 장사를 하는 억척 생활여성으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밥상머리에 원고지를 쌓아놓고 뭔가를 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글 쓰고 싶은 욕망을 참고 살아 온 엄마를 보고 문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이 주장은 옳지만 경찰에 맞서는 방식이 폭력적이라 직접 참여는 못하고 옆에서 돌 깨주고 데모하고 돌아온 아이들과 막걸리를 마셨다.

대학졸업 후 TV방송사 시사팀 구성작가가 되어 13년을 일했다. 권력기관의 높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인터뷰할 수 있는 자신이 동급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지방출장을 떠나는 날 아침, 4살짜리 아이가 이불을 물고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보는 듯해서 바로 사표를 썼다. 그 후 이웃들과 함께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하다가 가출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 교사로 일했다. 최근 북에서 온 가족과 아이들의 고향집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정적 가족드라마와 같은 삶이야기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며 육아와 일 사이에서

굴곡진 여성의 삶에 대해 남북을 넘어 공감했다. 탈북여성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방송사 일을 그만두고 후회는 안했나요?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 맡기고 일할 생각은 안했나요? 방송작가를 그만 둘 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느끼며 자기 존재를 갉아먹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흔들리고 힘들 때 옆에서 들어주는 그런 기민한 자리에 계속 있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50대 탈북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와 참 다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시를 쓰듯 사색과 독서로 풀며 사시네요. 남편은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은 흔들림이 없는 고집스러운 사람, 든든해서 결혼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이다. 40대 탈북여성인 남한 여자들의 일과 결혼에 대해 잘 몰랐던 많은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고마워했다.

1박 2일간, 6명의 삶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모두가 따뜻한 느낌으로 들어줘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다운 이야기에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질문을 듣고도 공감되는 점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면적으로 깊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탈북민들은 함께 참여한 남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늘 하던 총화시간의 자아비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삶 자체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이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도 해봤는데 자신이 수백명 앞에서 했던 통일교육 강연이나 수십명의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모임보다 참가한 사람의 마음속에 훨씬 깊고 오래가는 울림이 있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이 작은 실험적 공감대화 모임이 어찌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을 듯해서 영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출신들은 “사회주의 때 이런 것 많이 해봐서 지겹다”며 동서포럼과 같은 집단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는데, 막상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비판하던 버릇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화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적으로 살아 온 서독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성공경험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통일 후 실업문제 등 절박한 상황변화에 고생하고 있는 동독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다. 동서포럼 생애사 모임에서는 서독사람들도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해서 공감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모임의 마무리 대화자리에서 괴델리츠는 “한국문화는 독일문화에 비해 공감대화에 꼭 필요한 정서적 소통을 더 익숙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며, 특별히 성찰적인 대화내용과 서로 아픔을 나누는 분위기에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첫 번째 공감대화 모임에서 사회를 봤던 나도 참가자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평등한 공감대화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소수집단으로 차별 당하는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한인이주민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사회에서 갈등하는 남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실험적인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야기’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2012년 10월 말부터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러시아 사할린 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재일, 재미 동포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한인들이 참여하는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이야기’와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등을 주제로 총 16회의 대화모임을 진행했다.<sup>14</sup> 경계를 가로 지르는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시대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한인 집단도 함께 공감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4년,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의 이향규 교수는 남한 청소년 네 명과 북한, 다문화 배경 청소년 각각 두 명씩 모두 여덟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삶이야기 방식의 고등학생 통일교육 캠프를 진행했다. ‘통일’하면 흔히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사는 먼 미래의 일로 여기지만, 남한에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주민도 있고, 먼저 통일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탈북민도 있기 때문이다. 이 캠프에 참여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은 통일을 한반도에 사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더 큰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5</sup>

이 캠프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찰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분단, 통일,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에 관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삶이야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편 함께 사는 사회를 생각했다. 불과 1박 2일 동안이지만 그들의 대화는 그런 각성과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은 오래 지속되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의뢰로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결하고자 기획한 이 프로그램 내

14 문현아·Park Christian Joon,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가적 경험과 의미 분석」 『구술사연구』 제7권 1호 (2016), 137~186쪽; 박준규,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7권 2호 (2017), 133~161쪽; 조일동,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0권 1호 (2020), 1~29쪽; 최은영,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통한 이해와 연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0권 1호 (2020), 191~224쪽.

15 이향규, 「한국, 탈북, 다문화 학생들의 만남: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정병호(편), 『공감대화: 존중과 치유로 가는 한 시간, 한 사람의 이야기』 (따주: 푸른 숲, 2022).

용과 후속모임 결과는 다각도로 연구되었다.<sup>16</sup>

한편, 여성평화운동단체 ‘조각보’에서는 2012년부터 남북한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한민족 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이야기’란 공감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담은 단행본을 발간했다.<sup>17</sup>

## V. 결론

한국사회의 공감위기는 심각하다. 분단과 전쟁 트라우마로 심화된 남북대립은 상대방을 쳐부수어야 할 적으로 비인간화했다. 이를 복제한 남남갈등은 다시 지역, 이념, 세대, 성별, 계급, 장애 등 모든 사회적 경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충돌을 부추겼다. 세대간 문화차이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도 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각 집단의 취향에 맞춘 편향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는 자폐적 소통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집단 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경계를 넘는 공감능력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오랜 분단으로 단절되었던 남과 북 주민들의 만남은 이미 탈북민의 입국으로 가시화되었다.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에 살던 동포들의 국내 이주가 활성화 되었고, 다민족 다문화 이주민도 급증해서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국제적 난민들도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계는 심화되었고, 그러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편견과 갈등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16 조정아 외, 『통일교육 콘텐츠개발 IV (2)』 (서울: 통일연구원, 2014).

17 윤은정 외 공저, 『허스토리즈(Herstories): 다시 만난 코리안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이야기』 (서울: 북코리아, 2021).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불평등한 사회관계 속에서 억압받으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체험이 되었다고 한다. 평소 차별에 눌러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평등하게 보장받는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처음 해봤다는 이주민들도 있었다. 누구나 갈망하던 평등한 관계와 공감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실제로 체험해 보고, 자기 자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라고 했다. 다른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편견을 해소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대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아무도 설득하거나 설교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삶이야기와 서로 나눈 공감대화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모임에는 남한 내의 소위 좌우, 보수-진보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장기화된 집단적 증오도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공감대화 프로그램은 남북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계를 따라 심화되고 있는 남남갈등을 넘는 화해와 상생의 치유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21세기의 과제인 남과 북 두 나라 국민과 다양한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상호이해를 위해서 공감대화 방식의 평화통일교육이 폭 넓게 진행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압달라-프릿세이, 마르틴,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7.
- 윤은정·김숙임·김현미, 『허스토리즈(Herstories): 다시 만난 코리아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이야기』, 서울: 북코리아, 2021.
-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 이향규, 「한국, 탈북, 다문화 학생들의 만남: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정병호(편), 『공감대화: 존중과 치유로 가는 한 시간, 한 사람의 이야기』, 파주: 푸른 숲, 2022.
-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이야기』, 서울: 창비, 2020.
- \_\_\_\_\_, 「한민족 다문화와 한민족 세계시민」, 정병호, 이향규, 엄현숙, Dan Gudgeon, 『한반도 세계 시민과 평화·통일교육』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10~22쪽.
- 정병호·전우택·정진경 편,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 삶』,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 정병호·정진경·이향규, 『탈북민 교육지원체제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 조정아·박영자·남시동·이현정·전영선·김선혜·김윤영, 『통일교육 콘텐츠개발 IV (2)』,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Aihwa Ong,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9.
- The Council of Europ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Living Together As Equals in Dignity*,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May 2008).
- 문현아·Park Christian Joon,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 『구술사연구』 제7권 1호, 2016, 137~186쪽.
- 박준규,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7권 2호, 2017, 133~161쪽.
- 박형빈, 「통일교육의 사회통합 역할 모색을 위한 민족정체성과 세계시민성 담론: Durkheim의 도덕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와 교육연구』 제60권 2018, 133~155쪽.
- 장한업, 「뒤브와(R.D. Dubois)의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현대적 조명」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0권 3호, 2015, 121~143쪽.
- 정병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2, 1~345쪽.
- \_\_\_\_\_,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간 대화 프로그램」, 『통일인문학』 제89권, 2022, 349~396쪽.
- 조일동,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0권 1호, 2020, 1~29쪽.

최은영,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통한 이해와 연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을 중심으로」 『현대사 회와 다문화』 제10권 1호, 2020, 191~224쪽.

한만길,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35~157쪽.

약셀-슈미트 괴델리츠, 「독일 통일 후 내적통합 -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2012-04,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2012, 1~8쪽.

정병호, 「공감대화, 친절한 세상을 만드는 길」 『한겨레』(온라인), 2022년 5월 26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382.html>>

# 일반논문

---

1960년대 초반 서독정부의 대동독 교역정책 • 황규성

평화통일외식 측정도구 개발

- 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의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 박균열





---

# 1960년대 초반 서독정부의 대동독 교역정책

●  
황규성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 연구교수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60년대 초반에 서독정부가 동독과의 교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조명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동서독 교역은 4전승국 점령기를 포함하여 통일될 때까지 45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2차 베를린 위기를 맞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독은 동독의 베를린 통행 제한조치에 맞서 1960년 가을에 교역 중단을 선언했으나 교역중단 조치의 낮은 실효성, 국제공조의 불확실성, 중단의 장기적 효과를 감안하여 곧바로 철회했다. 이듬해인 1961년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서독은 또다시 교역 중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역을 이어나갔다. 교역 중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제재를 선택하여 갈등이 고조될 경우 베를린의 동독의 수중에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지속적인 경제교류가 대동독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제재가 아닌 자제를 선택한 서독의 정치적 결단은 단기적으로는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서독 교류협력을 심화·확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서독이 자제의 정책을 결정할 때 회피하려 했던 교역중단의 부정적 영향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협력의 다리는 끊어졌고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깊어지고 있다.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

---

•핵심주제어 : 동서독 경제협력, 동서독 교역, 베를린 위기, 남북 경제협력

## I. 서론

동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전승국의 분할점령 기간을 포함하여 분단정부가 수립된 1949년부터 통일되는 1990년까지 45년 동안 교역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동서독 교역은 양국 경제정책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동서독 정부는 교역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더구나 동서독 관계가 전범국으로서 독일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가 얽힌 문제였다.

정치와 경제가 복잡하게 교차된 동서독 교역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다소 의외다. 하지만 교역이 중단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냉전기에는 서구와 동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교역이 잠시 끊인 적이 있다. 4전승국의 분할점령기에는 1차 베를린 위기가 진행 중인 1948년에 교역이 중단되었다. 분단정부가 수립된 직후 1950년에는 서독이 동독에게 철강부문 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두 차례 모두 잠시 휴지기를 거쳐 교역은 재개되었다.

1958년부터 시작되어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이어진 2차 베를린 위기를 맞이하여 동서독 교역은 전면적으로 중단될 갈림길에 섰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가 서독주민의 베를린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1960년 가을에 교역 중단을 선언했지만 협상을 통해 교역은 다시 이어졌다. 이듬해인 1961년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교역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독정부는 교역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독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교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어졌다. 이후 통일되는 1990년까지 교역은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종전까지 동독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

했던 서독정부가 베를린 장벽 설치라는 냉전사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동서독 교역에 관한 국내 연구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교역의 일반적 성격과 특징에 관한 연구다. 초기에는 교역의 실재를 충실히 소개하는 데에 치중했으나 최근에는 상호주의의 성격을 밝히는 등 연구의 주제가 깊어졌다.<sup>1</sup> 둘째는 교역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로서 교역에 영향을 미친 요인, 교역에서 채택한 금융제도, 교역의 경제적 효과 등이 다루어졌다.<sup>2</sup> 셋째는 교역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연구로서 교역의 법률적 근거와 교역의 특수성을 견지한 서독의 법률규정과 국제적 인정 등이 중심주제였다.<sup>3</sup> 그러나 동서독 교역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2차 베를린 위기를 따로 떼어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논문은 2차 베를린 위기를 맞아 교역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가 동독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치적 결단’을 선택한 배경과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의 기간은 1960년 9월~1961년 8월까지 약 1년 사이에 초점을 맞춘다.

- 
- 1 김영윤,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교류: 내독교역이 남북한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논총』 제4권 2호 (1995), 277~337쪽; 김태현, 「동서독 무역의 경제통합론적 특징과 남북교역에의 시사점」 『경상논총』, 제24권 (2001), 1~19쪽; 김학성, 「분단독일에서 상호주의의 실천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2권 1호 (2021), 127~144쪽;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 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1989), 31~61쪽; 정진상, 「통일전 동·서독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1호 (2006), 1~28쪽.
  - 2 고상두, 「동서독 교역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1999), 135~156쪽; 김상훈, 「청산결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각국의 사례 및 남북한 청산결제제도 추진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제6권 2호 (2004), 25~37쪽; 정형근, 「서독의 대동독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아세아연구』 제46권 2호 (2003), 91~128쪽;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3 이장희·이병조·김명기·홍성화, 「동서독 내독거래의 법적 토대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에 주는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 12권 (1993), 101~130쪽; 이효원,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 (통일부 정책연구보고서, 2009).

## II. 동서독 교역의 특징

### 1. 교역의 역사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동서독 교역은 4대국 점령기, 냉전기, 긴장완화기, 통일기의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대국 점령기(1945~1949)는 독일이 패전한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점령했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교역은 주권국가들 사이의 무역이 아니라 4개 군사정부가 관할하는 ‘점령지간’ 거래(Interzonenhandel)의 형태를 띠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냉전기(1949~1968)에는 동서독 정부가 각각 수립된 이후 정치적으로는 각자 독일의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는 등 서로 으르렁대며 대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교역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이 시기에는 용어도 점령지간 거래에서 “내독 교역”(Innerdeutscher Handel)으로 정립되었다.<sup>4</sup> 동서독간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에 교역도 고초를 겪었다. 이 글의 관심사인 2차 베를린 위기 시기는 냉전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긴장완화기(1968~1988)에는 동서독이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힘입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화해를 모색하면서 교류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동서독 경제협력이 교역 이외에 산업생산과 국제금융 분야로 확대되었다. 4기인 통일기(1989~1990)는 양독간 교역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역을 통일로 수용하는 방식을 모색한 시기였다.

동서독 교역을 규율하는 법제는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4대국 점령기에 독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포츠담 협정」은 독일 전역과 베를린을 4대국

---

<sup>4</sup> Margit Roth, *Innerdeutsche Bestandsaufnahme der Bundesrepublik 1969-1989. Neue Deutung* (Wiesbaden: Springer, 2013), pp. 478.

이 분할 점령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기로 했다. “점령독일을 규율할 몇 개의 경제원칙(B)” 14조는 “점령기간 중 독일은 단일한 경제단위(a single economic unit)로 취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물품의 반출입 부문은 “전체로서의 독일”(Germany as a whole)에 적용할 것에 합의했다. 당시에 점령지간 교역을 지배했던 규칙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하에 허가”였다.<sup>5</sup> 1949년 9월 18일에 공포된 영국과 미국 점령지역의 군정법 53호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규칙으로 삼았다.<sup>6</sup>

동서독 정부가 교역에 관하여 맺은 최초의 조약은 동독정부가 수립된 직후 1949년 10월 8일 체결된 「프랑크푸르트 협정」이다. 이 협정은 교역에 따른 결제기준, 거래물품 계정의 구분, 베를린 지역에 대한 규칙 등을 규정했다. 1951년 9월 20일에 체결된 「베를린 협정」<sup>7</sup>은 동서독간의 물품거래 및 용역거래의 절차와 방법, 급부에 대한 대금지급의 방법 등을 규율했다. 주요 내용은 「프랑크푸르트 협정」을 이어받아 구체화했는데, 서비스 교역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협정은 상품거래, 용역거래, 대금지불거래, 기타, 부칙의 총 5부, 18개조와 부속문서(전력, 석탄 및 용역 등에 관한 문서)로 구성되었다. 교역은 허가를 원칙으로 물품목록을 매년 교환하도록 했다. 일방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지만 제16조에는 “이 협정은 매년 말 3개월 전에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협정폐기 규정은 나중에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베를린 협정」은 통일될 때까지 동

5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2008).

6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 die deutsch-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1949-1969* (Köln: Böhlau Verlag, 2006), pp. 47.

7 협약의 공식명칭은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Abkommen d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Notenbank(DM-Ost)이다.

서독 교역에서 “꾸준히 적용된 틀”로 작용했다.<sup>8</sup>

## 2. 교역의 실제

동서독 교역은 실물과 금융 두 측면에서 일반적인 국가간 무역과는 구별되었다. 금융부문에서는 결제수단, 결제방식, 제도가 달랐다. 첫째, 환율이 적용되지 않고 “결제단위”(Verrechnungseinheit: VE)라는 인위적 결제수단이 활용되었다. 둘째, 동서독 교역은 국제거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 청산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의 중앙은행에 청산계정을 개설하고 수출과 수입액을 기장해 두었다가 일정기간 단위로 대차의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셋째, 교역 초기부터 스윙(Swing) 제도를 도입했다. 양국간 무역에서 수출과 수입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산결제방식에서는 수지불균형에 대비하여 상대국 은행에 대월을 인정함으로써 불균형을 흡수하는 스윙제도를 덧붙인다. 스윙의 임무는 오로지 입금과 지출간의 단기적 불균형 상태를 균형 있게 해줌으로써 지불교류의 연체현상을 막는 데 있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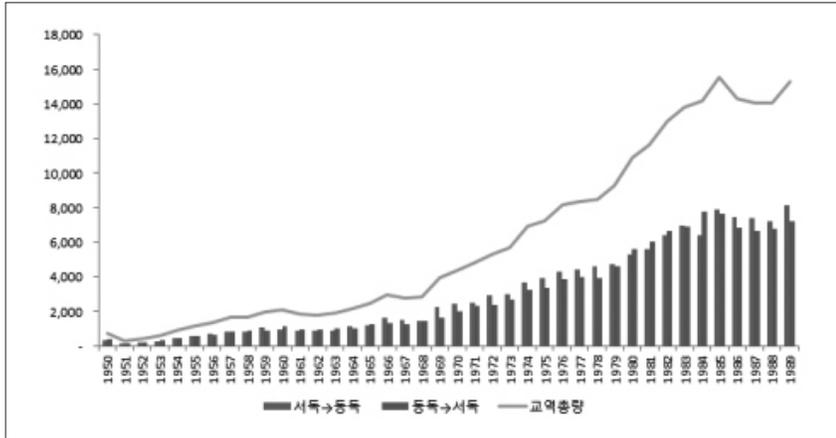
실물 부문에서 교역의 양은 동서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67년까지 매년 소폭 늘어나 50~60년대에 이미 전쟁 이전 수준까지 접근했다.<sup>10</sup> 1950년부터 1989년까지 40년간 서독은 동독에게 123,176 백만 VE를 동독은 서독에게 117,628 백만 VE를 공급했다. 동독은 서독에게 받은 양의 95.5%를 준 셈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교역량이 준 것은 주로 동독경제의 부진에

<sup>8</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129–130.

<sup>9</sup> 김영윤,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교류: 내독교역이 남북한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309~310쪽.

<sup>10</sup> Peter Fäßler,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Die deutsch-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nach dem Mauerbau (1961–1969),” <<https://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26613/deutsch-deutsche-wirtschaftsbeziehungen?p=all>, 2012) (검색: 2020.2.15).

기인했다.<sup>11</sup>



자료: Gey(2006), 그림으로 표시함

[그림 1] 동서독 교역의 양

교역의 질은 동서독 교역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다. 이미 「프랑크푸르트 협정」에서는 교환되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매년 합의하도록 했다. 동서독이 거래한 물품은 대칭을 이루지 않았다. 동서독은 각 진영에서 산업이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 속했지만 양자의 관계에서는 체급의 차이가 있었다. <표 1>에서 보듯 양독이 공급한 전체 물품 중에서 원자재 및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에 핵심이 되는 철강산업과 화학산업 부문은 서독의 공급량이 공급의 공급량을 훌쩍 넘어섰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투자재도 동독은 10% 수준에 머물렀지만 서독은 20% 수준을 넘었다. 1969년의 경우 동독이 서독에게 공급한 물품은 약 44%가 농산물과 섬유제품이었고 기계류나 화학제품은 15.4%에 불과했다. 반면에 서독이 공급에 공급한 품목은 화학제품이 20.7%, 기계류

<sup>11</sup> Bundestag,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Drucksache 12/7820 (1994) pp. 149.

가 15.7%를 차지했다.<sup>12</sup> 이러한 교역품목의 구조는 통일 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아 1987년대에 전체 반출량 중에서 기계 및 운송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독은 11.35%에 불과했지만, 서독은 33.28%를 차지했다.<sup>13</sup> 동독은 서독에 소비재를 판매하는 값으로 서독으로부터 기계와 설비를 구입한 셈이다.<sup>14</sup>

〈표 1〉 동서독 교역물품의 구성

단위 : %

	서독→동독					동독→서독				
	1956-60	1961-65	1966-70	1971-75	1976-80	1956-60	1961-65	1966-70	1971-75	1976-80
자재/공업	52.7	56.6	51.8	54.0	52.4	57.7	51.0	30.9	38.6	47.3
철강	27.8	29.5	16.0	12.8	9.8	0.6	0.9	4.7	7.7	6.5
석유						18.3	14.3	2.9	9.8	
화학	13.5	16.8	21.3	23.4	20.4	9.4	7.8	8.3	9.0	
투자재	21.9	17.3	22.8	23.7	28.3	10.5	10.5	13.6	10.7	10.6
기계제	12.3	11.1	16.4	17.4	16.5	7.5	5.9	5.8	3.7	3.1
소비재	8.0	7.3	8.3	9.5	7.5	18.6	22.0	29.4	30.6	27.1
농산물	17.3	18.5	16.5	11.7	10.6	13.1	16.2	25.6	19.5	14.3

자료: Klinner(1976); Lambrecht(1982).

### 3. 교역에 대한 동서독 정부의 입장

동서독 교역에 대한 양독 정부의 입장은 양독관계에 대한 태도, 교역의 이해관계, 베를린 문제로 나누어 조명할 수 있다. 먼저 동서독은 서로 독일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있다며 각자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국가로 인정하

<sup>12</sup> Horst Wulf, "Millionenvorteile im innerdeutschen Handel?" *Die Wirtschaftsdienst*, vol. 50, no. 10 (1970), pp. 608-611.

<sup>13</sup> Jürgen Stehn·Holger Schmieding, "Spezialisierungsmuster und Wettbewerbsfähigkeit: eine Bestandsaufnahme des DDR-Außenhandels" *Die Weltwirtschaft*, vol. 1 (1990), pp. 60-77.

<sup>14</sup> Peter Gey, "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9-1989" 『질서경제저널』, vol. 9, no. 2 (2006), pp. 89-111.

지 않으려 했다. 동서독은 「베를린 협정」의 명칭을 상대방의 국가 이름을 쓰지 않고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 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으로 표시함으로써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에서 일치했다.<sup>15</sup>

차이점은 분명했다. 서독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1955년에 천명한 할슈타인 원칙은 이런 의지를 반영했다. 서독은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에 속하고 언젠가는 다시 통일을 이룰 두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독관계가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로 설정되기를 꺼렸다. 반면, 동독은 자신의 단독대표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동서독 관계에 대해서는 “두 국가론”(Zwei-Staaten-Theorie)에 입각하여 동서독을 각각 독자적인 국가로 보고 통상적인 국가간 관계로 세우고자 했다.<sup>16</sup>

양독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려는 서독의 입장과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로 보려는 동독의 태도는 교역부문에서도 투영되었다. 서독은 동서독 교역을 대내거래로 보고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지 않은 반면, 동독은 대외무역법을 적용했다. 교역 통계도 서독은 국내경제 항목에, 동독은 대외경제 항목에 넣어 산출했다.<sup>17</sup> 서독은 반출과 반입, 동독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주무부처도 서독은 경제부의 대외무역국이 아닌 산업국에서, 동독은 대외 및 내독 무역부(이하 “대외무역부”)<sup>18</sup>에서 취

15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Deutsch-deutsche Beziehungen im Kalten Krieg*, (Köln: Böhlau Verlag, 1997), pp. 72.

16 Peter Ludz, *Die DDR zwischen Ost und West*, (München: C.H. Beck, 1977), pp. 287.

17 Peter Gey, “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9–1989”.

18 대외무역부(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는 1949년 11월의 내독무역, 대외무역, 물자조달부(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Handel, Außenhandel und Materialversorgung)를 1950년에 개칭한 부처다. 1967년부터는 대외경제부(Ministerium für Außenwirtschaft)를 거쳐 1973년부터 대외무역부(Ministerium für Außenhandel)로 바뀌었다.

급했다.<sup>19</sup>

상당한 태도는 협상의 당사자에서도 드러났다. 서독은 내독교역 실무를 점령지간 교역 신탁소(Treuhandstelle für den Interzoenhandel, 이하 “신탁소”)에게 맡겼다.<sup>20</sup> 공공성을 부여받은 민간기구가 교역의 담당자였던 셈이다. 반면 동독은 주무부처인 대외무역부가 협상의 당사자로 나섰다. 서독의 신탁소와 동독의 대외무역부는 40년 동안 양독 정부간 협상과 의사소통의 채널로 기능했다.<sup>21</sup>

서독이 동서독 교역을 일반적인 국가간 무역이 아닌 특수한 교역으로 보려는 태도는 국내적으로 종종 문제를 낳았지만 줄곧 견지되었다.<sup>22</sup> 서독은 대외적으로도 교역의 특수성을 관철시켰다. GATT의 일반관세와 무역협정에 관한 1951년 4월 21일부 토키(Torquay)의정서 의정서 부속문서에서는 “서독의 GATT 가입은 독일을 원산지로 하는 내독교역의 현 상태, 또는 현 규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게 함으로써 특수성을 인정받았다.<sup>23</sup> 내독교역의 특수성은 1957년 EE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의 부속

---

19 Klaus Bolz, “Die Instrumentalisierungsmöglichkeit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Die Wirtschaftsdienst*, vol. 66, no. 9 (1986), pp. 446–450.

20 1949년 11월 2일에 설립된 이 기구는 1982년부터 상공업신탁소(Treuhandstelle für Industrie und Handel)로 바뀌었다. 신탁소는 상공회의소의 한 기관이지만 서독 연방정부와 서베를린 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동독 대외무역부와 직접 연락, 협상, 합의를 도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신탁소는 연방경제부로부터의 지시와 업무감독을 받았으며, 1964년 이후에는 소장은 내독거래의 전권수임자인 연방경제부의 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직원은 연방정부에 의해 임명 또는 면직되도록 했다. 이효원,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

21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3.

22 1973년 5월 28일 서독 바이에른 주정부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을 심판을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 형식은 국제법적 조약이지만, 특수한 내용은 특별한 내부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구역간 교역은 대외무역이 아니었고 지금도 동서독 교역은 대외무역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기본법 7조 1항의 동서독간 교역에서는 “동서독 교역은 대외무역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관세선이 합의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23 이장희 외, 「동서독 내독거래의 법적 토대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에 주는 시사점」.

의정서인 “내독거래 및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정서”를 통해서도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오는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sup>24</sup>

그러나 동서독 교역의 특수성은 EEC에서 논란을 낳았다. 일부 회원국,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서독이 동독에서 물건을 가져와 유럽시장에 다시 수출함으로써 동독이 “비밀” 또는 “13번째” 회원국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sup>25</sup> 그러나 서독을 거쳐 유럽시장으로 가는 동독제품은 극히 일부였다. 이는 독일의 유럽시장 점유를 경계하던 프랑스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했다.<sup>26</sup> 서독은 일부 국내외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동서독 교역의 특수성을 주장했다.

둘째, 동서독이 교역에 가지는 이해관계에는 비대칭성을 띠었다. 서독에게는 동서독 교역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으나, 동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서독의 전체 무역량 대비 내독교역의 비중은 1.8%에 그친 반면, 1974년 동독에게는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27</sup> 1984년만 보더라도 서독의 대외무역 중에서 동독과의 교역은 1.5% 수준에 머문 반면 동독의 대외무역에서 서독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웃한 체코와 폴란드를 넘고 소련에 다음 가는 두 번째에 위치했다.<sup>28</sup> 1988년 동독의 OECD 국가와의 대외무역 중 서독은 수출의 58.5%, 수입의

24 Horst Wulf, “Millionenvorteile im innerdeutschen Handel?” *Die Wirtschaftsdienst*, vol. 50, no. 10 (1970), pp. 608–611.

25 Jürgen Nitz, “Wirtschaftsbeziehungen DDR–BRD: Bestimmungsfaktoren, Tendenzen, Probleme und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0/89 (1989), pp. 3.

26 Maximilian Graf, “Die DDR und die EWG 1957–1990,” *Revue d’Allemagne et des pays de langue allemande*, vol. 51, no. 1 (2019), pp. 21–35.

27 Bernhard Kliner, “25 Jahre innerdeutscher Handel”, *Die Wirtschaftsdienst*, vol. 56, no. 9 (1976), pp. 467–471.

28 Klaus Bolz, “Die Instrumentalisierungsmöglichkeit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Wirtschaftsdienst*, vol. 66, no. 9 (1986), pp. 446–450.

58.2%를 차지했다.<sup>29</sup> 양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교역은 동독에게 중요했다. 동독이 서독에서 들여오는 자재와 생산재 등 주요 물품은 자체생산도, 동구권으로부터 수입하기도 어려운 품목이었다.<sup>30</sup>

반면에 서독이 동서독 교역을 줄곧 유지한 이유는 정치에 있었다. 서독에게는 동독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sup>31</sup> 즉, 서독은 교역이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 주체들 사이에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독은 종종 실물부문의 반출금지나 스윙규모 조정 등을 통해 동독으로부터 교통 및 통행 확보, 망명자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거나 동독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셋째, 동서독 교역에는 항상 베를린 문제(Berlin-Frage)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sup>32</sup> 4전승국의 분할통치하에 놓인 베를린은 동독지역 한 가운데에 섬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지배력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베를린 문제는 뜨거운 정치적 이슈였지만 경제적으로도 동서독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4대국 점령기 중인 1948년에 소련군정이 베를린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1차 베를린 위기가 닥쳤다. 서방측은 군정간 협정을 무효화시켜 교역을 중단하는 한편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자 항공편으로 서베를린에 물자를 공급했다. 1차 베를린 위기는 1949년 「제섭-말리크 협정」(Jessup-Malik Agreement) 협정을 통해 해소되고 교역은 재개되었다.

29 Jürgen Stehn·Holger Schmieding, "Spezialisierungsmuster und Wettbewerbsfähigkeit: eine Bestandsaufnahme des DDR-Außenhandels", pp. 61.

30 Horst Lambrecht, "Der innerdeutsche Handel - ein Gütertausch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Wirtschaf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1982 (1982), pp. 3-17.

31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255쪽.

32 베를린 문제의 핵심은 서베를린의 지위로서, 서독귀속이나 자유도시화, 베를린 전체의 동독귀속이나 자유도시화 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였다. 김진호,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평화연구』 제20권 2호 (2012).

교역은 재개되었지만 1차 베를린 위기는 동서독 교역이 베를린을 둘러싼 정치와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예고편이었다. 특히 냉전기에 소련과 동독은 서베를린을 포함한 베를린 전체에 지배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에 맞선 서독이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설정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베를린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1차 베를린 위기를 넘긴 동서독 교역은 분단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진행되다가 1958년에 시작된 2차 베를린 위기를 맞아 1960~61년에 폭풍에 휩싸이게 된다.

### III. 베를린 통행문제와 동서독 교역

#### 1. 배경

1949년 5월 23일에 서독정부가, 같은 해 10월 7일에 동독정부가 각각 수립되면서 독일이 분단된 이후 동서독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체제경쟁에 나섰다. 서독은 기민당(CDU)의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 하에 경제장관 에어하르트(Ludwig Erhard)를 중심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경제건설에 몰두했다. 동독은 사회주의 통합당(SED, 이하 “사통당”)의 지배하에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집권한 가운데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에 따라 경제건설에 나섰다.

1950년대에 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둔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서독경제는 마샬 플랜을 필두로 한 서구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에 시동을 걸었다. 이 때 한국전쟁은 “코리아 붐”으로 불릴 만큼 세계시장에서 서독제품의 수요를 폭증시켜 서독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33</sup> 한편, 동독은 전쟁 통에 산업생산의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고

<sup>33</sup> Werner Abelshausen,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Von 1945 bis zur Gegenwart*,

서독의 루르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강공급이 위태로워진데다 소련에 대한 전쟁배상금에 시달리면서 경제 재건에 곤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는 1950년에 경제상호경제회의(Comecon)에 가입하여 동구권에 급속하게 편입되면서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독에서도 동독의 경제성장을 “경제기적”이라고 볼 정도였다.<sup>34</sup>

동서독이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분단 초기에 교역이 중단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서독 에어하르트 경제부 장관은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발효된 지 넉 달 정도 지난 1950년 2월 8일, 동독에 철강제품의 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외형상 철강부문에 집중된 동독의 주문을 바로잡고 서독에 비해 저조한 동독의 공급을 늘이는 등 교역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에는 철강제품의 반출이 동독의 대소련 전쟁배상을 통해 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서독이 반출내역을 서방국에 알린다는 조건하에 8월 11일 양독간 협상이 타결되어 철강제품의 교역은 재개되었다.<sup>35</sup> 서독의 철강반출 제한 조치는 동서독 교역이 정치와 경제가 한데 얽혀 진행된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동독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동독에게 서독과의 교역은 한편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동독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서독 교역과 경제의 서독의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위원회 위원장 라우

---

(München: C.H.Beck, 2004), pp. 156-159.

<sup>34</sup> Gernot Schneider, *Wirtschaftswunder DDR – Anspruch und Realität* (Köln: Bund Verlag, 1990).

<sup>35</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Deutsche Beziehungen im Kalten Krieg* (Köln: Böhlau Verlag, 1997), pp. 54-56, 68-69.

(Heinrich Rau)는 서독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의 비중을 줄이고 자체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탈린 노선에 따라 중공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던 동독은 아이젠히텐슈타트(Eisenhüttenstadt)에 대규모 철강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물품을 동구권 국가로부터 들여온다는 수입선 다변화 계획도 모색했다.<sup>36</sup>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의존도 탈피에서 한걸음 나아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1958년 사통당 5차 전당대회에서 경제적 핵심과제로 “추격과 추월”(Einholen und Überholen)을 공식화했다. 이는 사회주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서독을 추격하고 넘어서겠다는 선언이었다.

한편,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후 19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베를린은 또 다시 국제정치의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1958년 11월 27일, 소련의 후르시초프(Nikita Chruschtschow)는 베를린에서 4전승국의 군대를 모두 철수하고 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서독, 동독, 베를린의 세 국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3국가설(Drei-Staaten-Theorie)을 주장했다. 베를린은 자유도시로서 승전국의 지위가 소멸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련정부는 베를린에 대한 접근권한을 동독정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국이 서베를린에서 방을 빼라는 최후통첩은 동독을 승인받고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헤게모니를 고착화하여 이를 서방측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서독군에 대한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었다.<sup>37</sup> 2차 베를린 위기가 출현한 순간이었다.

서방측은 후르시초프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12월 31일, 서방승전국들은 소련정부에 서베를린을 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소련의 제안을

<sup>36</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108-109;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66-67.

<sup>37</sup> 김진호,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959년 5월 11일에서 6월 20일까지 제네바 외무부 장관 회의가 열렸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1960년 상반기까지 베를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예정되었던 아이젠하워와 후르시초프간 회담도 U-2기 사건<sup>38</sup>으로 열리지 않게 됨으로써 2차 베를린 위기는 미궁에 빠져 들었다.

## 2. 경과

2차 베를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60년 8월 16일에 동서독 교역에 관한 「베를린 협정」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교역할 상품목록을 매년 합의했으나, 이 개정으로 한번 합의하면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하고 어느 일방이 변경을 원할 경우에만 논의하도록 했다. 세부계정은 4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으며, 세부계정 1의 품목을 확대하기도 했다. 동서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서 「베를린 협정」을 개정된 것은 동서독 교역이 동서독 관계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서독이 「베를린 협정」을 개정된 것은 베를린에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했다.<sup>39</sup>

그러나 「베를린 협정」 개정 직후 동서독 교역은 정치적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이즈음 서독의 피추방자 연합회(Bund der Vertriebenen)는 “고향의 날”(Tag der Heimat) 행사를 서베를린에서 열기로 했다.<sup>40</sup> 서독 외무부는 베

<sup>38</sup> 1960년 5월 1일 미국의 정찰기 U-2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갔다가 소련군의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이다.

<sup>39</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1-222.

<sup>40</sup> 추방자 연합회는 2차 대전 종전 후 국경선 변경으로 외국에서 쫓겨난 독일인이 만든 단체로 1957년에 결성되었다. 단체는 성격상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불편함을 낳기도 했고, 반공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독은 이 조직에 미국이 연루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 “고향의 날”은 보통 9월 첫 일요일에 베를린에서 개최한 후 지역별 행사로 이어진다. 종종 총리가 참석하기도 하는데, 2007년에는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축사를 했다.

를린 문제가 국제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사의 개최를 우려했지만 연합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자 했다. 브렌타노(Heinrich von Brentano) 외무장관의 조치는 이 대회에서 예정되었던 아테나워 수상의 연설을 만류하는 정도였다.<sup>41</sup>

아무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대규모 행사를 서베를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동독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960년 8월 29일, 동독은 추방자 연합회의 행사가 예정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서독인의 서베를린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같은 기간에 서독인의 동베를린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개최되는 가을 박람회에 서독인의 방문을 제한한다는 선언도 덧붙였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라이프치히 박람회는 참가한 기업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동서독 교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터였다.<sup>42</sup> 9월 8일에는 국경을 무기한으로 통제하고, 서독인이 동베를린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서독이 발급하는 여행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sup>43</sup>

공은 서독으로 넘어왔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아테나워 수상은 이탈리아로 휴가를 가 있었고, 외무장관 브렌타노는 남아메리카에 출장 중이었으므로 사태의 수습은 경제부장관 겸 부수상인 에어하르트(Erhardt)가 맡았다. 대응의 핵심 사안은 동독이 취한 서독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하여 교역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어느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전면적 교역중단이었다.

경제부는 교역중단에 회의적이었다. 에어하르트 장관은 법률적 모호성을

41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3.

42 Jana Wüstenhagen & Karsten Rudolph, "13. August 1961 –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auf der Leipziger Messe," *Hallische Beiträge zur Zeitgeschichte*, vol. 10 (2001).

43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28–129.

근거로 교역중단에 반대했다. 「베를린 협정」에는 베를린 통행과 교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구두합의도 서독지역과 서베를린 사이의 인적 통행이 아니라 물품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교역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sup>44</sup> 경제부는 교역중단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교역에서 동독의 핵심이익인 철강산업의 반출제한 조치는 동독이 별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이나, 동독이 이미 동구권에 편입되어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sup>45</sup>

반면, 서방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동독에 대하여 “힘의 우위의 정치”(Politik der Stärke) 노선을 견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 아데나워는 동독에 대하여 강경노선을 취하고자 했다. 그는 휴가지에서 에어하르트의 위기관리를 미적지근하다고 비난하면서 동독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sup>46</sup> 외무부 장관 브렌타노 역시 대동독 강경론자였다. 나중에 수상이 되어 동방정책을 펼치게 되는 당시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Willy Brandt)도 같은 입장이었다. 수상실, 외무부, 서베를린 등 강경파는 경제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철강, 기계, 전자제품 등 특정 산업에서 부분적인 반출금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부분적인 반출금지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동독경제 전체를 흔들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방동맹국의 동참이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했다. 서독 단독으로 제재조치를 취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7</sup>

외무부는 나토 회원국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

<sup>44</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sup>45</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0.

<sup>46</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6-227.

<sup>47</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5.

인 미국은 서독에게 동독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서독 교역에 시선이 비박했던 프랑스도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독정부는 우방국이 대동독 경제제재가 유력한 압력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는데 그치고 이들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sup>48</sup> 서독은 대동독 경제제재에서 우방국의 공조를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서독 경제부는 1960년 9월 15일부터 서독과 서방연합국의 작업반을 만들어 가능한 제재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독 선박의 운행 금지, 프랑크푸르트 소재 동독 교역사무소의 폐쇄, 동독 공급물품의 수령거부 등이 검토되었다.<sup>49</sup>

서독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한 동독의 대응조치도 예상해야 했다. 교역을 중단한다면 동독이 서독의 베를린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맞설 것이 예상되었다. 예상되는 대응조치의 효과와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1차 베를린 위기 때는 항공편으로 물자를 실어 날랐지만 수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항공편으로는 필요한 물량의 40%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동독이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전개되어 결국 서베를린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경제부는 다른 동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주목하면서 외무부가 다른 나라의 동참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하르트는 아데나워에게 국제적 공조 없이 베를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발생가능한 일 중에서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50</sup>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미국은 결코 서베를린을 잃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서독을 안심시켰다.<sup>51</sup>

48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1.

49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6-227.

50 Ibid, pp. 227

51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1.

서독정부는 교역중단을 준비했다. 9월 20일 정부는 기업에게 라이프치히 박람회 참가를 개별적으로 허락함으로써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정부는 박람회 참가 자체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약 참가하는 기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연합회는 회원사에게 박람회 참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52</sup>

이런 과정을 거쳐 서독내각은 개정된 「베를린 협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960년 9월 30일, 이듬해부터 「베를린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 에어하르트는 참석하지 않았고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는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과 아데나워 자신을 포함하여 강경파의 결정은 교역이 중단될 경우 동독경제가 받게 될 타격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계산이었다. 제재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서방국이 어깨 걸고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 어찌됐든 이 「베를린 협정」 파기 선언은 동서독 교역 40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sup>53</sup>

### 3. 교역 재개 결정

동서독 교역은 서독정부가 베를린협정 파기를 선언한 1960년 9월 30일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증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동독은 통행제한 조치를 발표했을 때 서독의 대응을 예상해 보았다. 서독이 실제로 교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서방측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은

---

<sup>52</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2-133;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7-228; Jana Wüstenhagen & Karsten Rudolph, "13. August 1961 -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auf der Leipziger Messe," pp. 112.

<sup>53</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 133;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29-230.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태껏 한 번도 「베를린 협정」 파기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sup>54</sup>

그렇다고 서독이 교역을 중단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동독의 대외무역부 장관 라우는 교역중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1961년 1월부터 서독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되면 동독 수입량의 약 10%가 줄어들게 되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교역이 끊어지면 1961년 1/4분기에만 기계, 섬유, 건설, 화학산업에서 400~500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우는 서독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대체하는 전략, 일종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세워 두었다. 이것이 1961년에 공식화한 방해차단(Störfreimachung)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협상이 아니라 물품에 따라 개별적인 협상을 벌이거나 서독의 연방주와 협상한다는 계획도 세워두었다.<sup>55</sup>

서독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동독은 실제로 서독이 교역중단을 발표한 이후 서독과의 협상을 준비했다. 서독정부는 「베를린 협정」 파기를 선언할 때 동독과 협상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타협의 공간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1960년 10월 4일, 울브리히트는 직접 나서 서독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으나 서독과 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sup>56</sup> 협정 파기 선언 국면에서도 동서독은 다시 협상할 공간을 열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서독과의 협상준비와 아울러 동독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동구권과의 협력이었다. 서독이 교역중단 조치를 취할 때 동맹국의 반응에 주목한 것처럼

<sup>54</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 233;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4.

<sup>55</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34-235; André Steiner, *Von Plan zu Plan. Eine Wirtschaftsgeschichte der DDR*, München: Aufbau Verlaggruppe, 2007, pp. 135.

<sup>56</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5.

동독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구권, 특히 소련의 지지와 지원을 확약 받는 일이었다. 울브리히트는 11월 25일 대외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대동하고 소련으로 달려갔다. 그는 엄살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국가계획위원회의 분석결과를 설명하면서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마침내 11월 30일 울브리히트는 후르시초프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함께 동구권 국가들도 공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sup>57</sup> 서독과 협상에 임할 때 든든한 밑천을 마련한 셈이다.

정작 「베를린 협정」의 파기를 선언한 서독은 한바탕 흥역을 앓게 되었다. 교역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은 교역중단 조치가 탐탁지 않았다. 독일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연합회는 한편으로는 1961년 봄 라이프치히 박람회 불참을 수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교역중단 결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의 반응도 거셌다. 사민당 일부 의원은 연방정부 뿐 아니라 교역중단에 찬성한 자당소속의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를 비판했다. 자유당 일부 의원 역시 교역중단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의 반응 뿐 아니라 주변국의 입장도 계속 확인해야 했다. 외무부는 아테나워에게 미국만 서독의 입장을 굳건히 지지할 뿐이고 다른 나라는 공조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sup>58</sup>

동서독간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동독 입장에서조차 소련이 지원을 약속했다고는 하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만큼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철강부문은 경제운용에 기반이었는데, 실제로 교역이 중단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했다. 철강재 공급에 대하여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같은 중립국 뿐 아니라 다른 서방국가와에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결

<sup>57</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 236;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6; André, Steiner, *Von Plan zu Plan*, pp. 135.

<sup>58</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37-240.

국 서독과의 교역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다.<sup>59</sup> 서독과의 교역이 경제운용에 중요한 마당에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취하더라도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고, 서독이 「베를린 협정」 파기선언을 할 때 동독과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니 협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서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방국의 공조였다. 그러나 동독이 소련의 지원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서독도 우방국의 공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주요국 뿐 아니라 다른 나토 회원국이 동독과의 교역을 차단할 방법은 찾기 어려웠고, 개별 국가가 동독과 무역을 하면 그만이었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마저 스스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기는커녕 서독이 나토회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1961년에는 법률적 근거 없이, 즉 「베를린 협정」 파기를 유효한 상태로 두고 동서독 교역을 이어나가면 어떠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 발 빼는 태도였다.<sup>60</sup>

10월 말에 이르면 서독정부는 「베를린 협정」의 기한연장을 놓고 동독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11월 9일, 아데나워는 국무회의에서 동독과의 협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동서독의 협상지가 모아지면서 대화가 순조롭게 개시되는 듯 했으나, 변수가 튀어 나왔다. 동독은 서독에게 협상을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정부가 틀어쥐고 있으니 신탁소를 내세우지 말고 서독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요구였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동서독 교역을 국가간 무역이 아닌 특수한 교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서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신 11월 17일 서독 경제부와 동독 대외무역부의 실장급 인사가 몰래 만나 서독정부가 신탁소 대표 레오폴트(Kurt Leopold)에게 가급적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라고 하겠다는 선

<sup>59</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6–138.

<sup>60</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39.

에서 통합되었다. 여기에서 양자는 교역에 관한 협상을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다.<sup>61</sup>

12월 4일부터 서독 신탁소와 동독 대외무역부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은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서독정부는 레오폴트에게 협상문구를 성안하는 권한까지 위임했다. 서독대표 레오폴트와 동독대표 베렌트(Heinz Behrendt)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만나 협상을 벌였다. 결국 12월 29일, 양국은 1961년부터 교역을 재개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타협이 이루어졌다. 동독은 동서독간 통행과 서독인의 베를린 진입을 자유롭게 할 것을 약속하고, 서베를린으로 진입할 때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도로망 확충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독은 라이프치히 박람회 참가하거나 동독과 교역하는 서독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sup>62</sup>

교역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으로 아데나워는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는 협정 파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는데, 다시 철회하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컸다. 서독측이 얻은 것은 서베를린에 대한 통행을 확보하는 정도였다. 서독 안에서는 상황이 더 극단으로 치닫한다면 베를린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확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의 과감한 결정에 비해서는 초라한 결과였다. 반면 동독은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 교역의 중단은 동독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올 요인이었으나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서독의 교역중단 위협을 핑계 삼아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1960년 가을 동서독 교역의 한판 승부에서 판정승은 동독의 몫이었다.

---

61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41-243;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40.

62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41-244.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45.

## IV.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교역

### 1. 교역 재개 후 동서독의 교역정책

중단위기에 직면한 동서독 교역이 1961년에 재개되었다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동서독은 각자 뒤끝이 있었다. 서독에서는 1961년부터 특정물품의 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취소조항(Widerrufsklausel)이 발효되었다. 석탄과 철강 등 중요물품이 베를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물품의 반출을 즉각 금지한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이 조항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지만, 「베를린 협정」 파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미세한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과 동독에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sup>63</sup>

서독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동독은 서독의 「베를린 협정」 파기 선언으로 경제적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독은 서독의 취소조항을 자국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sup>64</sup> 국가계획위원회는 1961년 1월 4일, “서독 군사집단의 자의적인 파괴공작에 맞서 동독 경제를 보호”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방해차단”이라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 노선은 동서독 교역으로 인한 동독경제의 서독 의존도를 차단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었다.<sup>65</sup>

63 Jörg Roesler, *Momente deutsch-deutsche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1945 bis 1990*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2006), pp. 123-124.

64 Peter Fäßler,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65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48. 나아가 1963년 “신경제체제”(Neues Ökonomisches System)라는 슬로건으로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 때 사통당 지도부는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분야에서도 서독 자본주의 체제에 우월함”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Jörg Roesler, *Die Wirtschaft der DDR*, pp. 34). 1960년대 말에 이르면 동독은 서독에 대하여 “추격을 넘어 추월로”(Überholen ohne einzuholen)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서독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아간다.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은 아껴 쓰고, 대체하고, 공급망을 바꾼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독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적게 써서 생산하고, 수입물품을 대체하는 물품을 자체 생산하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소련과 동구권 국가로부터 들여온다는 것이었다.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도 염두에 두었다.<sup>66</sup> 그러나 동독의 자립경제 노선은 달성하기 쉽지 않았다. 국가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보고서에서 경제 홀로서기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네 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기술부족으로 대체생산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기술수준이 필요한데 생산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둘째, 자재와 생산역량의 병목현상으로, 기술이 뒷받침되어도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어려웠다. 셋째, 계획경제 자체의 한계로서, 수립과 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 서독에서 수입해 온 크랭크축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대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압력 게이지를 동독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 압력 게이지는 다시 서독에서 들여와야 했다. 넷째, 현장의 관행으로 생산현장에서는 서독에서 들여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물품을 동구권에서 들여오자니 비용도, 공수도 많이 들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sup>67</sup>

한편, 동독경제는 1960년대 초에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초기에 중공업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는 때를 맞이하는 경향이 있다.<sup>68</sup> 동독의 경우에는 성장의 지체 현상이 1960~61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sup>66</sup> Peter Fäßler,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sup>67</sup> Ibid.

<sup>68</sup>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발전을 중심으로 경제도약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내지 못했다.

〈표 2〉 1950~60년대 동독의 경제위기

단위 : %

		1959	1960	1961	1962	1963
산업생산	목표	10.5	9.9	9.4	8.8	9.2
	실제	13.1	8.1	6.0	6.1	4.3
노동생산성	목표	8.1	9.4	9.1	8.9	9.6
	실제	9.6	9.4	5.0	6.6	4.8
투자	목표	19.7	14.5	11.5	8.8	8.3
	실제	15.3	9.5	1.4	1.9	2.5

주: 목표는 7개년 계획상의 목표

자료: Steiner(1999, 40)

서독의 대동독 교역정책은 1961년 상반기 접어들어 유화책과 강경책을 병행하면서 미세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신탁소는 1961년 1월에 동독에게 베를린으로 가는 열차통행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물자공급 및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던졌다. 물론 홀로서기 전략을 강하게 추진한 동독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서독은 이후에도 경제적 곤경에 처한 동독에게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당근을 제공하면서도 1960년 12월에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동독은 꿈쩍하지 않았다. 차관은 위신의 문제로서 장기적인 거래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서독의 제안을 거부했다.<sup>69</sup>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서독 경제부는 동독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통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도는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즉, 동독에게 교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교역의 주요 기능은 동독의 정치적 의도를 꺾는 것이 아니라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확고하게

<sup>69</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51-155.

지켜내고 이를 위해 교역을 단지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sup>70</sup>

## 2. 베를린 장벽 설치

후르시초프의 최후통첩으로 시작된 2차 베를린 위기는 1961년 상반기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6월 3, 4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미소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케네디는 7월 25일 언론을 통해 베를린 문제에 관한 3대 기본요소를 발표한다. 서방 연합군의 서베를린 주둔권을 보장하고 서베를린을 오가는 교통편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며 베를린의 미래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서베를린 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sup>71</sup>

이즈음 미국과 소련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서서히 냉전에서 벗어나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서방측이 서베를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후르시초프는 베를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서 슬그머니 물러섰다.<sup>72</sup> 미국도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다. 베를린 문제가 다시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해야 했다.

미국과 소련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베를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소련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러나는 것이 어려웠다. 이때 수를 찾은 것이 베를린에 벽을 세우는 것이었다. 울브리히트는 1961년 6월 15일 서베를린의 정치적 중립화 및 서베를린 둘레에 장벽

<sup>70</sup> Ibid. pp. 155-156.

<sup>71</sup>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118~119쪽; Gerhard Wettig, *Chruschtschows Berlin-Krise 1958 bis 1963*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6).

<sup>72</sup> 김진호,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을 설치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아무도 장벽건설을 구상한 적이 없었으나 동베를린으로부터의 탈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를린 장벽의 설치는 8월 3일 모스크바에서 후르시초프와 울브리히트의 회담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는 울브리히트에게 장벽 건설에 필요한 요건과 환경을 제공했다.<sup>73</sup>

1961년 8월 13일, 동독은 동서 베를린 경계에 벽을 치기 시작하여 23일 까지 동서 베를린 통행로 80개 중 73개를 폐쇄했다. 서독과 서베를린의 군사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베를린이 비무장, 자유도시화 및 동독 수도의 거주지가 되지 않는 한 동독시민은 허가 없이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sup>74</sup> 오랫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이다. 동독은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했다. 8월 22일에는 당시까지 동독을 방문할 때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서독인에게만 비자발급을 요구했으나 비자발급을 서베를린 주민에게도 확대적용하는 한편, 동서 베를린을 오가는 통로 7개 중에서 2개는 서독지역 거주 서독인에게, 4개는 서베를린 거주 서독인에게, 1개는 연합국에게 할당함으로써 통행을 제한했다.<sup>75</sup>

베를린 장벽 설치에 서방 3국은 소련에 서한을 보내 베를린에 관한 4국 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아테나워도 장벽은 동독 정권의 파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서독은 정치적으로 장벽을 견어낼 보족한 수단은 찾기 어려웠다. 미국은 사실상 묵인했다. 케네디는 현상유지, 즉 베를린의 분단을 전제로 긴장완화를 준비했고 사실상 동독정부를 승인하는 정책을 취했다. 미국은 긴장완화를 위해 베를

73 위의 논문

74 위의 논문

75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59.

린 장벽의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과 소련은 현상유지를 구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독일과 베를린 분단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차 베를린 위기는 베를린 장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sup>76</sup>

### 3. 교역 지속의 정책

베를린 장벽 설치의 국제정치적인 맥락이 크게 작용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동독에게 주민의 이탈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노동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떠나는 주민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총 273만명, 연 평균 23만 명에 이르렀다.<sup>77</sup> 이주자 중에서 상당수는 노동자와 인텔리 계층이었다. 동독은 주민의 탈주를 심각하게 여겼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물품공급이 부족하면 이것이 탈출의 이유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으로 보았다.<sup>78</sup>

동독은 소련에게 탈출의 경제적 심각성을 호소했다. 1961년 초반에 올브리히트는 후르시초프에게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탈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독으로의 탈출을 막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sup>79</sup> 후르시초프는 처음에는 이런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독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탈출이 아니라 경제적 초기조건이 열악했고 외부에서 적대적인 세력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다.<sup>80</sup> 하지만 소련과 동구권의 지원이 절실했

76 김진호,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77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120쪽.

78 André, Steiner, *Von Plan zu Plan*, pp. 136; Gerhard Wettig, *Chruschtschows Berlin-Krise 1958 bis 1963*, pp. 130.

79 André, Steiner, *Von Plan zu Plan*, pp. 136.

80 Gerhard Wettig, *Chruschtschows Berlin-Krise 1958 bis 1963*, pp. 120.

던 동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이탈의 경제적 심각성을 호소했다. 1961년 8월에 이르르면 울브리히트는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서독으로의 탈주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할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sup>81</sup> 이런 측면에서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는 정치적 요인 뿐 아니라 경제적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설치할 때 서독이 교역 중단으로 맞설 것을 예상하면서 1960년 가을 서독의 「베를린 협정」 파기 선언에 대응한 것처럼 대책을 세워두었다. 서독만 교역을 중단할 경우, 나토 회원국과 중립국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나아가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지만 서방국이 동구권 전체에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까지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sup>82</sup>

서독 내각은 장벽 설치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했다. 8월 16일과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제재를 논의했다. 에어하르트 경제부 장관은 이번에도 경제적 제재에 반대했다. 그는 두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1960년 가을의 사태를 반추해보건대 교역중단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동독에 압력을 가한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교역을 유지·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둘째, 동맹국과 동맹국 기업의 행태를 확신할 수 없었다. 제재 조치는 동구권 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서방세계 국가들로부터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에어하르트는 이들이 동서독 교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서독이 동독과의 교역을 끊으면 서방 기업들이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과 교류할 기회만 넓히는 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교역중단의 실효성도 없어지고 나아가 서독이 동독시장 점

81 André, Steiner, *Von Plan zu Plan*, pp. 137-138.

82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59-160.

유율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무위원 전체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고 베를린 위기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 결국에는 서베를린도 확보하지 못할 상황을 염려했다.<sup>83</sup> 베를린 주재 상공회의소 역시 서베를린과 서독지역의 인적, 물적 통행을 증시하여 대항조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이었다.<sup>84</sup>

대동독 강경노선을 견지한 아데나워 수상은 이번에는 누그러졌다. 그는 베를린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 8월 29일 케네디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역중단은 동독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sup>85</sup> 결국,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하여 교역을 중단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단체에게 1961년 라이프치히 가을 박람회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실제로 그 해 박람회에는 매년 1,000여개 기업이 참가했던 것에 비해 494개 기업만이 참여했다. 참가자 수도 전년의 27,800명에 비해 7,700명에 그쳤다.<sup>86</sup> 베를린 장벽 설치라는 거대한 사건에 대한 서독정부의 경제적 조치는 이렇게 암전했다.

베를린 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1961년 8월에 서독 정부가 동독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의외였다.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도발에 맞서 경제적 제재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베를린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면 궁극적으로 베를린이 소련과 동독의 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독정부는 겉으로는 장벽설치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실제로 장벽 자체만큼 민감하게 반응

---

<sup>83</sup> Peter Fäßl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pp. 253-255; Peter Fäßler,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sup>84</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61-162.

<sup>85</sup> Ibid. pp. 161.

<sup>86</sup> Peter Fäßler,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했던 것은 동독의 베를린 통행 제한조치였다. 정부의 의중을 읽고 있었던 신탁소 대표 레오폴트는 동독 대외무역부 관계자에게 서독정부가 장벽 설치보다는 통행과 통신을 차단한 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암시하기도 했다.<sup>87</sup>

## V. 결론

1960~61년은 동서독 교역의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고비였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역이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었다. 특히 1961년 8월 2차 베를린 위기라는 거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서독정부는 교역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통 큰 정책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서독 교역은 위기를 넘어 “늘 있는 일”로 회귀했다.<sup>88</sup>

서독정부가 교역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경우 베를린이 소련과 동독의 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 경제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서방국의 대동단결을 확신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역을 중단할 경우 동독과의 경제적 교류가 끊어지고 이렇게 될 경우 동서독 교역을 통일로 가는 장기적 포석으로 여겼던 교역정책 자체가 자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교역지속 결정은 교역을 중단할 경우 야기될 파급효과를 예상한 경제부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경제부 장관 에어하르트는 1960년 가을에는 아데나워 수상과 외무부 장관 브렌타노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베를린 협정」 파기 선언을 저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과 동독의 베를린 장벽 설

<sup>87</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161–162.

<sup>88</sup> Peter Fäßler,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치에 대하여 교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한 주요 행위자였다.

서독 기업의 입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아무리 서독이 동서독 교역에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 적었다 하더라도 교역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은 교역으로부터 생기는 실익이 적지 않았다. 서독기업은 교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부에게 교역 지속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1950년에 철강제품의 반출이 제한되었을 때에도 서독 철강산업의 기업들은 정부에 교역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 철강제품의 수출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대정부 압력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sup>89</sup> 1960년대 초반에도 동독과의 교류에 참가하는 서독의 기업은 교역을 지속하길 원했다. 일부 기업은 정부의 요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치히 박람회에도 참가했다. 이는 동서독 교역이 일방적으로 동독에 이득이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서독의 기업에게도 실익이 상당했음을 말해준다.<sup>90</sup>

제재가 아닌 자제를 택한 서독정부의 정책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무능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체면을 구기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서독정부의 품 너른 정책결정 이후 교역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이 교역을 넘어 금융과 생산부문으로까지 심화·확장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교역이 중단되었다면 추가적인 경제협력이나 동독경제에 대한 서독의 영향력 증대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보자.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은 쓸쓸하게 식었다. 2003년 착공식 이후 2004년부터 가동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2월에 폐쇄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간에 훈풍이 돌면서 경제협력 재개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이내 좌초되고 말았다.

---

<sup>89</sup> Ferdinand von Heyl,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pp. 69.

<sup>90</sup> Klaus Bolz, "Die Instrumentalisierungsmöglichkeit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2020년 6월 16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폭파되었다.

남북 경제협력이 끊어지면서 서독이 동독과의 교역지속을 결정할 때 우려했던 현상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첫째, 교류의 다리가 끊어졌다. 경제협력은 자기장이 넓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북한 협력의 상징적인 분야였다. 경제협력은 정치적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를 발판으로 협력의 심화와 확장을 모색할 단계에서 개성공단이라는 베이스캠프를 걷어냄으로써 남북관계는 냉동상태로 접어들었다. 서독은 보수적인 기민당 정권 하에서도 교역을 중단하면 다리가 끊어져 동서독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현상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이 경제협력의 중단을 계기로 정책노선을 바꾼 것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돈이 북한정권으로 흘러들어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근거도 약했을 뿐 아니라 폐쇄 이후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한 것도 아니었다. 경제협력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접근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재에 신중했던 서독정부의 접근과 크게 대비된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이 끊어진 이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나날이 깊어져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경제협력의 유인을 줄이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을 것이다. 베를린 위기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교역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중단보다는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노선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우리의 경제협력 중단 결

정은 장기적 보상은커녕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달려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물론 동서독 교역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양국간 상황 뿐 아니라 경제협력을 둘러싼 국제환경도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험이 꽉 막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하다. 경제협력을 당장의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은 성공적이지 못하므로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은 국제적 제재를 풀어가는 노력과 아울러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개성공단을 과거의 형태로 복원하기보다는 한 단계 성숙한 형태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도 동독이 실현하지 못한 지점, 즉 경제개혁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 이효원,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 통일부 정책연구보고서, 2009.
-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Abelshauer, Werner,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C.H.Beck, 2004.
- Bundestag,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Drucksache 12/7820, 1994.
- Fäßler, Peter, *Durch den »Eisernen Vorhang«: die deutsch-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1949-1969*, Köln: Böllau Verlag, 2006.
- Heyl, Ferdinand von, *Der innerdeutsche Handel mit Eisen und Stahl 1945-1972. Deutsch-deutsche Beziehungen im Kalten Krieg*, Köln: Böhlau Verlag, 1997.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Korte, K-R., *Deutschlandspolitik in Helmut Kohls Kanzlerschaft. Regierungsstil und Entscheidungen 1982-1989*, Baden-Baden: DVA, 1998.
- Ludz, Peter, *Die DDR zwischen Ost und West*, München: C.H. Beck, 1977.
- Roesler, Jörg, *Die Wirtschaft der DDR*,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2002.
- Roesler, Jörg, *Momente deutsch-deutsche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1945 bis 1990*,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2006.
- Roth, Margit, *Innerdeutsche Bestandsaufnahme Der Bundesrepublik 1969-1989. Neue Deutung*, Wiesbaden: Springer, 2013.
- Schneider, Gernot, *Wirtschaftswunder DDR - Anspruch und Realität*, Köln: Bund Verlag, 1990.
- Steiner, André, *Die DDR-Wirtschaftsreform der sechziger Jahre. Konflikt zwischen Effizienz- und Machtkalkül*, Berlin: Akademie Verlag, 1999.
- Steiner, André, *Von Plan zu Plan. Eine Wirtschaftsgeschichte der DDR*, München: Aufbau Verlaggruppe, 2007.

- Wettig, Gerhard, *Chruschtschows Berlin-Krise 1958 bis 1963*,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6.
- 고상두, 「동서독 교역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135~156쪽.
- 김상훈, 「청산결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각국의 사례 및 남북한 청산결제제도 추진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제6권 2호, 2004, 25~37쪽.
- 김영윤,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교류: 내독교역이 남북한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논총』 제4권 2호, 1995, 277~337쪽.
- 김진호,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평화연구』 제20권 2호, 2012, 241~289쪽.
- 김태헌, 「동서독 무역의 경제통합론적 특징과 남북교역에의 시사점」 『경상논총』, 24권, 2001, 1~19쪽.
- 김학성, 「분단독일에서 상호주의의 실천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2권 1호, 2021, 127~144쪽.
-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 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1989, 31~61쪽.
- 이장희·이병조·김명기·홍성화, 「동서독 내독거래의 법적 토대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에 주는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12권, 1993, 101~130쪽.
- 정진상, 「통일전 동·서독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1호, 2006, 1~28쪽.
- 정형곤, 「서독의 대동독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아세아연구』, 제46권 2호, 2003, 91~128쪽.
- Bolz, Klaus, "Die Instrumentalisierungsmöglichkeit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Wirtschaftsdienst*, vol. 66, no. 9 (1986), pp. 446-450.
- Fäßler, Peter, "Innerdeutscher Handel als Wegbereiter der Entspannungspolit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2007, 2007, pp. 31-38.
- \_\_\_\_\_, "Zwischen "Störfreimachung" und Rückkehr zum Tagesgeschäft. Die deutsch-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nach dem Mauerbau (1961-1969),"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online), March 20, 2012, <<https://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26613/deutsch-deutsche-wirtschaftsbeziehungen?p=all>> (검색:2020.2.15.)
- Gey, Peter, "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9-1989," 『질서경제저널』, vol. 9, no. 2, 2006, pp.89-111.
- Graf, Maximilian, "Die DDR und die EWG 1957-1990," *Revue d'Allemagne et des pays de langue allemande*, vol. 51, no. 1, 2019, pp. 21-35.
- Klinner, Bernhard, "25 Jahre innerdeutscher Handel," *Wirtschaftsdienst*, vol. 56, no. 9, 1976, pp. 467-471.

Lambrecht, Horst, "Der innerdeutsche Handel – ein Gütertausch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Wirtschaf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1982, 1982, pp.3-17.

\_\_\_\_\_, "Die deutsch-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zum Ende der achtziger Jahr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0/89. 1989, pp. 15-27.

Nitz, Jürgen, "Wirtschaftsbeziehungen DDR-BRD: Bestimmungsfaktoren, Tendenzen, Probleme und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0/89. 1989, pp.3-14.

Stehn, Jürgen · Schmieding, Holger, "Spezialisierungsmuster und Wettbewerbsfähigkeit: eine Bestandsaufnahme des DDR-Außenhandels," *Die Weltwirtschaft*, vol. 1, 1990, pp.60-77.

Wulf, Horst, "Millionenvorteile im innerdeutschen Handel?" *Wirtschaftsdienst*, vol. 50, no. 10, 1970, pp.608-611.

Wüstenhagen, Jana · Rudolph, Karsten, "13. August 1961 –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auf der Leipziger Messe," *Hallische Beiträge zur Zeitgeschichte*, vol. 10, 2001, pp. 91-118.

## 영문 초록

### West Germany's Trade Policy toward East Germany in the early 1960s

Kyu Sung Hwang\*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backgrounds and processes of the West Germany's decision to continue trade with East Germany without stopping in the early 1960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ereas inter-German trade continued for 45 years, it faced the greatest crisis in the second Berlin crisis. West Germany declared a trade cessation in the fall of 1960 in response to East Germany's Berlin travel restrictions, but it was withdrawn immediately in view of the low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uncertainty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the suspension. In 1961, East Germany erected the Berlin Wall and West Germany was expected to suspend trade again. But they decided not to break it. The reasons for not choosing to suspend trade were because they were concerned that Berlin would fall into East Germany's hands if the conflict escalated by choosing economic sanctions, and that continuou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ast met the long-term goal of the East German policy. West Germany's political decision to refrain from sanctions was criticized for being a helpless respons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deepening and expanding inter-German coope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brings to reality the negative effects of the trade halt that West Germany was trying to avoid when deciding on the policy of self-restraint. The bridge of cooperation has been broken, and the political purpose has not been achieved, and the North Korean economy's dependence on China is deepening. In the futur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move away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nd aim for the long-term coexistenc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

•Key words : Inter-German Economic Cooperation, Inter-German Trade, Berlin Crisi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 Research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

# 평화통일의식 측정도구 개발: 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의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  
박균열

경상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평화통일의식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도이다.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상태이자 목표이지만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평화의식을 정의하고, 더욱이 그것을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의식을 평화에 대한 가치의식이라고 정의하고, 도덕심리학의 선행연구를 참고한다.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독일의 도덕심리학자인 G. Lind 교수가 개발한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의 원리를 적용했다. 평화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에 대한 가치위계를 설정해야 한다. 도구개발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도덕심리학에서 제시된 도덕성의 6단계를 원용하고, 그것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진행한다. 개발된 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경남 소재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중 불성실응답자를 제외한 120명의 데이터에 대해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alpha$ 를 통해 검증되고, 타당도는 L. Kohlberg가 제안한 타당도 검증방식인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위계검증, 준단방향구조 검증,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화통일의식측정도구는 완성된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평화통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시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자문과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 동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 평화의식측정도구, 선호위계검증, 준단방향구조검증, 인지-정서적 평행검증

## I. 서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길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정책도 필요하고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통일운동도 필요하다. 특히 사람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자료로 삼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평화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평화는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이 희구하는 덕목이다. 보는 이에 따라 반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평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화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전쟁, 평등, 화합, 정의 등의 유사어들이 거의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 신체적·심리적·영적 안정과 조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힘과 제도에 의하여 질서, 정의가 구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sup>1</sup>

이러한 평화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 평화의식(consciousness of peace)은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고, 평화 상태의 달성 및 유지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sup>2</sup> 이 가운데 평화 상태의 달성과 유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평화의식은 또한 평화를 이룩하려는 소망(hope for peace)과도 연결되는데, 레스헴(Leshem)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

1 최관경, 「21세기의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제23권 1호 (2009), 4쪽.

2 염민호·이효성·오종욱, 「민주·인권·평화 의식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의 구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2호 (2017), 92-96쪽.

라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평화의식은 ① 평화에 대한 이성적 희망, ② 평화로운 상태가 구체화 될 것이라는 기대, ③ 평화에 대한 감정적인 소망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했다. 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팔) 사이의 평화에 대해 소망하지만, 실제로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감정적 수준에서 평화에 대한 우호적 소망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랐는데, 자유주의(liberal) 성향의 이스라엘인들은 평화에 대한 소망이 강했지만, 보수적(conservative, right-wing) 성향일수록 평화에 대한 소망이 약했다. 또한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일부 이-팔 평화 정착에 대해 감정적 소망을 표명한 응답자들이 있었지만, 평화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수록 소망과 기대 수준이 하락한다고 보고했다.<sup>3</sup> 레스헴의 연구는 평화교육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화를 감정적 차원에서 우호적일 수 있지만 평화 달성의 필요성, 조건, 방법 등에 대한 지식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우호 세력(정치 세력)의 형성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sup>4</sup> 이는 평화의식의 성숙과 향상을 위해 평화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자들은 평화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평화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평화교육자들은 인류가 공유하는 인간성은 상호존중을 위한 근본 가치이자 출발선으로서 개인 및 집단이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평화학 연구에 대한 탁월한

3 O. A. Leshem, "What you wish for is not what you expect: Measuring hope for peace during intractable confl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60 (2017), pp. 60-66.

4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pp. 1430-1453.

5 Lyudmila Bryzheva, "Understanding Peace Consciousness and Its Language: Unfinishedness," *Peace & Change*, vol. 34, no. 1 (2009), pp. 62-80.

6 정기섭, 「평화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Hermann Rohrs의 평화교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5권 1호 (2000), 63-80쪽.

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violence)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폭력의 유형을 ① 구조적 폭력, ② 문화적 폭력, ③ 직접적 폭력으로 구분했다.<sup>7</sup> 먼저 구조적 폭력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사회의 구조에 내재된 부정과 불평등이 불평등한 권력을 초래하고 그 결과 삶의 기회를 불균형하게 만든다. 여기서는 불평등 행위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원의 배분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자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보다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서 주목하게 유도함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평화를 달성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재클린 코크(Jacklyn Cock)는 갈통의 구조적 폭력이론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에서 폭력이 일상화되고, 가부장적 가치가 강요되는 억압구조가 여성과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분석했다.<sup>8</sup> 아킬 곱타(Akhil Gupta) 역시 이러한 갈통의 견해를 수용하여 인도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빈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다.<sup>9</sup>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문화적 폭력은 잘못된 사회제도와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신념을 강요하는 전통이 되어 폭력적 구조가 지속되는데 기여한다.<sup>10</sup> 이러한 문화적 폭력은 중동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에드 후세인(Ed Husain)

7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1969), pp. 167-191.

8 Jacklyn Cock, "Keeping the Fires Burning: Militarization and the Politics of Gender in South Africa,"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16, no. 45-46 (1989), pp. 50-64.

9 Akhil Gupta, *Red Tape: Bureaucracy, Structural Violence and Poverty in India*.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2).

10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1990), pp. 291-305.

은 이슬람 신학교의 극단주의적 가르침과 문학이 많은 이슬람 청년 교도들에게 폭력에 대한 문화적 의무감을 심어주고, 이것은 중동평화를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의 내면적 씨앗이라고 분석했다.<sup>11</sup>

직접적 폭력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직접적인 폭력은 신체적,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고,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항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그러한 직접적 폭력을 야기하고, 강화한다는 점이다. 아시아 남부에서 행해지는 미성년 소녀들의 강제 혼인에는 주로 아버지, 그리고 성인 남편의 폭력, 강간이 동반되고, 이를 통해 10대 임신과 출산, 유아의 조기사망 등 연쇄적 비극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빈곤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작동한다.<sup>12</sup>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은 남북한 대결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평화교육의 내용은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생태적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폭력을 제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보편적 평화교육으로서 ① 행복한 자아, ② 민주시민, ③ 평화 민족, ④ 생태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서교육, 감성교육, 대화식 교육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다.<sup>13</sup>

이와 같은 평화 문제를 교육 및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지수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sup>14</sup>가

11 Ed. Husain, *The Islamist* (Penguin Books USA, 2009).

12 Anju Malhotra, "Solutions to End Child Marriag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2016), <<https://www.icrw.org/wp-content/uploads/2016/10/Solutions-to-End-Child-Marriage.pdf>>

13 안승대, 「남북한 교육의 민족주의 담론 분석: 근대론적 민족주의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5호 (2013), 355~374쪽; 안승대, 「분단인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과 분화과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18권 2호 (2021), 55~82쪽.

14 <http://economicsandpeace.org/> (2022.1.20 접속)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수집한 자료와 함께 국제평화전문가 패널과 협의해 개발하는 지수로서 국가와 지역의 평화로움 정도에 관한 상대적 위치를 측정한다. GPI는 평화 수준에 따라 163개 독립 국가 및 영토(세계 인구의 99.7%)의 순위를 평가하는데, 2007년 5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매년 업데이트된다. 2007년 출범 당시 121개국에 대해서 평가했지만, 현재는 163개 국을 조사한다(O'leary, 2016).<sup>15</sup>

2019년 GPI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가장 평화롭고, 반면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 예멘, 이라크 등이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 나타났다.<sup>16</sup> 2017년 GPI의 장기적 추세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평화의 악화, 지난 10년간 세계 평화 수준의 2.14%의 악화, 평화롭지 못한 국가들 간의 평화에 대한 불평등 증가, GPI 군사화 영역의 장기적 감소, 테러의 확대 등이 있는데, 최근 5년간 테러로 사망한 숫자가 역사상 가장 많았다.<sup>17</sup>

이 GPI는 다양한 하위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성적 지표도 포함한다.<sup>18</sup> 평화로움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GPI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분쟁에 어느 나라가 관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GPI는 국가 내의 평화나 갈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① 범죄율, ② 테러 행위와 폭력 시위의 발생 건수, ③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 ④ 정치 체제

---

15 Mick O'leary, "The Global Peace Index Explores Many Dimensions of Peace," *Information Today*, vol. 33, no. 10 (2016), pp. 16-17.

16 Vision of Humanity "Overall GPI Score"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 (2022.1. 20 검색)

17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2021," (2021)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lobal-peace-index-2021>) (2022.2.10. 검색)

18 Gerardo P. Sicat, "The Global Peace Index," (2017) ([www.philstar.com](http://www.philstar.com)) (2022.2.2. 검색)

안정성, ⑤ 국내적으로 난민 혹은 유랑민의 숫자 등이 포함된다. GPI에는 각국의 평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23개의 지표가 반영되는데, 각 지표의 점수는 1-5의 척도로 정규화되며, 여기서 질적 지표는 5개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반영된다. 또한 정량적 지표는 원척도의 3번째 소수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코딩 방법은 아래에 <표 1>에 제시되어 있다.<sup>19</sup>

**<표 1> GPI에 포함되는 각 지표의 원천 및 코딩 방법**

번호	지표	자료 원천	코딩 방법
1	국제적 갈등의 숫자 및 지속기간	UCDP, IEP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총 숫자
2	외부의 조직적 총동로 인한 사망자 수	UCDP Armed Conflict Dataset UCDP	총 숫자
3	내부의 조직적 총동로 인한 사망자 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rmed Conflict Database	총 숫자
4	Number, duration, and role in external conflicts 외부적 갈등의 숫자, 지속기간과 역할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UCDP 전투관련 사망 데이터 IEP, UCDP	총 숫자
5	조직적 국내 갈등의 강도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6	인접 국가와 관계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7	사회에서 인식된 범죄 수준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8	총인구에서 난민과 유랑자 비율	UNHCR and IDMC	국가나 영역별 난민인구 더하기 국내적으로 유랑자가 된 인구 비율
9	정치적 불안정성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10	테러의 영향	Global Terrorism Index (IEP)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11	정치테러	Amnesty International and US State Departmen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12	인구 10만명당 살인 숫자	UNODC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CTS); EIU estimates	총 숫자
13	폭력 범죄 수준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sup>19</su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2021," (2021)

번호	지표	자료 원천	코딩 방법
14	폭력 시위의 경향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15	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	World Prison Brief,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at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Total number 총 숫자
16	인구 10만명 당 치안관련 공무원 혹은 경찰관 수	UNODC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CTS); EIU estimates	총 숫자; 단 지역민병대나 주방위군은 제외한 민정 경찰
17	GDP에서 국방비 비율	The Military Balance and IISS	중앙 혹은 연방정부가 국방비에 지출하는 재정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1~5점까지 배정
18	인구 10만명당 국방분야 종사자 수	The Military Balance and IISS	현역 상비군 숫자
19	인구 10만명당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 규모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인구 10만 명 당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 건수
20	인구 10만명당 주요 재래식 무기 수출(판매) 규모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인구 10만명 당 주요 재래식 무기 수출 건수
21	UN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재정기여	United Nations Committee on Contributions and IEP	국가들의 성실한 부담금 납부 대비 그 들의 현행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연간 예산 평가를 3년간 평균한 것으로 약정한 기여금을 납부한 비율에 기반하여 1~5점 부여
22	핵무기 및 중화기 능력	The Military Balance, IISS, SIPRI,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and IEP	누적 총점 기반하여 1~5점 부여: 1점: 무장차량과 보병무기, 5점: 전차 20점: 전투기, 100점: 전투함, 1000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23	소화기 및 경화기에 대한 접근 용이성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 경제 정보 단체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1위-5위까지 질적 척도

주: UCDP: 스웨덴 옘살라 대학교,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UNSCT: UN 범죄경향 조사 및 범죄 정의 시스템 운영, ICPS: IISS,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 교도소 연구센터

출처: Wikipedia. "Global Peace Index",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lobal-peace-index-2021> (2022.2.10.)

이 표에 제시된 지표 중 1~5의 척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지표는  $x = \frac{x - \min(x)}{\text{Max}(x) - \min(x) - x}$  공식을 사용하여 변환한다. 여기서  $\text{Max}(x)$ 와  $\text{Min}(x)$ 는 지수에서 해당 국가의 지표에 대한 최고값과 최저값이다. 그 결과 0 점부터 1 점까지의 점수를 1 점부터 5 점까지로 환산했다. 그런 다음 전문가 패널의 중요도 판단에 따라 개별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다음, 점수는 국가 최종 점수의 60%로 가중치를 부여한 내부 평화 및 국가 최종 점수의 40%

로 가중치를 부여한 외부 평화라는 두 가지 가중치 하위 지수의 표로 만들어졌다. 폭력의 부재 또는 폭력에 대한 공포로 정의되는 ‘소극적(negative) 평화’는 세계평화지수를 만들기 위해 평화의 정의로 사용된다. GPI 데이터베이스의 또 다른 목표는 긍정적인 평화의 개념이나 사회의 평화를 이끄는 태도, 제도,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GPI는 또한 민주주의와 투명성, 교육 및 물질적 안녕을 포함한 평화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조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다. 연구자들은 GPI 데이터에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여 평화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평화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능적 사회를 촉진하는 정부, ② 건전한 사업환경, ③ 타인의 권리 수용, ④ 이웃과의 좋은 관계, ⑤ 자유로운 정보 흐름, ⑥ 높은 인적 자본 수준, ⑦ 낮은 부패 수준, ⑧ 공평한 자원 분배 등이다.

이와 같은 평화문제에 대한 선행 측정도구들은 인간의 가치관이 연계된 평화의식을 재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다. 평화의식은 평화를 주제로 가치의식 즉 평화가치의식인 것이다. GPI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인간의 비평화적 상태를 측정하거나 그들의 평화가치의식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평화 주제를 가치의식이라고 전제하고 그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sup>20</sup> 더욱이 한반도의 특수성과 결부되면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가치의식을 측정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평화의식을 가치의식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평화교육을 수행할 때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도구를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가치의식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 독일의 도덕심리학자인 게오르그 린트(G. Lind)의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 Moral Competence Test)의 구성원리를 원용하여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20 통일·안보의 문제를 가치의식이라고 전제한 연구는 박균열,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국방연구』, 제60권 3호 (2017), 67-92쪽 참조.

이 또한 일종의 시험연구(pilot test)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이지만 향후 완성된 측정도구는 같은 수준의 가독성을 갖추었다면 모두 적용가능하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경남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담당 교수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성별, 전공별로 무작위성이 강한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153개 샘플을 확보했는데, 이중 불성실 응답자 33명분을 제거하고 총 120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표 2〉 참조).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군복무여부(남자)		신앙		연령			전체
	여자	남자	군필	미필	있다	없다	20세	21세	22세 이상	
n(%)	71(59.2)	49(40.8)	14(28.6)	35(71.4)	26(21.7)	94(78.3)	81(67.5)	17(14.2)	22(18.3)	120

### 2. 조사도구

이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MCT의 구성원리를 따른다. MCT는 인간의 도덕성을 보편적인 가치의 위계(value hierarchy)를 순서대로 잘 나열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한 가치 가중치(value weighting)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와 그 행태에 따라 도덕성의 종류와 높낮이가 결정된다(부록 1] 참조).<sup>21</sup> 그렇다

<sup>21</sup> Lind, G. (1978). "How does one measure moral judgment?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a complex construct" [German: Wie mißt man moralisches Urteil? Probleme

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외식을 적용해보면,<sup>22</sup> 평화통일에 관련된 가치위계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면 된다.

[부록 1]에서 제시된 MCT C-지수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절차대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에 대한 계산식, 그리고 C지수 도출을 위한 각종 중간단계의 지수계산식들로 나열되어 있다.

---

und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Messung eines komplexen Konstrukts], in: G. Portele, ed., *Sozialisation und Moral* (Weinheim: Beltz, 1978); Lind, G., "Growth and regression in moral-cognitive development," in: C. Harding, ed., *Moral Dilemmas.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cago: Precedent Publishing Inc., 1985); Lind, G., "How does one measure moral judgment?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a complex construct" [German: Wie mißt man moralisches Urteil? Probleme und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Messung eines komplexen Konstrukts], in: G. Portele, ed., *Sozialisation und Moral* (Weinheim: Beltz, 1978); Lind, G., "The theory of moral-cognitive judgment: A socio-psychological assessment," in: G. Lind, H. A. Hartmann & R. Wakenhut, eds., *Mor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Studies in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moral judgment and education* (Chicago: Precedents Publishing Inc., 1985); Lind, G., *Ist Moral lehrbar? Ergebnisse der modernen moralpsychologischen Forschung [Can Morality be Taught? Research Findings from Modern Moral Psychology]*, Second Edition (Berlin: Logos-Verlag, 2002); Lind, G., *Moral ist lehrbar: Handbuch zur Theorie und Praxis moralischer und demokratischer Bildung [Morality Can be Taught: Handbook on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and Democratic Education]* (Munchen: Oldenbourg-Verlag, 2003); Lind, G., ·박균열·정창우,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How to Teach Morality: Promoting Deliberation and Discussion, Reducing Violence and Deceit)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2017[2016]).

- 22 MCT 알고리즘을 국내외 소개하거나 그 원리대로 개발한 선행연구는 다음이 있다. 마르티나 라이니케·박균열, 『청소년의 도덕역량 키우기-KMDD 교수학습법』 (서울: 솔과학, 2019); 박균열, 「도덕적 판단력 도구 MJT의 한국적 표준화 연구」 『윤리연구』 제94권 (2014), 249~275쪽; 박균열, 「도덕성의 4구성요소를 활용한 초등학교 청렴교육 콘텐츠」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11호 (2019), 653~663쪽; 박균열, 「도덕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도구로서 KMDD와 MC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도덕윤리교육』 65호 (2019), 1~33쪽; 박균열, 「도덕적 역량 검사 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국방연구』 제60권 3호 (2017), 67~92쪽; 박균열,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 및 C-지수 알고리즘 개선」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12호 (2019), 147~157쪽; 박균열, 「중등 도덕과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51~88쪽.

### 긍정문항에 대한 각 Stage 치환식

COMPUTE Pro1=P5.  
EXECUTE.  
COMPUTE Pro2=P3.  
EXECUTE.  
COMPUTE Pro3=P6.  
EXECUTE.  
COMPUTE Pro4=P2.  
EXECUTE.  
COMPUTE Pro5=P1.  
EXECUTE.  
COMPUTE Pro6=P4.  
EXECUTE.

### 부정문항에 대한 각 Stage 치환식

COMPUTE Con1=N5.  
EXECUTE.  
COMPUTE Con2=N4.  
EXECUTE.  
COMPUTE Con3=N2.  
EXECUTE.  
COMPUTE Con4=N3.  
EXECUTE.  
COMPUTE Con5=N6.  
EXECUTE.  
COMPUTE Con6=N1.  
EXECUTE.

### 가중치 부여 계산식

RECODE Pro1 Pro2 Pro3 Pro4 Pro5 Pro6 Con1 Con2 Con3 Con4 Con5 Con6 (1=-3.5) (2=-2.5) (3=-1.5) (4=-0.5) (5=0.5) (6=1.5) (7=2.5) (8=3.5).  
EXECUTE.

\* 각 Stage 계산식

```
COMPUTE Stage1=sum(Pro1,Con1).  
EXECUTE.  
COMPUTE Stage2=sum(Pro2,Con2).  
EXECUTE.  
COMPUTE Stage3=sum(Pro3,Con3).  
EXECUTE.  
COMPUTE Stage4=sum(Pro4,Con4).  
EXECUTE.  
COMPUTE Stage5=sum(Pro5,Con5).  
EXECUTE.  
COMPUTE Stage6=sum(Pro6,Con6).  
EXECUTE.
```

\* 단계별 중간 지수계산식

```
COMPUTE SUM_Stage=sum(Stage1,Stage2,Stage3,Stage4,Stage5,Stage6).  
EXECUTE.  
COMPUTE SUM_Stage_2=sum(Stage1**2 ,Stage2 ** 2,Stage3 ** 2,Stage4 **  
2,Stage5 ** 2,Stage6 ** 2).  
EXECUTE.  
COMPUTE SUM_Pro_2=sum(Pro1**2, Pro2**2, Pro3**2, Pro4**2, Pro5**2,  
Pro6**2).  
EXECUTE.  
COMPUTE SUM_Con_2=sum(Con1**2, Con2**2, Con3**2, Con4**2, Con5**2,  
Con6**2).  
EXECUTE.  
  
COMPUTE SS_tot=sum(SUM_Pro_2, SUM_Con_2).  
EXECUTE.  
COMPUTE SS_Mean=(SUM_Stage**2)/12.  
EXECUTE.
```

```

COMPUTE SS_Dev=SS_tot-SS_Mean.
EXECUTE.
COMPUTE SS_Stage=(SUM_Stage_2/2)-SS_Mean.
EXECUTE.
COMPUTE C_Index=SS_Stage/SS_Dev*100.
EXECUTE.

```

원래 MCT는 두 개의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하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하는 것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식이지 실제 측정에는 오히려 문항 가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인들의 독서량이 외국의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읽어야 할 절대량이 많은 점은 결국 응답 신뢰도를 낮추는 데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 조사도구는 MCT의 구성원리로 요약되는 ‘가치의 위계’와 ‘가중치’ 방식을 철저히 따른다. MCT와 다른 점은 도덕적 딜레마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덕적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은 주제에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 연구는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사용이 포괄적 도덕판단력을 지향하기보다는 그 특정 주제에 대한 편기성(bias)이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회피했다.<sup>23</sup> 평화와 관련된 가치들을 로런스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의 발달 단계로 등치시켜서 그에 부합되도록 질문지를 만들었다. 긍정의 논거 1~6단계 6문항, 부정의 논거 1~6단계 6문항으로 총 12문항과 인구통계변인 그리고 간단한 기타 변수를 포함해서 개발이 완료

---

23 콜버그도 실제 처음부터 딜레마 토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W. Althof, “Just Community sources and transformations: A conceptual archaeology of Kohlberg’s approach to moral and democratic education,” in: B. Zizek · D. Garz & E. Nowak, eds., *Kohlberg revisited* (Amsterdam: Sense, 2015), pp. 51-90; G. Lind 저, 박균열 · 정창우 역,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 183쪽 재인용.

되었다. 타당도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 전공자 2명으로부터 2019년 3월 중에 구두 자문을 구했다(부록 2 참조). 자문의견은 주로 문장의 애매모호성에 대한 명료화 요청이었다. 또한 기존의 평화통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정도를 물어볼 수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문지를 마련하였으며(부록 3 참조), 이는 신뢰도 분석을 제외하고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설문과정에서 응답자의 성실성과 문항 내적인 문제로서 질적으로 유사한 문항에 대해 일관된 반응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알아보았는데, 평화가치위계와 가중치 부여에 대한 인식 검사지의 신뢰도는 .614로 비교적 높았으며,<sup>24</sup> 평화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문항의 신뢰도는 .76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자료 처리

본 연구는 C-점수 계산법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엑셀 계산자를 활용했다. 타당도 검증은 MCT의 일반적인 검증 절차를 따랐다.

---

24 MCT를 위한 조사도구는 사실상 신뢰도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 알고리즘을 전제 한 하나의 문항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신뢰도 방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분석하였다. 다만 독자들은 이러한 신뢰도 검증이 일반적인 MCT 신뢰도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Ⅲ. 조사 도구에 대한 검증

#### 1. 타당도 확보 방안

이 연구는 측정도구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이므로, 타당도 확보를 위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타당도는 자[尺]의 문제인데, 이 연구가 바로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자를 제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두 가지의 타당도를 살펴본다. 우선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이다.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타당도이다. 즉 한국적 공직자에 맞는 스토리인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이다. 이는 준거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이미 검증된 준거와 견주어 결과값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도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콜버그가 제시한 바 있는 타당도 검증 기준에 따라,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위계검증(Preference Hierarchy), 준단방향구조 검증(Quasi-simplex Structure of Inter Correlations among the Six Moral Orientations),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Affective-Cognitive Parallelism)을 실시한다.<sup>25</sup> 린트는 여기에 이중측면이론(dual aspect theory)에 따라 찬성과 반대 논증에 대한 일관성 검증(equivalence of pro and con argument)을 추가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생략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 그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 바가 많고 이전의 3가지 검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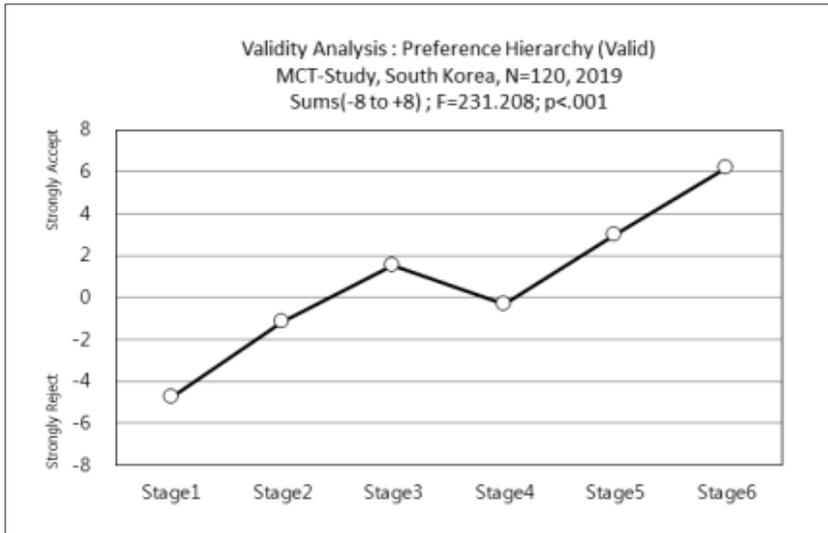
---

<sup>25</sup> L. Kohlberg,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58); 박균열,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교육』, 제23호, (2006), 136~137쪽; 박균열,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67~92쪽; 박균열,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125~162쪽.

## 2.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 1)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도 순서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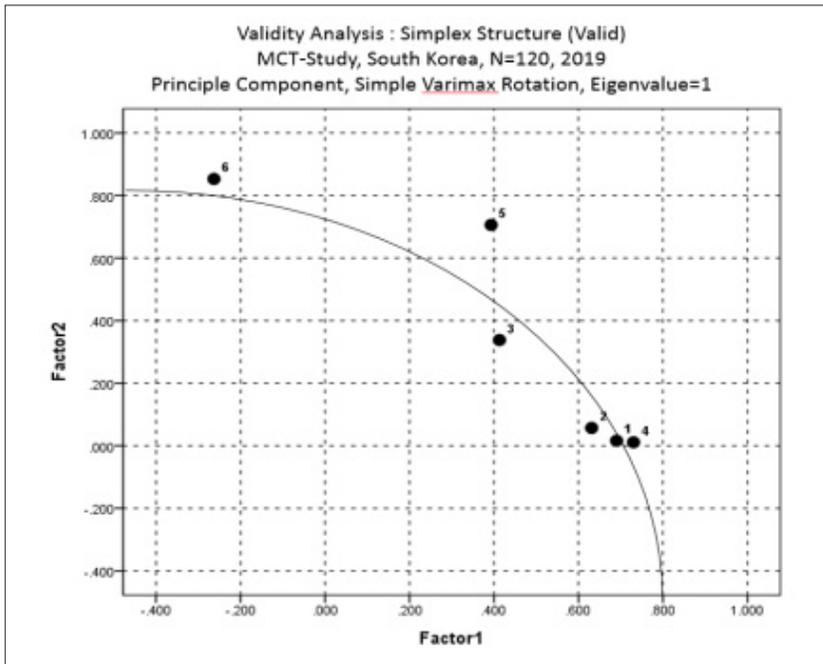
각 단계별 평균 도덕성 수준은 1단계는 -4.76, 2단계는 -1.16, 3단계는 1.54, 4단계는 -0.30, 5단계는 평균 2.97, 6단계는 평균 6.17로 나타났으며, 각 Stage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31.208$ ,  $p<.001$ ). Stage1부터 Stage3까지는 점진적으로 높아졌으며, Stage4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Stage4 이후 Stage6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덕적 발달 단계별 선호도 변화

## 2) 준단방향 구조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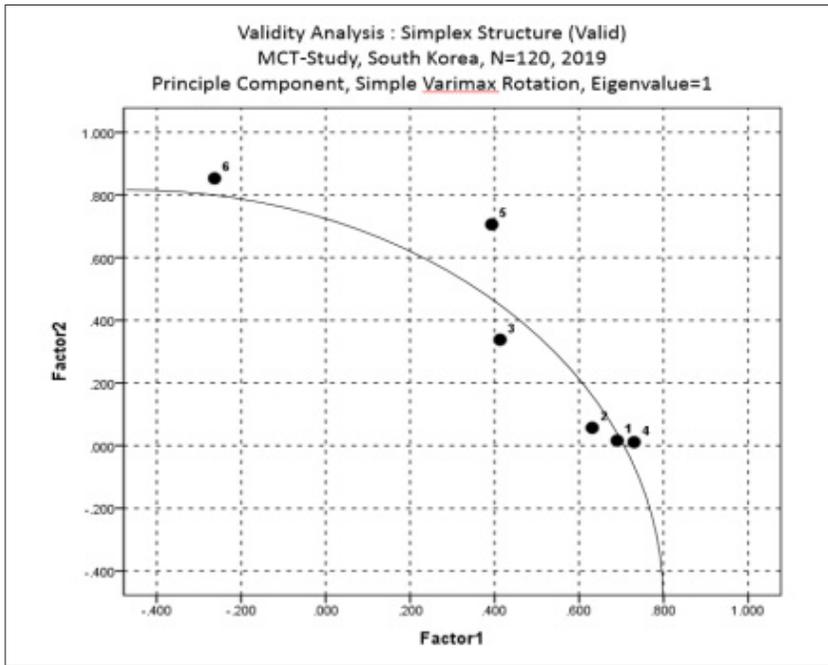
콜버그의 6단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가지며 4단계는 1단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준단방향 구조검증 결과

## 3)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

각 Stage와 C-score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Stage 1과는  $r=-.454$ , Stage 2와는  $r=-.162$ , Stage 3과는  $r=.027$ , Stage 4와는  $r=.001$ , Stage 5와는  $r=.265$ , Stage 6과는  $r=.272$ 로 나타나 1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상관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졌으며 4단계에서 다소 떨어졌으나 다시 5단계부터 향상되는 패턴이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인지-정서적 평행검증 결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평화통일의식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상태이지만 사람들마다 그 개념과 이해가 다르고, 평화의식은 궁극적으로 가치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평화통일의식이 평화통일에 대한 가치의식이라는 가정 하에 독일의 도덕심리학자 게오르그 린트가 개발한 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MCT)의 원리를 참고하였다. 하지만 두 가지 딜레마를 사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평화통일의식측정의 가능성을 얻었다. 주요한 3가지의 타당도 검증에서,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도 순서 검증은 3, 4단계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콜버그가 말한 같은 인습수

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이 문제는 추후 심층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 기울기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한 조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준단방향 구조 검증은 완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앞선 선호도 순서 검증에서 제기된 4단계의 문제가 여기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4단계를 상징하는 문항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은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평화통일의식 측정도구는 평화통일에 대한 가치 인식과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도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부 단계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문항의 조정을 통해 그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추수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MCT의 기본 알고리즘을 그대로 활용했지만, 통일평화관련 가치의 위계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각 단계별 고유한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별 원값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시계열적 분석에는 원값이 그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단계별 가중치를 얻고 난 뒤에 조사대상이 직접 부여하는 각 단계별 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보다 입체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sup>26</sup>

나아가 이 연구는 선호중심의 기존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단순 선호중심의 의견도 알아보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의 선호중심의 조사결과를 진정한 평화통일의식이라고 전제하고,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기존의 관행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단순 선호중심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

---

<sup>26</sup> 후자의 방식 즉, 조사대상자가 직접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의 특허가 있다. 박균열, “가치 의식 판단을 위한 전자 장치 및 방식”,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10-2238586, 2021.4.5.



## [부록 2] 평화통일외식 측정도구

※ 귀하는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					매우 동의				
긍정형 질문	1. 나에게 피해만 없다면 나라의 안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1단계)*	-4	-3	-2	-1	0	1	2	3	4	
	2.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도움을 준다. (2단계)	-4	-3	-2	-1	0	1	2	3	4	
	3. 포괄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3단계)	-4	-3	-2	-1	0	1	2	3	4	
	4. 이미 국제법적으로 실효적인 지배가 인정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4단계)	-4	-3	-2	-1	0	1	2	3	4	
	5. 해외 원조가 국내의 공공의 이익에 현격한 해악을 가져올 경우 그 강도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5단계)	-4	-3	-2	-1	0	1	2	3	4	
	6. 최고의 규범과 국제 인권법이 소중한 것은 개인의 인권이 지극히 소중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6단계)	-4	-3	-2	-1	0	1	2	3	4	
부정형 질문	7. 특정 국가나 세력이 만행을 저지를지라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다. (1단계)	-4	-3	-2	-1	0	1	2	3	4	
	8.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도 내가 피해를 입을 상황이면 못 본체 하는 경우가 있다. (2단계)	-4	-3	-2	-1	0	1	2	3	4	
	9.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꺼린다. (3단계)	-4	-3	-2	-1	0	1	2	3	4	
	10. 기부나 자선활동이라도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 (4단계)	-4	-3	-2	-1	0	1	2	3	4	
	11. 난민 수용이나 해외 원조가 자국민들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경우 추진해서는 안 된다. (5단계)	-4	-3	-2	-1	0	1	2	3	4	
	12.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없다. (6단계)	-4	-3	-2	-1	0	1	2	3	4	

주: \* 표시의 단계는 L. 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를 말함.

## [부록 3] 평화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자기보고식 설문지

1. 나는 <b>평화 문제</b> 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b>남북한의 통일 문제</b> 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b>북한의 입장</b> 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b>대한민국의 입장</b> 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 참고문헌

- 마르티나 라이니케, 박균열, 『청소년의 도덕역량 키우기-KMDD 교수학습법』, 솔과학, 2019.
- Lind, G., 박균열·정창우,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 to Teach Morality: Promoting Deliberation and Discussion, Reducing Violence and Deceit)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2017[2016]).
- Althof, W., “Just Community sources and transformations: A conceptual archaeology of Kohlberg’s approach to moral and democratic education,” in B. Zizek, D. Garz & E. Nowak, eds., *Kohlberg revisited*, (Amsterdam: Sense, 2015), pp. 51-90.
- Gupta, Akhil, *Red Tape: Bureaucracy, Structural Violence and Poverty in India*. Duke University Press, 2012.
- Husain, Ed., *The Islamist*. Penguin Books USA, 2009.
- Lind, G., “Experimental Questionnaires: A new approach to personality research,” In: A. Kossakowski & K. Obuchowski, eds., *Progress in psychology of personality*, Amsterdam, NL: North-Holland, 1982, pp. 132-144.
- \_\_\_\_\_, “Growth and regression in moral-cognitive development”, In: C. Harding, ed., *Moral Dilemmas.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cago: Precedent Publishing Inc., 1985a).
- \_\_\_\_\_, “The theory of moral-cognitive judgment: A socio-psychological assessment”, In: G. Lind, H. A. Hartmann & R. Wakenhut, eds., *Mor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Studies in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moral judgment and education* (Chicago: Precedents Publishing Inc., 1985b).
- 박균열, 「가치 의식 판단을 위한 전자 장치 및 방식」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10-2238586, 2021.4.5.
- \_\_\_\_\_,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과교육』, 23호, 2006, 125~162쪽.
- \_\_\_\_\_, 「도덕성의 4구성요소를 활용한 초등학교 청렴교육 콘텐츠」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11호, 2019, 653~663쪽.
- \_\_\_\_\_, 「도덕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도구로서 KMDD와 MC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65호, 2019, 1~33쪽.
- \_\_\_\_\_,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국방연구』 제60권 3호, 2017, 67~92쪽.
- \_\_\_\_\_, 「도덕적 판단력 도구 MJT의 한국적 표준화 연구」 『윤리연구』 제94권, 2014, 249~275쪽.
- \_\_\_\_\_,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 및 C-지수 알고리즘 개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12호, 2019, 147~157쪽.

- \_\_\_\_\_, 「중등 도덕과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51~88쪽.
- 안승대, 「남북한 교육의 민족주의 담론 분석- 근대론적 민족주의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5호, 2013, 355~374쪽.
- \_\_\_\_\_, 「분단인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과 분화과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18권 2호, 2021, 55~82호.
- 염민호·이효성·오종욱, 「민주·인권·평화 의식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의 구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2호, 2017, 87~137쪽.
- 정기섭, 「평화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Hermann Rohrs 의 평화교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5권 1호, 2000, 63~80쪽.
- 최관경, 「21세기의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제23권 1호, 2009, 1~25쪽.
- Bar-Tal, Danie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pp. 1430-1453.
- Bryzsheva, Lyudmila, "Understanding Peace Consciousness and Its Language: Unfinishedness," *Peace & Change*, vol. 34, no. 1 (2009), pp. 62-80.
- Cock, Jacklyn, "Keeping the Fires Burning: Militarization and the Politics of Gender in South Africa,"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16, no.45-46 (1989), pp. 50-64.
- Galtung, Johan,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1990), pp. 291-305.
- \_\_\_\_\_,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1969), pp. 167-191.
- Kohlberg, L.,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58).
- Leshem, O. A., "What you wish for is not what you expect: Measuring hope for peace during intractable confl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60 (2017), pp. 60-66.
- O'leary, Mick, "The Global Peace Index Explores Many Dimensions of Peace," *Information Today*, vol. 33, no. 10 (2016), pp. 16-17.
- Lind, G., "How does one measure moral judgment?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a complex construct" [German: Wie mißt man moralisches Urteil? Probleme und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Messung eines komplexen Konstrukts], in: G. Portele, ed., *Sozialisation und Moral* (Weinheim: Beltz, 1978).
- \_\_\_\_\_, *Ist Moral lehrbar? Ergebnisse der modernen moralpsychologischen Forschung* [Can Morality be Taught? Research Findings from Modern Moral Psychology], Second Edition, Berlin: Logos-Verlag, 2002.

\_\_\_\_\_, *Moral ist lehrbar: Handbuch zur Theorie und Praxis moralischer und demokratischer Bildung* [Morality Can be Taught: Handbook on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and Democratic Education], Munchen: Oldenbourg-Verlag, 2003.

〈인터넷 자료〉

<http://economicsandpeace.org/> (2022.1.20)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 (2022.1.20)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2021,"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lobal-peace-index-2021> (2022.2.10.)

Malhotra, Anju, *Solutions to End Child Marriag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2011, <https://www.icrw.org/wp-content/uploads/2016/10/Solutions-to-End-Child-Marriage.pdf>

Sicat, Gerardo P. (2017). "The Global Peace Index," [www.philstar.com](http://www.philstar.com)(2022.2.2. 검색)

Wikipedia. "Global Peace Index",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lobal-peace-index-2021> (2022.2.10. 검색)

## 영문 초록

### The Tool to Measure the Peace Unification Consciousness using the Algorithm of Moral Competence Test by Georg Lind

Park, Gyun-Yeol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peace unification consciousness test as tool. Peace is a state that everyone wants, but its concept and understanding vary from person to person and its concept is related with value issues. In this study, the principle of the Moral Judgment Competence Test (MCT) was applied mainly based on prior research on moral development to constitute the items for measuring the degree of change affected by the peace education. The sampling was conducted to 153 college studen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reliability analysis, some valid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ciousness of peace unification was based on a two-factor structure, including recognition of peace value and recognition of peace unification issues, while the confidence coefficient for each factor was decent(Cronbach's alpha 0.61 and 0.76).

To verify the validity, this study used Kohlbergian main approaches: Preference Hierarchy validity verification according to moral developmental stages, Quasi-simplex Structure of Inter Correlations among the Six Moral Orientations, Affective-Cognitive Parallelism validity verification. This study showed positive results in terms of validity verification. This study is not fully well made tool to measure peace unification consciousness. In future time, this should be supported by deep discussion with experts and much more samples additionally.

---

•Key words : Moral Competence Test, Peace Consciousness Test, Preference Hierarchy, Quasi-simplex Structure of Inter Correlations among the Six Moral Orientations, Affective-Cognitive Parallelism

# 해외기고

---

자본의 무의식으로서의 민족통일 · 박현욱

인간의 탈(脫)-분단 · 이타카기 류타(板垣 竜太)





---

## 자본의 무의식으로서의 민족통일

●  
박현옥

캐나다 요크대 사회학과 교수

신구 통일정치의 언어를 초월하는 탈북자들의 ‘가족 상봉’이 있다. 이들은 1960년대에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 간첩으로 몰려 박해받았으며, 북한을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로 중국에 남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갖은 고초를 겪고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 국민으로도 탈북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용어를 빌리면 그들은 ‘무국적(stateless)’ 주체이다.<sup>1</sup> 현재 그들은 복수의 민족국가 사이에서 살아가는 초국가적 주체로 볼 수 있지만, 이중 또는 다중 귀속을 누리지 못하며 어느 한 곳에 귀속되지도 못한다. 필자는 두 명의 ‘무국적’ 탈북자를 남북통일의 알레고리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분단 한국 역사의 폐허에서 역사적·초국가적 질문을 발견한다. 남북한의 영토 통합이 어떻게 민족통일로 정규화 되었는가? 분단의 역사

---

<sup>1</sup>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London: Schocken Books, 1951).

에서 억압된 민족통일의 본래적 의미 또는 ‘원래의 역사(ur-history)’는 무엇인가? 필자는 민족통일의 역사를 냉전과 남북간 영토적·이념적 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환경에서의 국민을 해방시키는 정치에서 찾는다.

민족통일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과제이다. 수평적 공동체로 이상화된 민족이라는 상상체는 한반도에서 통일된 독립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탐구를 수반한다. 식민 지배 당시와 이후의 상황에서 해방을 위한 조선인(한인)들의 급진적 해방운동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유토피아적 활동으로 굳어졌다. 여기에는 냉전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땅, 일자리, 자유를 찾아 일본과 그 식민지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혁명가들 중 프란츠 파농(Franz Fanon)과 에메 세자르(Aimé Césaire)는 탈식민화에 관한 저술에서 진정한 탈식민화는 국가의 독립이 식민모국과 식민지를 통합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적 투쟁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sup> 마찬가지로 민족 분단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사회의 축을 따라 평등을 위한 경로를 결정하려는 민중들의 투쟁에서 비롯되었으며, 냉전 강대국들이 이를 더욱 강화했다. 민족통일의 추구는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계획 자체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중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I. 또 하나의 가족 상봉

장정순과 오순복은 각각 1938년과 1936년에 평안도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sup>3</sup> 이들은 1958년 시행령 149호에 따라 당시 약 300만 명에 이르렀던

---

2 Fran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5); Aimé Césaire, *Discourses on Colon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3 본 장의 설명과 인용은 2004년 6월 14일에 장정순과 진행한 인터뷰와 조천현이 녹음한 오순복의 나레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주요 도시 및 남한과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탄광, 집단농장, 산간벽지 등으로 보내졌다. 형제자매들 중 일부는 한국전쟁을 전후 하여 남한으로 갔다.<sup>4</sup> 북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또 다시 쫓겨나게 되자 1966년 장씨와 오씨는 중국으로 도피했다. 문화대혁명의 격변기에 중국으로 간 장씨와 오씨는 즉시 간첩으로 몰려 4~6개월간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다. 이후 오씨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연지(연길)에 정착했고, 장씨는 탈북을 도와준 조선족과 마지못해 결혼해 헤이룽장성 상지현에 머물렀다. 장씨와 오씨는 이웃들에게 옷을 만들어 팔아 비교적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그들이 중국 국적이 아닌 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조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5년마다 그들의 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신분을 갱신해주었다.

1979년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으로 장씨와 오씨는 한국 방송사와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찾았다. 1980년대에는 KBS가 1983년에 시작하여 138일간 방송된 TV 프로그램 ‘이산가족찾기’와 같은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한국, 중국, 사할린, 구소련에 흩어진 가족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오순복은 한국 방송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방송사는 한국에 있는 오씨의 오빠를 찾아주었다. 오빠가 곧 오씨를 한국으로 초청했지만, 북한 국적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1980~1989년에 오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몇 차례의 시도를 했고,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하려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마침내 1989년 오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험난한 여정 끝에 버마에 도착했지만, 량군의 한국 대사관은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오씨와 아들은 버마 불법 입국 혐의로 수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서야 오빠가 한국 당국에 간청한 끝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장정순은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를

이션을 토대로 한다. 탈북자에 대한 조천현의 보고서는 조천현, 『탈북자』 (파주: 보리, 2021) 참고.

4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 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찾으려 애쓰던 중 윤 좋게도 중국의 지인이 한국에 있는 장씨의 고향 향우회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향우회에 소속된 장씨 아버지의 친구가 장씨를 한국으로 초청했지만 장씨 역시 북한 국적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다. 결국 1993년 장씨는 자신보다 15세 어린 중국인의 중국 국적 증명서를 사서 한국에 왔다. 한국에 입국한 장씨는 향우회 모임에서 여동생을 만났지만, 여동생이 장씨를 북한 간첩으로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소원하게 지냈다.

장정순과 오순복은 한국에서 수년간 무국적 상태로 지냈다. 한국은 그들의 북한 국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3년여에 걸쳐 법무부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의 상황에 연민을 느낀 개별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들을 귀순자나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민족국가 내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구성원 자격은 대체로 불완전하다. 이들은 한국이 그들을 귀순자나 탈북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고통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씨와 오씨는 모두 청와대, 시민사회단체, 언론에 수년 간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현 탈냉전 세대에서 오씨는 스스로를 ‘귀순자’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난민들은 ‘탈북자’라고 불린다. 장씨는 자신을 ‘탈북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용어는 탈냉전 이후의 난민에게 한정되며 특히 북한인권 옹호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장씨의 북한 탈출은 탈북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장씨는 남북한 냉전 당시 북한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는 남북한 간의 탈출은 ‘귀순’이라 불리웠으며 또한 장씨는 수십 년간 중국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이 장씨와 오씨 같은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한 정부도 사회운동단체도 그들의 이주 경험을 현재의 민족통일 모델 내 어느 곳에 위치시켜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이주는 냉전 중 및 냉전 이후의 민족 역사의 과잉이다. 냉전의 역사는 남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그들의 초국가적 지위

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민족국가적이다. 탈냉전 시기의 정치가 그들의 삶의 역사가 구시대로 생각되는 민족국가 시대에 얽매어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세계화되어 있다. 계급투쟁, 숙청, 혁명 등의 용어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은 평화와 세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재 통일정치에서 설 자리가 없는 과거의 일처럼 보인다. 냉전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려는 남한 국민들은 귀순자나 탈북자로 인정받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한인들에게 장씨와 오씨의 옷차림과 억양은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서 온 조선족과 구분이 힘들다. 이러한 역사적 국면을 고려할 때 그들의 무국적 경험은 냉전 시대에는 너무 초국가적이었고, 탈냉전 시대에는 너무 국가적이었다. 오씨와 장씨의 이주사는 국가와 초국가적 자본이 민족국가의 비전을 좌우했던 민족통일정치의 두 가지 역사적 순간을 관통한다. 지속적으로 쫓겨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던져진 민족국가로의 귀속에 대한 질문은 냉전 시대의 민족국가 체제와 탈냉전 시대의 세계 민주주의 체제에서 거부되었던 그들의 해방을 나타내는 기표(signifier)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민족통일의 원래 역사를 읽을 수 없게 만든 탈냉전 시대의 이원적 통일 정치를 살펴본다.

## II.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통일

탈냉전 시대의 통일정치는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인권 옹호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대북 정치로 전환되었다.<sup>5</sup>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제협력 정책은 교역 및 기타 시장교류의 확대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표방한다. 이

<sup>5</sup> 동 통일정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저서 Hyun Ok Park, *The Capitalist Unconscious: From Korean Unification to Transnational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의 제6장 참고.

에 반해 북한인권 옹호는 북한을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탈북 지원과 정권 교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이 두 정책 간의 대결은 한국의 정치, 미국의 동아시아 관계, 한국 안팎의 시민사회 운동의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경제협력(경협)과 북한인권 옹호는 탈냉전 시대 자본주의 패권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협력 정치와 북한인권 옹호의 대립은 자본주의를 평화와 자유의 정신으로 발전시키는 스펙타클이다. 이는 특히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정치적 좌파가 재구성되었던 1990년대 후반~200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시대적 의식을 구축했다. 경제협력 정책은 때때로 교착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단지) 남북한의 적대감 해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그 세계적 전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원적 통일정치는 민족통일의 원래 역사와 그 사회정치적 과제를 지워버린다.

### III. 경제협력 정책

김대중 정부(1998-2003)는 점진적 평화 통일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 남북 경협 정책을 수립했다. 교역과 기타 경제 교류는 분단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 초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발을 우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협 정책의 세 가지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의 시장의 자유주의 정신을 토대로 정경 분리, 교역을 통한 평화, 합리화라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특히 진보 정부(1998-2008) 집권 기간에 남북한은 지속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류를 지속하고, 남한의 직접 교역, 경제 원조, 관광, 직접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원칙의 채택은 남한이 1970년대에 시작된 국가 주도

의 산업화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교역을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두 번째 원칙은 ‘햇볕정책’이라는 별칭에 잘 드러난다. 이숙 우화 《북풍과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이 별칭은 경험을 북한이 자발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벗도록 하는 태양으로 묘사한다. 햇볕정책의 설계자인 김대중은 평화에 대한 언급 부재가 과거 남북 경제교류 정책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교역은 당사자 간의 최소한의 신뢰만으로 시작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므로, 햇볕정책은 군사·정치 갈등 종식을 위해 양측 모두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평화로서의 시장 정신은 역사와 대중의 의식 속에 널리 자리잡고 있다. 17~18세기 유럽의 철학자들은 상업과 제조업 생산이 독재 통치의 사악한 열정과 사적 이익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통제할 수 있는 이해(interest)를 부여한다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명예와 영광이라는 중세적 개념에 얽매어 이해가 양심, 건강, 부, 숙고, 계산에 대한 ‘인간 열망의 총체’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으며, 이후 특히 애덤 스미스에 의해 그 의미가 경제적 이익으로 축소되었다.<sup>6</sup> 평화와 갈등 해결에 관한 사회과학 문헌은 교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갈등이 빈발하는 지역에서 평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추상화를 더욱 발전시켰다.<sup>7</sup>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정신을 보편적인 모델로 전환시키는 경험 정책은 민족통일 정치에서 역사와 권력을 지위버

6 Albert O. Hirschman,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The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7 Indra de Soysa·Hanne Fjelde, “Is the Hidden Hand an Iron Fist? Capitalism and Civil Peace, 1970–200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3 (2010), pp. 287–298; Seung-Whan Choi, “Re-Evaluating Capitalist and Democratic Peace Model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3 (2011), pp. 759–769; Erik Gartzke,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pp. 166–191; Christopher Rusko·Karthika Sasikumar, “India and China: From Trade to Peace?” *Asian Perspective*, vol. 31, no. 4 (2007), pp. 99–123.

리며, 경협을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 자체의 경제적 위기를 감춘다.

앞의 두 가지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세 번째 원칙인 합리화는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에 맞춤형 된 보다 실용적인 언어를 수반한다. 김대중에 따르면, 냉전시대의 ‘정치-군사 전쟁’은 오늘날 경제 강국들이 자유무역정책과 경제 지역주의로 무장한 ‘경제 열전(熱戰)’으로 대체되었다.<sup>8</sup> 대북 경협은 남한이 글로벌 경제력을 유지하고 경제 열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 필수 조건으로 간주된다. 남북의 ‘원원’ 해법이라고 불렸던 이 정책은 우선 노동집약적 산업과 사양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이후 중화학, 전자,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이전함으로써 남한의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환영받았다. 북한은 남한 기업의 새로운 시장이자 저렴한 국가 자원과 노동력의 공급처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sup>9</sup> 경협 정책은 자본주의를 합리화로 간주하는 막스 베버(Max Weber) 개념을 품고 있지만 철창 효과(iron-cage effect)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협 정책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국가, 자본, 언론, 학계, 대중의 광범위한 합의를 구축했다. 군부독재 시절 국가는 국력을 키우고 북한이라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1990년대 말부터 진보 정부는 자본주의 위기 해결책으로서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개혁을 가속화했는데 이는 IMF의 요구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국면에서 통일정책은 남한의 자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포함한 경제연구소들은 이 정책의 경제적 이점을 추켜세웠다. 기

---

8 Kim Dae-jung, Translated by Rhee Tong-chin, *Kim, Dae-jung's "three-stage"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Focusing on the South-North Confederal Stage*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1997).

9 홍익표, 「남북경협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통일연대 주최 2004 통일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4.7.22.);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업 리더, 산업 협회, 언론, 대학, 변호사, 경제학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다수의 새로운 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협회는 재계에 자문을 제공하고, 공개 세미나 및 워크숍을 후원하여 재계와의 협력 하에 대중에게 대북 경험을 교육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자본의 열의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로서 대북 경험을 중단하려 했을 때조차도 멈추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민족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축적을 탈냉전 시대의 진실로 전 세계에 제시한다. 동시에 자본은 국가를 대체하여 민족통일의 주체가 되었다.

#### IV. 북한인권 정치

1995~1998년 북한 식량 위기와 이에 따른 중국으로의 잇따른 이주는 북한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를 더욱 자극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한과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보수주의를 강화했다. 이는 전향한 과거의 좌파,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그들이 진보적 정부라고 부르는 존재에 반대하는 기타 보수세력을 결집시켰다. 보수세력은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악한 국가(evil state)로 만들었다. 경험 정책과 북한인권 옹호의 정면 승부는 북한의 주권과 세계민주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북한 이탈주민을 자유를 찾아 떠난 정치 난민으로 규정하여 실패한 국가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경험 정책 옹호자들은 북한 난민을 소련과 중국의 갑작스러운 원유공급 중단 및 미국의 금수조치와 같은 일련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통화 위기에서 탈출한 일시적 이탈주민으로 간주한다.<sup>10</sup>

<sup>10</sup> 「Citizens' Alliance Demonstrates for Passage of Act」 『DailyNK』(온라인), 2014년 2월 12일, <<https://www.dailynk.com/english/citizens-alliance-demonstrates-for/>>; 이금순, 「북한인권

북한인권 옹호는 민족국가 체제의 역설을 세계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아렌트는 20세기 전반부에 전체주의적 억압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현대적 역설을 기술했다.<sup>11</sup> 인간으로서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민족국가의 시민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민족국가 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에 따르면 난민과 시민의 구분은 사라진다.<sup>12</sup> 근대국가는 생명의 생산에 주권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장기화된 비상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의 전 세계적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특정 국가 내 시민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른바 세계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초국가적으로 추정되는 강대국들에게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2001년 미국이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선언한 후, 미 의회는 2003 북한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과 2004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한반도에 미국의 북한 침공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미 의회가 이라크 해방법(Iraq Liberation Act)을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과 미국의 초국가적 권한 사이의 모순, 또는 한국 내 보수주의자들의 민족주의 표방과 세계 평화 사이의 모순은 탈북이라는 스펙터클에 의해 감추어진다. 제3국을 통한 은밀한 탈출을 조직하는 것은 지역 NGO와 보수 성향의 교회, 그리고 대중들의 기부에 대한 그들의 호소를 강화시켰다. 한국과 유럽의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중국 주재 외국대사관 진입을 통한 입국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EU 회의가 소집되었을 당시와 미 의회가 2004년 대북 결의안을 준비할 당

---

상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반응», 이완희 외,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4』(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2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시에 최고조에 달했다.<sup>13</sup>

북한인권 옹호는 민주주의가 칸트의 선형적 보편적 가치로의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민주주의의 부르주아적 공화화에 대한 비판에 따르면 칸트는 자유를 역사적 경험(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이론과 도덕을 결합시키는 선형적 원천, 즉 자발성을 향하는 물화로 상정한 다.<sup>14</sup> 블로흐에 따르면 칸트의 테제에는 경험과 상정 사이의 이원론과 ‘필요의 영역’과 ‘자유 영역’ 사이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블로흐는 현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삼색 원칙 사이에 본질적인 긴장을 수반한다고 설명한다. 자유가 사유재산의 소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선택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중주권(mass sovereignty) 확립을 통한 평등을 ‘향한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옹호는 윤리에 대한 호소를 통해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본래적 긴장을 봉합한다. 자유, 세계민주주의, 무결성의 옹호는 북한 정권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북한 위기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자본주의를 처방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실업, 사회불안, 부채가 심화되고 재구성된다는 사실이 감추어진다. 이러한 자본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사실은 남북 분단이 식민지적 기원과 냉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13 조천현, 『탈북자』 (파주: 보리, 2021).

14 Ernst Bloch, *Natural Law and Human Dignity* (Cambridge: MIT Press, 1987), pp. 161-62.

## V. 자본의 무의식으로서의 민족통일

북한인권 옹호와 경제협력 정책 사이의 대립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양 정책 간의 합의를 감춘다. 경제협력 정책은 자유시장을 평화의 새로운 윤리로 귀화시킨다. 북한자유법과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자유시장체제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들 법은 미국 정부가 난민 지원과 정보 전파뿐만 아니라 북한에 경제 자유화를 도입하기 위해 개인, 단체, 정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승인한다. 경제협력 정책과 북한인권 옹호 모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로 간주하면서, 점진적으로든 무력을 통해서든 시장화를 북한의 정권 교체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원적 남북통일 정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탈냉전 시대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 즉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와 그에 따른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인 자유의 해방을 구축한다. 탈냉전 시대를 '역사의 종말'로 구축하는 것은 한국 안팎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상황을 가리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통일정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필자는 이원적 민족통일 정치의 자본주의적 특성을 상충과 갈등이 존재하는 동북아 블록에 대한 비전과 자본의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협력 정책은 중국과 북한을 중요한 경제 동맹으로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 블록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구성한다. 한국을 아시아와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북방정책과 세계화 정책에 이어, 2000년대 진보 정부는 동북아 허브 계획을 통해 한국을 교역, 금융,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구상했다. 북한은 이 블록의 마지막 연결고

리를 구성하며 한국을 중국 및 북한의 다른 경제 파트너들과 연결한다.<sup>15</sup> 그러나 남북한은 또한 남북 경제융합의 비전 이면에 지속적 갈등을 안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한국의 패권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반면에, 북한인권 옹호는 미국이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재구성한 것과 연계되었다. 빌 클린턴 집권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와 유사한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신설되어, 아시아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 국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월가 금융자본의 힘을 미국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걸쳐 강화하는 주체로 힘을 실어 주었다.<sup>16</sup> 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전파는 불량국가로부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맞물려있으며, 이는 미국이 인도·파키스탄과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면서 일본·한국과 안보 및 경제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두 대립된 통일정책은 남북한, 그리고 세계에서 남북한의 위치에 대한 전 세계 자본주의 네트워크의 상충하는 비전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립된다고 여겨지는 두 통일정책은 자본주의적 통일정책의 양면이어서 대립적 통일정치가 아닌 양면적 통일정치로 개념화 되어야 맞다. 이 이원적 통일 정치는 국가와 세계 무대에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재구성의 사례이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는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인한 파열이나 단절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안팎에서의 자본의 끊임 없는 투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안전망, 권리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은 한국 안팎에서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제기되어왔

15 김규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 1호 (2004), 103~125쪽.

16 Peter Gowan, *The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London: Verso, 1999).

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질문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내부에서 괴멸되고 있다는 모든 구체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역사적 진보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상상하는 자본주의 정치에 대한 의문이다. 이원적 통일정치는 이러한 모순적인 자본주의 정치의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 이원적 남북통일 정치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주이상스(jouissance)’라고 지칭하는 것, 즉 자본주의에 의한 지배의 징후를 즐기므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낸다.<sup>17</sup> 이원적 통일정치는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주이상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평등과 자유에 대한 욕구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자본주의의 향유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평등과 자유)를 이루지 못했다’고 되뇌이므로써, 자본주의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본주의를 온전히 유지한다(Dean 2009:58).<sup>18</sup> 한국에서 이 ‘누군가’는 남한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공주의 제도와 여전히 냉전에 고착되어 있다고 간주 되는 북한이다. 국가보안법을 계속 운영하고 국가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반복 정서를 이용한 탓에 자원이 소모되고 경제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원적 통일정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자본주의를 북한으로 확장한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자본주의 실패를 자본주의 확장이라는 유토피아적 도치를 통해 민족 통일로 대체하여, 그러한 실패를 북한이라는 타자의 탓으로 돌린다. 한국인들은 북한을 더 이상 국가의 적이 아닌 자본주의의 낙후된 외딴 지역으로 탈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계속 동일시할 수 있다. 남북한 자유교역 형태의 평화는 산업 근대화와 대중 민주주의의 유예된 약속을 향유하는 것이다. 통일정치가 창출하는 효과는 북한의 민

17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지젝 2007 빠져있음.

18 Jodi Dean, *Democracy and Other Neoliberal Fantasies: Communicative Capitalism and Left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주화 자체가 아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의 재확인이다.

## VI. 결론

이원적 통일정치는 변증법적 반전으로, 민족분단의 원천을 해결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한다. 민족분단과 그 재생산의 원천에는 국가, 독점자본, 미국의 지배가 포함되며, 이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는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 민중운동의 초점이었다. 이원적 통일정치는 특히 1990년대 후반~2000년대 후반에 기존의 좌·우가 진보·보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진보 정부도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들과 보수의 구분은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논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식민주의와 냉전의 역사 해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식민 역사에 대한 그들의 참여한 대립은 이원적 통일정치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합의를 감춘다. 이러한 합의는 이원적 통일정치가 시장 자본주의를 평화와 자유의 서사로 변모시키고 북한을 타자화함으로써 조장하는 자본의 무의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족통일의 이원적 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역사적 진보의 단계로 구성하는 일종의 역사주의를 부여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규제완화, 민영화, 실업, 유연하고 불안정한 고용, 자기수양(self-cultivation) 정신을 통해 사회적 삶의 영역을 전환시킨다는 사실을 감춘다. 이러한 모든 신자유주의의 악은 요란하게 비판받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이념적 승리라는 잘못된 의식이 그러한 비판의 소리를 약화시킨다. 북한에 대한 자본의 무의식은 민족의 원래 역사에 대한 각성을 통해 깨질 수 있다. 억압된 민족분단의 근원에 대한 이러한 각성은 우리 자신의 현실과 모순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모순을 보여주는 일상적 징후에 대하여 현상학적 표면 이상의 관심을 기울여, 그러한 징후를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 정책은 쌀, 오렌지, 의류, 비료 등 남한이 쓰고 남은 것을 북한에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된다. 남한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활동이 해마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고 북한의 청소년, 운동선수,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고 자조 섞인 한탄을 한다. 또한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깊은 의구심 및 불안감과 뒤섞여 있다. 세계화와 세계시민주의의 시대에 한국인들은 남북의 영토적·사회문화적 통합의 진정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론은 물론이고, 이론과 현실 양 측면 모두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통일의 일상적 경험 및 통일의 현재와 미래는 평등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투영되는 수평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비전을 상징한다.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환경은 민족통일에 대한 의지와 회의를 모두 활성화한다. 탈냉전은 이원적 남북통일정치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새롭게 하는 자본주의의 재구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협력 정책과 북한인권 옹호는 (단지)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 사회 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금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반응」, 이완희 외,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4』,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조천현, 『탈북자』, 파주: 보리, 2021.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London: Schocken Books, 1951.
- Bloch, Ernst, *Natural Law and Human Dignity*, Cambridge: MIT Press, 1987.
- Césaire, Aimé, *Discourses on Colon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 Dean, Jodi, *Democracy and Other Neoliberal Fantasies: Communicative Capitalism and Left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 Fanon, Fran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5.
- Hirschman, Albert O.,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The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Kim Dae-jung, Translated by Rhee Tong-chin, *Kim, Dae-jung's "three-stage"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Focusing on the South-North Confederal Stage*,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1997.
- Park, Hyun Ok, *The Capitalist Unconscious: From Korean Unification to Transnational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 김규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 1호 (2004), 103~125쪽.
- 홍익표, 「남북경협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통일연대 주최 2004 통일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4.7.22.)
- Choi, Seung-Whan, "Re-Evaluating Capitalist and Democratic Peace Model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3 (2011), pp. 759-769.
- De Soysa, Indra · Hanne Fjelde, "Is the Hidden Hand an Iron Fist? Capitalism and Civil Peace, 1970-200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3 (2010), pp. 287-298.
- Gartzke, Erik,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pp. 166-191.

Rusko, Christopher·Sasikumar, Karthika, "India and China: From Trade to Peace?" *Asian Perspective*, vol. 31, no. 4 (2007), pp. 99-123.

〈인터넷 자료〉

「Citizens' Alliance Demonstrates for Passage of Act」 『DailyNK』(온라인), 2014년 2월 12일,  
〈<https://www.dailynk.com/english/citizens-alliance-demonstrates-for/>〉

---

## 인간의 탈(脫)-분단

이타가키 류타(板垣 竜太)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사회학과 교수

### I. ‘반(反)-반(反)’의 사상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평화’라는 말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말도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지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퍼져 나가는 ‘전쟁 반대!’(Нет войне!)라는 슬로건에 비하면 ‘평화’라는 말은 자못 가벼워 보이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반대!’는 어쨌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는 외칠 수 없는 말인 반면, ‘평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판전을 부리면서도 중얼거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평등’이나 ‘인권’, ‘우호’와 같은 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구체적인 차별과 마주하지 않는 ‘평등’론, 눈앞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묵과하는 ‘인권’론,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 ‘우호’론 등은 모두 그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과거 문화상대주의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인류학

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반(反)-반(反)-상대주의(相對主義)’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sup>1</sup> 이것은 기어츠 특유의 맛이 있는 절묘한 표현인데 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원래 긍정적인 가치를 의도하여 등장했음에도 때때로 공허한 말이 되어 버리거나 역기능을 갖게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반-반’(anti-anti)이라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에 대한 희구가 ‘반-반-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선가 이미 달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시라도 빨리 멈추기 위한 외교 노력은커녕 NATO측에 자신의 입장을 일체화시키고 러시아와 정면 대립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데 여념이 없다. 평화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전쟁 선동과도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 현장은 먼 이국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도 있다.

통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는 여기에도 ‘반-반’의 사고가 개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역사적 문맥에서 ‘통일’의 반대말은 ‘분단’이다. 분단의 구체적인 여러 현실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통일론만큼 공허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이란 ‘반-분단’이며 그 프로세스로서의 의미를 더 강화하면 다름 아닌 ‘탈(脫)-분단’이다.

이때 평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탈-분단의 복수성(複數性)이다. ‘통일’ 개념에는 한자어(‘一’)든 유럽어(“uni-”)든 ‘하나’에 해당하는 요소가 들어 있어 말 그 자체에 복수의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가 각기 국가 주권을 주장하는 ‘두 개’의 체제로 나뉘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 인권, 경제, 정치적 자유에 중대한 모순들을 초래하고 있는 이상, 그 해결의 길이 ‘하나’가 되는 것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와 동시에 탈-분단은 단순

---

<sup>1</sup> Clifford Geertz, “Anti Anti-Relativism,” *American Anthropologist*, vol. 86 no. 2, (1984), pp.263-278.

히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분단은 단지 지리적으로 남북한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인 김남주가 광주 5.18 후에 쓴 시만큼 그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sup>2</sup>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김남주가 여러 광경들을 잘 그려내고 있듯이 ‘삼팔선’은 여기저기에 있다. 바꿔 말하면 분단의 현장은 편재해 있는 것이다. 이는 군사정권기의 한국이라는 시대 및 영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모습을 바꾸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삼팔선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의 총체가 분단이라고 한다면 탈-분단은 결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수한 분단을 극복해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탈-분단이다.

## II. 일본 안의 ‘삼팔선’

또한 남북 분단은 한반도 밖으로도 퍼져 있다. 김남주가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듯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이 시에서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내가 사는 일본에도 ‘삼팔선’이 있다. 특히

2 원전은 김남주, 『나의 칼 나의 피』 (서울: 인동, 1987) 수록. 인용은 김남주, 『김남주 시전집』, 염무웅·임홍배 엮음, (서울: 창비, 2014)에서 발췌.

일본 국내에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이라는 두 개의 민족 단체가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병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한반도 남북 대립의 미니어처 복제판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는 일본과 남북한과의 관계, 일본에서의 재일 코리안의 위치라는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나는 앞서 「은각사(銀閣寺)의 삼팔선」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sup>3</sup> 은각사는 교토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로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여기에 ‘삼팔선’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은각사 옆에 1958년 조선학교 캠퍼스가 생겼다(지금도 거기에 있다). 공사 초기에는 지역의 저항이 다소 있었지만 곧 수그러들어 준공식에는 지역 자치회장이 축사를 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1962년에 일어났다. 교토의 다른 지역에 있던 한국학교가 이곳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용지를 확보해 이전한다는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바로 몇 년 전 조선학교를 받아들인 지역 주민이었다. 이 주민은 매년 8월 16일이 되면 교토의 산 ‘노이가타케(如意ヶ嶽)’에서 모닥불 75개를 큰대자(大) 모양으로 만들어 동시에 불을 붙이는 불을 붙이는 ‘오쿠리비(送り火)’라고 불리는 전통 제례를 맡아온 사람인데 한국학교 이전 계획에 반발해 이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때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주변 주민들까지 합세해 이전 반대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동맹이 내건 슬로건이 “은각사 지역에 삼팔선을 긋지 말라”는 것이었다. 결국 공사를 인가했던 교토시도 그 후 인가를 취소하면서 한국학교는 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3 板垣竜太, 「銀閣寺の38度線 : 日韓會談期京都の民族学校と地域社会」, 太田修編, 『植民主義, 冷戦から考える日韓関係』(東京: 同志社コリア研究センター, 2021).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민단 대 총련’ 또는 ‘한국학교 대 조선학교’의 다툼이었다기보다는, 오로지 지역의 일본인들이 학교 이전에 반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이케다 하야토 정권 간에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치 세력을 ‘혁신’,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보수’라고 불러왔는데 보수 대 혁신의 정치 구도로 펼쳐지던 한일회담 반대 운동 속에 이 한국학교 이전 문제가 포함되면서 일이 커졌다. 여기에는 혁신계인 교토부(京都府)와 보수계인 교토시(京都市)의 대립도 얽혀 있었고 관광 개발에 매진하는 교토시에 대한 은각사 지역 사람들의 반발도 섞여 있었다. 즉, 이러한 복수의 정치적 대립이 우연히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의 입지 문제에 반영되었을 때, 한국전쟁 휴전으로부터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만큼 ‘삼팔선’이라는 말이 지역 사회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일정한 현실성을 띠고 출현한 것이다. ‘사람들 안의 냉전 세계’의 형성을 탐구한 마스다 하지무(益田肇)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반도의 남북 대립이 ‘로컬로 번역’되어 복수의 분단선의 해석 틀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sup>4</sup>

일단 이러한 지배적 현실이 만들어지자 다른 현실은 은폐되었다. 당시의 혁신 세력에게 한국학교 이전 반대는 박정희 군사정권, 혹은 그 뒷배로 간주되던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에 대한 반대의 일환이나 다름없었다. 즉, 눈앞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재일 코리안들의 모습은 현실에서 빠져 있었다. 이 점을 당시 혁신 세력이 대체로 재일 코리안의 이른바 ‘귀국사업’, 즉 북한으로의 집단 이주 사업에 적극 힘을 보태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쳐서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자칫 당시의 혁신 세력이 재일 코리안을 일본 밖

4 益田肇, 『人びとのなかの冷戦世界：想像が現実となるとき』(東京: 岩波書店, 2021).

으로 내보내는 데 주력한 나머지 그들이 정주 외국인으로서, 혹은 소수민족(ethnic minority)으로서 그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고 일본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일본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과제를 뒷전으로 미뤘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 사회 자체의 문제와 과제를 한반도에 있는 어느 한 쪽 분단 정부와의 외교적(또는 몰(沒)-외교적 내지 적대적) 관계로 환원하는 사고가 엿보인다. 그것은 제일 코리안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표리일체이다. 물론 이는 혁신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일 안보체제 아래 고도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일본 안의 '삼팔선'은 남북한 간의 분단을 일본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 즉 1945년 이전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1945년 이후 일본과 남북한 간의 관계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 정주하게 된 코리안의 존재가 '삼팔선들'의 해석의 틀을 규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한일조약(1965년) 이전의 일인데 그 후 일본이 남북한 중 남한과만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북한의 경제정책,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진전 등을 거치면서 일본에서의 남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말하자면 '역전' 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과거 일본에서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을 때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증오가 국민적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이 예컨대 조선학교를 둘러싼 상황에도 짙게 반영되고 있다.

2003년에는 조선학교 이외의 외국인학교(한국학교 포함)가 국립대 응시 자격을 취득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터내셔널스쿨 또는 외교적으로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응시 자격을 얻었지만 조선학교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단위의 응시 자격이 지금까지도 인정되지 않아 대학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조선학교를 북한과 일체로 간주해 사실상의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가 2010년 시작된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이른바 ‘고교 무상화’)에도 적용되어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저격적인 배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의 입장이 ‘역전’된 것처럼 이해될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학교가 원래 수적으로 훨씬 적지만 교토의 경우 2004년에 일반 중학교·고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一条校’, 학교교육법 제1조의 교육시설)로 전환되어 이름도 교토국제학원(京都国際学園)이 되었다. 일본인도 입학하면서 말하자면 민족학교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일본의 학교제도에 근접시켜 인가를 받음으로써 문제없이 국립대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고교 무상화 제도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원래 강했던 야구부가 더욱 힘을 길러 2021년에는 고시엔(甲子園) 구장에서 열리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 교토부 대표로 봄, 여름 모두 출전했다(2022년 봄에도 대표로 선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전 단념). 많은 야구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교토국제학원의 고시엔 출전은 또 다른 형태로 주목을 받았다. 고시엔에서는 출전 학교의 교가가 흘러나온다. 교토국제학원의 교가는 한국어인데 가사 일부에 ‘동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이 기묘한 형태로 부각되었다. 인터넷상에서는 국제학원에 ‘반일’ 딱지를 붙인 악플이 쏟아졌고 그러한 인터넷상의 선동으로 학교에는 협박 전화가 쇄도했다. 학교는 임시로 경비원을 고용해 학생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여기에는 최근의 악화된 한일 외교 관계가 투영되고 있다. 더이상 민족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외교 문제를 배경으로 한 배제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이다. ‘튀어나온 말뚝은 얻어맞는다(出る杭は打たれる)’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일본’에 가까워져 있더라도 사소한 일에서 남북한과 관련된 ‘튀어나온 말뚝’으로 인식되면 그것을 ‘내리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재일 코리안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안보화’(securitization)되어 왔다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sup>5</sup>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 하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조선인들이 ‘불령선인(不逞鮮人)’ 등으로 불리며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고 치안유지법 체제에서 독립운동이 ‘국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전후에도, 최대 민족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 단체등규정령의 ‘점령군에 반하는 행위’, ‘폭력주의적 방법의 시인·정당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산당했고(1949년),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있던 많은 조선인학교들이 일제히 폐쇄되었다. 당시 조련계로 간주되지 않은 학교는 가까스로 존속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삼팔선’에 따른 처우의 차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조선학교의 폐쇄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학교 규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우리나라(일본) 사회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법안은 통과되지 않음). 이처럼 전쟁 전부터 전후에 걸쳐 재일 코리안의 활동들이 국가안보의 논리에 따라 정부 및 민간의 감시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한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가 거기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튀어나온 말뚝’으로 간주되면 민관의 공격 또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5 안보화에 대해서는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Barry Buzan·Ole Wæver·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CO: Lynne Rienner, 1988) 참조. 이 개념을 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적용한 것으로서 樋口直人, 『日本型排外主義：在特会外国人参政権東アジア地政学』(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4).

### III.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인간의 탈(脫)-분단

이처럼 일본에서의 ‘삼팔선’은 재일 코리안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일본과 남북한, 일본인과 코리안 사이에 있는 다양한 분단 위에 놓여 있다.<sup>6</sup> 즉, ‘삼팔선’이란 원래 순수하게 지정학적인 개념이면서도 그 실태에 있어서는 권력관계와 단절 등을 내포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냉전하에서 ‘동서’, ‘남북’과 같은 지정학적 대립이나 단순한 진영론으로 표상되어 온 것들이 실은 대부분 다양한 권력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에 붙여진 라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는 과거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서술한 내용과도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sup>7</sup> 사이드에 따르면 동양(Orient), 서양(Occident)과 같은 구분은 역사적 및 지리적인 실태라기보다는 서구와 그 밖의 지역 간에 있는 권력관계, 지배관계, 헤게모니 관계와 지정학적 지식을 전제로 한 하나의 관념이다. 이와 비슷한 측면이 ‘냉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교나 군사면에서는 ‘냉전’이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정치구도 속에서 인생을 건 진지한 이념 투쟁이 있었음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하나의 변수에 특화된 정치(politics) 속에서 종종 다른 변수가 가져오는 권력관계는 후경으로 물러났던 것 또한 분명하다.<sup>8</sup>

이러한 냉전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연구의 관점을

6 최근 ‘조선적(朝鮮籍)’ 재일 코리안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일본과 남북한의 관계 및 재일 코리안에 대한 일본의 레이시즘과의 관계에서 38선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李里花編, 『朝鮮籍とは何か: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の視点から』(東京: 明石書店, 2021); 鄭栄桓, 『歴史のなかの朝鮮籍』(東京: 以文社, 2022).

7 Edward W. Said, *Orientalism* (George Borchardt Inc, 1978).

8 예를 들어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자본주의론 및 동서진영론적인 틀 안에서 펼쳐져 식민지 지배 책임과 민족문제가 잊혀진 점에 대해서는 板垣竜太, 「日韓会谈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思想』 2010年1月号.

나는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고 부른다.<sup>9</sup> 지역 연구(Area Studies)는 식민주주의와 냉전의 산물이지만 거꾸로 그것들에 대항하는 비판적인 지역 연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나 세계 시스템과 같은 큰 연구 대상보다 오히려 지역이나 개인과 같은 작은 연구 대상에 주목해 거기에 흘러들어온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그 장(場)에서 작용하는 복수의 권력관계 및 그 상호간의 얽힘을 철저히 추적함으로써 또 하나의 열린 세계사를 그려내는 것의 중요성을 제창했다. 나는 그러한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한 시도로서 월북한 언어학자 김수경에 관해 한 권의 책을 펴냈다.<sup>10</sup> 또한 본고에서 소개한 「은각사의 삼팔선」도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비판적 코리아 연구는 이름 그대로 연구상의 입장과 관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장에서의 ‘삼팔선’의 모습을 역사적 및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탈-분단을 위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저기에 ‘삼팔선’이 있다는 것, 즉 분단이 편재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탈-분단의 장도 여기저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국가안보와는 별개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국가 차원의 탈-분단과는 별개로 ‘인간의 탈-분단’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 국가 차원의 탈-분단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것으로써 인간의 탈-분단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 차원의 탈-분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다양한 장에서 인간의 탈-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탈-분단의 현장은 남북한뿐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

9 이타가키 류타,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하여: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저항하여」 『역사비평』 132호 (2020), 232-258쪽.

10 板垣竜太, 『北に渡った言語学者: 金壽卿 1918-2000』 (京都: 人文書院, 2021).

도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의 인간의 분단 사례가 남북한 간 관계, 일본과 남북한 간 관계와도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간의 탈-분단도 국내에(national) 갇힌 운동일 수 없다. 인간의 탈-분단은 초국가적(transnational)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매우 불손한 일이지만 김남주의 시를 조금 바꿔서 마무리하자면, 삼팔선 극복의 장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다. 삼팔선 극복의 장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저쪽 나라, 이쪽 나라에도 있다.

## 참고문헌

- 김남주, 『김남주 시전집』, 염무웅·임흥배 엮음, 서울: 창비, 2014.
- Buzan, Barry·Wæver, Ole·Wilde, Jaap 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CO: Lynne Rienner, 1988.
- Said, Edward W., *Orientalism*, George Borchardt Inc, 1978.
- 이타가키 류타,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하여: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저항하여」 『역사비평』 132호, 2020, 232~258쪽.
- Clifford Geertz, "Anti Anti-Relativism," *American Anthropologist*, vol. 86 no. 2, (1984), pp. 263-278.
- 太田修編, 『植民主義, 冷戦から考える日韓関係』, 東京: 同志社코리아研究センター, 2021.
- 益田肇, 『人びとのなかの冷戦世界: 想像が現実となるとき』, 東京: 岩波書店, 2021.
- 樋口直人, 『日本型排外主義: 在特会·外国人参政権·東アジア地政学』,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4.
- 李里花編, 『朝鮮籍とは何か: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の視点から』, 東京: 明石書店, 2021.
- 鄭栄桓, 『歴史のなかの朝鮮籍』, 東京: 以文社, 2022.
- 板垣竜太, 「日韓会談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思想』 2010年1月号  
\_\_\_\_\_, 『北に渡った言語学者: 金壽卿 1918-2000』, 京都: 人文書院, 2021.  
\_\_\_\_\_, 「銀閣寺の38度線: 日韓会談期京都の民族学校と地域社会」, 太田修編 『植民主義, 冷戦から考える日韓関係』, 東京: 同志社코리아研究センター, 2021.

# 리뷰

---

배반하는 역사 속에 피어난 사람의 역사 • 송기찬

통일 전망대 • 강수정





---

# 배반하는 역사 속에 피어난 사람의 역사

서평: 이민진 지음, 『파친코』(문학사상, 2018)

●  
송기찬

리츠메이칸대학 영상학부 교수

## 1

“아빠, 도대체 역사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가 2차 세계대전 중 집필한 [역사를 위한 변명]은 한 소년이 역사학자인 아버지에게 했다는 이 같이 인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2차대전이 발발하자 당시 소르본느의 역사학 교수였던 53세의 블로흐는 프랑스군에 자원 입대한다. 계급은 대위였다. 파리가 나치스에게 함락되던 날, 그의 동료 장교 하나는 “역사가 우리를 배신했다!”라며 탄식한다. 그 장교의 탄식과 소년의 질문은 그로 하여금 전쟁 중에 ‘변명’을 쓰도록 했다.

## 2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무덤덤하지만 강렬한 이 한 줄로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시작한다.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나는, 재일동포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보다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이 표현은, 동시에 재일동포의 역사를, 지금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압축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이다. 비루한 식민지의 역사는 재일동포의 삶에 날카롭게 개입하여 그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또 지금도 남기고 있지만, 그래도 재일동포들은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 소설은 그러한 재일동포의 삶의 기록이고 재현이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역사'이다. 국가 단위의 역사에서 배반당한 민중들의 인간적인 역사. 블로흐가 시도했던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 하겠다.

### 3

소설은 일제강점기의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선자라는 여인의 일생을 4대에 걸친 연대기적 역사서술로 그리고 있다. 영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선자의 아버지는 장애인이었고 빼앗긴 나라의 무력한 백성이었다. 아버지는 선자를 무척 아꼈지만, 딸이 성장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선자가 13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난다.

성장한 선자는 제주도 출신의 조선인 야쿠자 고한수와 사랑에 빠져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고한수는 이미 오사카에 일본인 처와 자식들이 있는 기혼자였고 선자는 아이가 생긴 다음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현 지처가 되어 달라는 고한수의 부탁을 거절한 선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평양에서 온 목사 백이삭이었다.

이삭은 오사카의 교회로 부임하던 중 도항수속을 위해 부산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평양에서 부산에 이르는 긴 여정에 그만 결핵이 재발했는데 선자 어머니와 선자의 지극한 도움으로 회복할 수 있었

다. 이삭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선자와 결혼할 것을 결심한 것은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알고도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이삭의 청혼은 미혼모라는 불명예로부터 선자와 선자의 어머니를 구원해 주었고, 선자는 고한수의 씨앗을 뱃속에 품을 채, 이삭을 따라서 오사카로 건너간다.

오사카에서는 이삭의 형 요셉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요셉의 처경희는 선자와 죽이 잘 맞았고 이후 평생을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된다. 오사카에서 선자는 곧 고한수의 아이를 낳았고, 큰 아버지가 된 요셉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노이라고 지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아이 모자수가 태어나지만, 이삭은 신사참배를 부정하는 불경을 저질렀다는 죄로 일본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하고 만다.

#### 4

아버지 훈이가 죽고 난 후 어머니 양진과 함께 어렵게 하숙집을 꾸리며 살아야 했던 선자에게 시장통 아주머니는 여자의 인생이란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푸념어린 설교를 한다. 그렇기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질서 속에서 좋은 아버지와 남편의 부재는 이처럼 여성들을 실질적인 곤경으로 이끈다. 소설 속에서 선자는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를 잃는다. 마음은 따뜻했으나 무력한 식민지 백성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남편이자 자신의 구원이었던 이삭의 죽음, 그리고 타향살이의 유일한 의미였던 큰아들 노아의 죽음이다. 이 세 죽음은 모두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이 있다. 조선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국가’는 가부장적 질서의 확장이었고, 따라서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선자의 삶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 민중들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훈이가 죽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일을 해야 했던 선자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민중들의 삶을 멈출 수는 없었다. 물론 이삭이 죽어갈 때도 선자는 예전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을 해야 했다. 삶은 지속되어야 하니까.

## 5

선자의 큰아들 노아는 명문 와세다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영민한 아이였다. 이삭이 죽은 후 선자는 경희와 함께 김치장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노아를 와세다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없었다. 선자를 지켜보고 있던 야쿠자 고태수는 자신의 아들이 와세다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러나 고태수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충격으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집을 나가서 가족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게 된다.

한편 이삭의 아들인 모자수는 이성적인 노아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공부로 성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노아는 내심 일본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모자수는 자신을 차별하는 세상에 조선인으로서 박치기를 하길 바랐다. 욕하는 성격으로 그만 큰 사고를 치고 학교를 그만둔 모자수는 결국 당시 제일동포가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업인 파친코 업계에 발을 들인다. 그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모자수는 이후 성공한 파친코 사업가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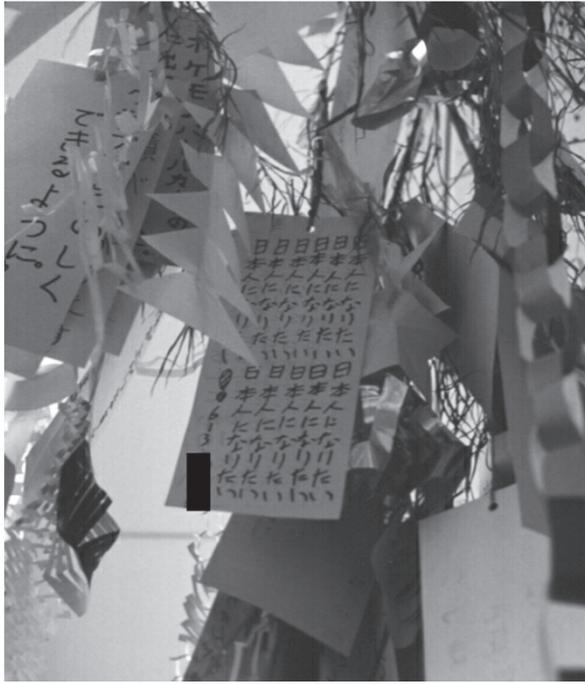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숨어버린 노아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가노시에 정착한다. 나가노에서 그는 일본으로 귀화하고 일본인과 결혼하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나 노아의 직장은 파친코였다. 머리가 좋았던 노아는 나가노의 파친코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로 출세하게 되었지만, 그의 위험한 줄타기는 고태수가 선자를 데리고 그 앞에 나타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8년만에 만난 선자 앞에서 노아는 자신에게는 야쿠자의 ‘저주받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결국 파친코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하며,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말한다. 노아의 가족 아무도 노아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노아의 말에 선자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선자가 노아의 사무실을 떠나간 뒤 바로 노아는 자살한다.

## 6

부산에서 잉태되었지만, 오사카에서 태어난 노아의 모어는 일본어, 즉 제국의 언어이다. 재일동포 학자 윤건차는 노아와 같이 제국의 언어로 주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동포들의 심리상태를 ‘내면적 천황제’라고 부른다. 즉 천황을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를 내면화하여 그것을 이질적인 존재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기부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소설 속의 노아와 같이 일본인으로 패싱하는 삶을 선택하는 재일동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다음의 사진은 필자가 오사카 이쿠노구의 한 일본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이쿠노구는 선자가 처음에 정착했던 오사카 이카이노 지역을 말하며 여전히 일본 최대의 재일동포 집주지역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한 소학교에도 재학생의 반 이상이 재일동포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일본의 소학교에서는 칠월칠석날을 즈음해서 대나무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거는 풍습이 있다. 이것을 타나바타 마츠리라고 하는데 사진의 소원은 한 재일동포 학생 하나가 타나바타에 적은 소원으로 앞뒷면 가득히 “일본사람이 되고싶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나바타에 “일본사람이 되고싶다”는 소원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일본어와 함께 내면화된 일본적 가치체계에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재일동포들의 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재일동포들도 있기 때문에 재일동포들 모두가 노아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아와 같이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재일동포들의 삶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우리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어느 재일동포 운동가의 말처럼, 해방 후에도 일본내부의 식민지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아의 죽음 뒤에는 지속되는 식민지배가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사회와 정치의 우경화가 진행중인 오늘날의 일본사회 속에서

이 구조는 점차 노골적인 폭력으로 드러나곤 한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대표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다거나, 조선학교 유치원을 배제한 차별적인 유치원 보육원 지원정책 또한 지속되는 식민지배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7

이민진의 이 소설이 출판된 것은 2017년, 한국어판이 나온 것은 이듬해인 2018년이었으니 비교적 빨리 한국어로 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지 않은 시간동안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매끄럽게 번역해 낸 번역가의 노력과 실력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맛깔스러운 부산 사투리의 대사는 한국어 번역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으며 번역이 또 하나의 훌륭한 창작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카이노를 활보하는 경희”야 사소한 오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작과 달리 소설의 구성을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판 2권의 뒷표지에는 “역사가 망친 재일교포의 처절한 삶!”이라는 표현으로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소설적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번역에서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터무니없는 오독이 자랑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리라.

영어 원문에는 3부 구성으로 나뉘어져 각각 ‘고향’, ‘조국’, ‘파친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소설은 각 파트의 시작에 문학작품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다. 먼저 제1부 ‘고향’(1910 - 1933)에는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마틴 추즐릿의 생애와 모험]에서 “마법사의 말보다 강력한 말 고향”이라는 구절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제2부 ‘조국’(1939-1962)에서는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에서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도 조선 땅이고 조선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다”라는 구절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제 3부 ‘파친코’(1962-1989)에서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에서 그 유명한 “상상되어진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관한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의도는 명확하고 왜 이 소설의 제목이 파친코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디아스포라로서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고향’은 거기에서의 생생한 삶의 기억이 있기에 강력한 마법과 같은 노스탤지어의 대상이지만 이미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환영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제2부의 ‘조국’은 현해탄 너머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일본 내 정착을 상징한다. 이 시기에 재일동포들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그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배제와 배신의 역사를 경험한다. 제3부의 인용문인 [상상의 공동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재일동포들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던 재일동포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파친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자가 일본에 와서 낳은 두 아들 노아와 모자수(모세)의 이름들은 질식할 것 같은 식민지적 현실에서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상징한다. ‘국가’에 포섭되는 구별되고 고립된 구원을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는 실패했지만, 모세는 애굽을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이 미국에서 돌아와 결국 가업을 잇는 과정은 선자로 상징되는 재일동포들의 대서사시가 소설 속에서 일단락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진행중인 식민지적 지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말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 역사가 우리를 배반해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이삭은 일본경찰에 맞아 죽었고, 노아는 자살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저자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민진 작가가 재일동포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소설을 집필한 동기로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던 한 아이의 자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가 우리를 망친 것은 과거였지만, 그 사건은 저주처럼 오늘날도 재일동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1944년 6월 16일 마르크 블로흐는 프랑스의 리옹 북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독일군에게 총살당한다. 이유는 레지스탕스 활동이었다. 말 그대로 역사가 그를 심하게 망쳐놓은 셈이었다. 25명의 동료 레지스탕스 대원들도 그와 함께 처형당했는데, 그 중에는 16살짜리 소년 대원도 있었다. 소년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많이 아프겠죠?” 라며 울먹였다. 블로흐는 소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렴. 하나도 아프지 않단다. 금방 지나갈거야.”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다. 58세건 16세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한 번 뿐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죽음의 고통을 미리 알 수는 없는 법이다. 역사의 대상은 인간이어야 한다고 인간중심의 역사학을 주장했던 58세의 역사학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16살짜리 소년을 보았다. 그는 소년을 위로하는 데에 그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했고 그렇게 스스로 ‘역사’가 되었다.

소설 파친코에는 재일동포들 외에도 일본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등장한다. 부라쿠민, 빈곤과 이지메의 피해자, 동성애자, 매춘부, 장애인... 일본사회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는 그들의 삶은 소설 속 재일동포의 생활의 자기장 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간다. 스스로가 엄청난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면서도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

에서 역사의 피해자이면서 스스로 인간의 역사를 그려가는 재일동포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역사가 그들을 망쳐놓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많이 아팠지만, 결국은 괜찮았던 것이다.

---

## 통일 전망대

리뷰: 기획전시 <DMZ, 사람들>

●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전시의 장소는 특정한 의미를 표상한다. 주요 미술관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며,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 소장품과 전시기획으로 당대 미술의 양식과 사회문화사적 맥락을 시각화 시킨다. 사람들은 이 곳을 찾으며 감상, 비평의 형태를 통해 문화적 소양과 취향을 즐기며, 고급화된 취미와 취향을 즐긴다. 물론 커피 향과 아름다운 정원 등도 부록으로 뒤따른다.

<DMZ, 사람들>의 기획자 박계리는 이 전시를 기획한 이유를 “다시 삶의 이야기로 분단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평화나 통일은 추상적이고 개념적 단어가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졌다고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분단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DMZ의 접경지역의 통일촌, 해마루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전시의 주제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영토적 영향으로 인해 물리적 한계 속 생활과 삶의 비물질적 행위들이 부딪치는 곳의 일상이라는 부분에서 아마도 가장 이 시대의 분단을 참여하게 보여주는

곳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분단과 통일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기획의 토대 위에 세 작가는 하나의 큰 집을 짓고, 각각의 방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조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동시대,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정한 삶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주제적인 측면 외에도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공통점으로 묶여 지고 있다. 즉,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관람객들을 초대하여 이들의 참여 행위를 통해 비로소 작품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위에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전망대라는 그 장소에 의해 중층적인 의미 부여가 덧붙여진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세 작가의 작품들은 ‘그’ 곳의 사람들, ‘그’ 장소에서 선보임으로써, ‘그’ 의미의 깊이와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우선 이부록의 워바타(War+Avata)는 기존의 통일과 분단의 무거운 주제

도1. 이부록 <워바타\_DMZ Museum 2022>, 시트지, 가변크기, 2022



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복시키고 있는데, 이는 워바타의 모습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형상을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를테면 ‘줄라맨’이 형상에서 어떤 정보를 주지 않고, 그리는 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능’만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부록이 이 기호에 부여한 내용은 전쟁과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비극과 열망, 소망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이미지의 서사이자, 사람들의 희망 선언들이다.(도1) 화사한 색감과 기호처럼 새겨져 있는 이미지들은 이 거대하고 절절한 전쟁과 희생의 서사를 시각 이미지처럼 만들어 오히려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반어법적인 표현 방법은 이제 분단과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무게가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되어야 할 상황임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금기와 통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심지어 전시의 첫 작품으로 만나는 〈워바타\_스티커 프로젝트 2022〉는 관람객들이 핸드폰으로 죄수들의 증명사진을 찍는 방식을 차용하여, 초상 사진을 찍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일상 속에 현실 문제를 동참하게 하는 재기 발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성의 시각이미지에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담아내고, 거대담론을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되어 가벼운 동참으로 큰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은 가장 전복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리덕수와 임흥순의 작품들은 대화 구조처럼 엮어지는 전시 공간 배치를 통해 보다 중층적이고 무게 있는 이야기들이 시각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우선 리덕수 작가의 작품은 해마루촌, 통일촌을 거닐면서 맞닥뜨리는 풍경에 대한 시각화된 한편의 이미지와 공간의 시(詩)이다. 리덕수는 실제 부모님들이 실향민으로서 작가 자신이 한국 전쟁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실제 증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DMZ를 바라보고, 그 마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작가만의 감성과 이해로 풀어지고 있다. 그의 작품은 노스텔지어



221  
여러분, 우리가 떠났던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우리의 작품을 함께 가지고 가도



도2. 리덕수, <더 이상 내게 싸움이 남아있지 않다면>, 단채널 영상, 목재 구조물, 가변설치, 2022

와 남북의 공존,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희망이 함께 녹아있다. <더 이상 내게 싸움이 남아있지 않다면, 단채널 영상, 목재 구조물\_가변설치\_2022>(도2)에서는 마을의 구 출경동(남북출입사무소)의 폐자재들은 선택하여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만 했던 실향민의 모습을 함께 투영되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사색의 방’처럼 폐자재로 만든 문과 같은 구조물을 영상과 함께 설치하였는데, 이 의자에 앉는 순간 작가의 시선과 동화되어 마을을 산책하며 공간 그 너머를 열어가기를 기원하게 된다. 이때 의자의 모습은 마치 제 3자의 관람자처럼 앉아서 영상 속의 마을을 들여다 보며 우리는 관람자이자 작가가 제시하는 마을의 곳곳을 눈으로 동행하는 참여자가 된다. 또 작가는 <구르는 것이 돌 뿐이라, 목재구조물, 가변설치, 2022>에서도 폐자재를 새로운 사물로 재 창조해내었다. 철도로 표현된 이 작품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 등으로 이야기 되는 오래된 염원을 담은 진부한 클리셰를 감각적 설치 작품으로 되살려 내었다. 단절의 고독과 이 곳에서 연결될 희망을 동시에 전하며 작가는 역사를 되돌려 보고, 그를 통해 미래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색의 공간’은 임흥순의 작품들과 맞물려, 마치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흐르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다. 임흥순은 시인 백석의 ‘고야(古夜)’에서 영감을 받아, 같은 제목의 영상작품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도3) ‘고야’는 수능 모의고사에 등장하여, 청소년들이 모두 접하여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DMZ 인근 마을에서 살면서 몇 세대 동안 전쟁, 분단에 대한 특정화된 경험은 통제된 공간에 있는 자들만이 겪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서 만의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일반적인’ 삶으로 규정된 곳에서 사는 이들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힘든 많은 측면이 스며있다. 백석의 시가 지독한 함경도 지역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남(南)의 우리에게 같은 민족의 언어임에도 별도로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수능에 출제가 되고,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도 현재 한국의 아이러



도3. 임흥순, <고야>, 2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컬러, 41분, 2021 (상단 사진)

도4. 임흥순, 소풍, 통일촌 주민 윤석산 선생님의 유화 7작품과 윤석산, 이연희 선생님 구술(인터뷰녹취록)을 가천대학교 회화조소전공 학생들이 재해석하는 드로잉 프로젝트, 19명 21점, 2022 (하단 사진)

니한 상황이다. 작가는 이 곳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DMZ생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절이 아니라 소통의 언어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임흥순이 관람객들을 초대하는 방식은 앞의 두 작가들과 다르다. 실제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참여 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관람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작가는 〈소풍, 사운드, 회화, 사진, 드로잉, 아카이브\_2022〉(도4)에서 통일촌 주민, 대학생들을 실제 참여자로 초대하였다. 즉, 전쟁과 분단, 단절의 고통을 삶 속에 경험한 80대-90대의 거주민 윤석산, 이연희의 구술을 듣고, 이를 드로잉으로 재창작해 낸 20대 대학생들, 윤석산의 기억을 담은 회화 작품들, 작가가 마을에 거주하며 창작한 〈산책〉의 사진 등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분단과 통일이 개별화된 경험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삶에 대한 실재를 인지하고 공유하여, 세대와 지역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지향이 되기를 기원한 것이다. 참여자 방혜영 학생은 “전쟁의 경험을 상기하면 괴로우니 전쟁의 장면은 그리고 싶지 않다.”는 윤석산의 말을 기억하며 ‘평화가 약속된 현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경험’이라 고백하며, ‘나’에 심취되어 있을 시절, ‘타인의 것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가담했음을 고백한다. 김우섭 학생은 “간단한 드로잉이지만 구술을 읽어보고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을 찾기가 지 분단의 아픔이라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녹슨 단어가 점점 그 녹이 벗겨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통일이라는 큰 주제가 자신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과정 중,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참여하는 몸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람의 시선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2차 창작물의 다층적인 ‘결’들의 ‘결’에 서게 된다.

이 전시의 핵심 이미지는 임흥순의 〈소풍〉 프로젝트에 무심하게 걸려있는 이승복 어린이 동상 사진과 통일 전망대 꼭대기 층에 파노라마로 펼쳐진 아름

다운 풍경일 것이다. 상충되는 이 두 이미지 중 하나는 역사 속에서 끔찍한 비극들을 재생산해 온 냉전 이데올로기의 표상이었고, 또 하나는 분단의 현실을 평화로운 일상으로 외면하며 당연한 듯 감탄하며 바라보게 되는 무심한 아름다움이다.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지만, DMZ가 안보 관광된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과 북의 마을들이 동시에 시각적으로 인지된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 결국 도달하게 된 이 곳에서 묻게 된다. 통일 전망대에서는 무엇을 전망해야 하는가.



## 『평화와 통일』 제1집 2호 원고 모집

국립통일교육원은 연 2회(5월, 11월) 발간 학술지 『평화와 통일』(Th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학술논문을 엄선하여 실을 예정입니다. 특히, 『평화와 통일』은 이 주제들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상상력, 새로운 이해의 틀, 다양한 성찰들과 담론들을 나누고 융합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떠나 서로 관계 맺고 소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에 투고할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원고는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해야 하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입니다. 원고에는 논문 요약문(국문은 원고지 3매 내외, 영문은 200단어 내외)과 주제어(Keywords)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에는 학술논문과 함께 평화·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과 평가,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작품(책, 영화, 전시 등)에 대한 '리뷰' 등도 투고할 수 있습니다. '이슈'와 '리뷰'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입니다.

원고는 이메일 unicenter@unikorea.go.kr로 투고하고, 투고 마감일은 2022년 10월 10일(11월 30일 발간)입니다.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요건 중 '특정 기관 투고 비율 제한'과 관련하여 투고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평화와 통일』 담당자 앞
• 편집간사 연락처	전화) 02-901-7167 팩스) 02-901-7088 이메일) unicenter@unikorea.go.kr
• 원고 접수처	unicenter@unikorea.go.kr
• 투고 마감일	2022년 10월 10일(월)
• 발간 예정일	2022년 11월 30일(수)

# 평화와 통일

창간호 제집 1호

## 【특집기획】

-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한 제언 · 문정인 15
-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감대화 · 정병호 35

## 【일반논문】

- 1960년대 초반 서독정부의 대동독 교역정책 · 황규성 63
- 평화통일의식 측정도구 개발 · 박균열 103

## 【해외기고】

- 자본의 무의식으로서의 민족통일 · 박현욱 131
- 인간의 탈(脫)-분단 · 이타카기 류타(板垣 竜太) 149

## 【리뷰】

- 배반하는 역사 속에 피어난 사람의 역사 · 송기찬 163
- 통일 전망대 · 강수정 173